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백서 ● 2008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백서 · 2008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백서 ● 2008



통일부

『2008 통일백서』는 2007년 1년간의 대북정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책이 나오는 통계의 기준시점과 본문내용의 서술시점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2008 통일백서』를 비롯하여 1991년부터 발간된 통일백서들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통일부 자료실 ● 간행물자료)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백서 · 2008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발간사



황금돼지의 해였던 2007년 남북관계는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갔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결과 불신의 왜곡된 민족사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희망해왔던 많은 의미있는 진전들을 이루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조선협력단지 건설,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개성공단의 확대와 3통문제의 해결, 이산가족 상시상봉 등 많은 새로운 사업에 합의하고 또 착수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이 주도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은 통일노력 60년사에서 매우 귀중한 성과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과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56년 만에 이루어진 열차의 남북 정기운행, 백두산으로 가는 항공로의 개설,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열차운행 등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고 의미있는 합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공존공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은 남북관계에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16만 명의 인원이 남북을 넘나들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12배나 늘어났습니다. 1만 2천 번 가까이 남북선박이 경협외의 성과물을 싣고 남북을 오고 갔습니다. 매일 33척의 배가 왕래한 셈입니다. 남북교역액은 남북교역이 처음 이루어진 1989년의 100배에 가까운 18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2006년 북한 대외무역액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남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전 분야를 포괄하면서 체계화·정례화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총리회담과 각 분야별 장관급회담으로 이어지는 회담들이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양적으로도 55차례의 회담과 39건의 합의서 체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3년 첫 삼을 뜬 개성공단은 월생산액 2천만 달러, 월수출액 4백만 달러, 북측 근로자 2만 명의 남북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발판으로 남북 경제교류는 단순한 교역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의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제도적 발전을 뒷받침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분단과 대결시대의 아픔이던 전후 남북자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남북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소중한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국회에 보고되고 공고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하에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계 연구기관과 전문가는 물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30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007년은 이렇듯 남북관계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운 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 분단 60년, 통일노력 60년이 되는 2008년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8천만 한민족, 우리 모두가 해내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2008년 통일백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통일노력에 대한 가감없는 기록입니다. 이번 통일백서의 발간이 남북관계의 오늘을 되짚어보고 평화롭고 희망찬 민족의 내일을 설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2월

통일부장관 이 재 건

발간사

제1장 평화변영정책

제1절 정책 추진환경	15
제2절 목표와 전략	18
1. 정책 추진배경	18
2. 목표 및 추진원칙	19
3. 추진전략	21
제3절 주요 성과	24
1.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진행	24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28
3.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	30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	31
5. 남북관계의 제도화	33

제2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42
1. 개최 배경	42
2. 사전 준비	43
3. 회담 경과	46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51
제2절 남북정상회담 이전	55

1. 남북장관급회담	55
2. 군사분야 회담	59
3. 경제분야 회담	63
4. 사회문화분야 회담	72
5. 인도분야 회담	76

제3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1. 남북총리회담	79
2. 군사분야 회담	84
3. 경제분야 회담	89
4. 사회문화분야 회담	106
5. 인도분야 회담	107

제3장 남북경제협력

제1절 남북교역

1. 교역일반	116
2. 위탁가공교역	120

제2절 개성공단사업

1. 1단계(330만㎡) 개발 완료	124
2. 개성공단 지원 법·제도 정비	131
3. 기업 투자 환경	137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1. 남북연결 철도·도로 사업	144
2. 해운 및 항공협력	149
3. 육로 출입시설 및 통행체계	151

제4절 남북관광협력	156
1. 금강산 관광	156
2. 개성 관광	158
3. 백두산 관광	159
제5절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159
1. 추진경위	159
2. 추진현황	161
제6절 기타 남북경협	162
1. 조선업 협력	162
2. 수산업 협력	164
3. 농업 협력	165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66
5.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	167

제4장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제1절 남북공동행사	179
1. 6.15 공동행사	179
2. 직능별 공동행사	181
제2절 문화예술 교류	184
제3절 역사·학술 교류	186
제4절 체육교류	190
제5절 종교교류	192
제6절 지방자치단체 교류	195

제5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205
1. 이산가족 상봉행사	207
2. 화상상봉	208
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209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211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212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214
제3절 인도적 지원	216
1. 비료지원	217
2. 식량차관	219
3. 수해 등 긴급구호지원	220
4. 취약계층 지원	222
5. 민간의 자원활동	222
6.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25
제4절 새터민 정착지원	228
1. 사회적응교육	229
2. 정착지원	231
제5절 북한인권문제	239

제6장 남북관계 발전기반 확충

제1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248
--------------------------	-----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기본계획	250
제3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254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256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256
2.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57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260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261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262

제7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1절 통일교육	271
1. 통일교육 추진현황	273
2.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279
3.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80
제2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285
제3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288
제4절 통일정책 홍보	292
제5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296
제6절 통일업무 혁신	298

|부록|

I. 2007 남북관계 주요 일지	304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311
1. 남북 인적·물적왕래 현황	
2. 남북 교역 현황	
3.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4. 대북지원 현황	
5. 이산가족 교류 현황	
6. 새터민 관련 현황	
7. 남북회담 개최 현황	
III. 2007 남북관계 주요 합의서	322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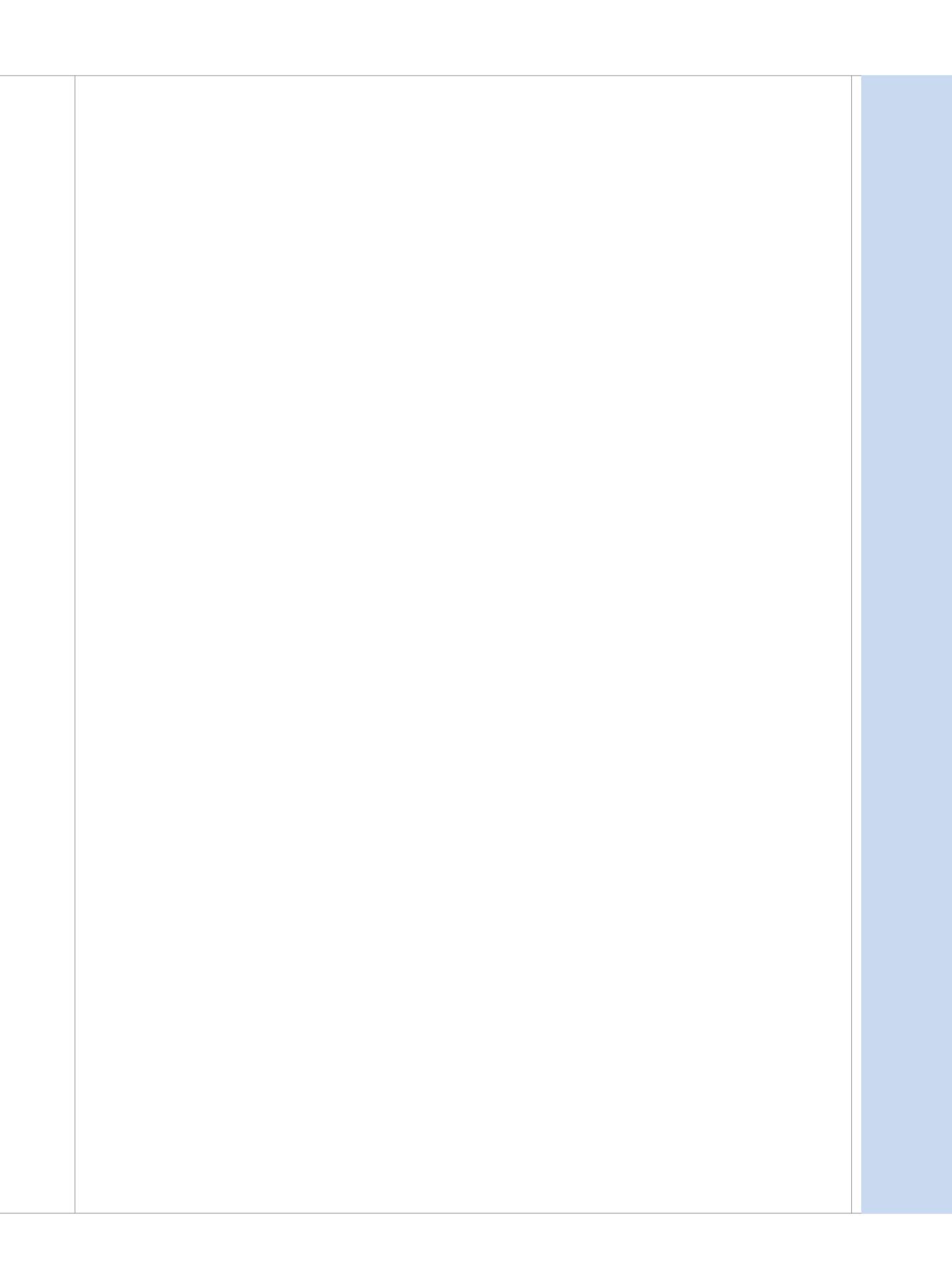


제1장 평화번영정책

제1절 정책 추진환경

제2절 목표와 전략

제3절 주요 성과



제1장

평화번영정책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룩해 놓은 통일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제정세 및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공동체 수립을 전망하면서 통일정책을 수립·전개해 나갔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은 북한 핵시설의 폐쇄·봉인, 불능화 등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그간의 남북한 화해협력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제1절 정책 추진환경

전세계적 냉전체제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불안정

하다. 동북아는 유럽, 북미주와 함께 세계 3대 지역경제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간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역내 국가들간의 군비 증강 등 불안 요인을 안고 있으며, 영토,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남북간 신뢰증진과 화해협력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냉전체제의 잔재와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평화와 경제의 균형적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공동의 번영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당면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관계 발전을 한 차원 높게 도약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2002년 10월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최대 안보현안으로 대두된 북핵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국들간에 큰 틀의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BDA 문제로 인해 실질적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간 불신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국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노력이 지속되고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접근이 병행되면서 북핵문제는 실질적인 해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1개월 만에 북미 직접대화가 이루어지고 2007년에는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불능화 및 핵신고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조치들이 합의되어 6자회담 참가국간의 협조 속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폐기와 함께 북한과 관련국간의 다양한 안보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리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들어서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경공업과 기간산업의 개건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실리 중심의 경제정책과 남북관계를 통한 대외 접촉과 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 내에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사회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교양 사업을 강조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로의 회귀보다는 실리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이 확대·발전하면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남북관계는 3대 경협사업과 인도적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다가 2007년 「2.13 합의」를 기점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선순환적 발전은 2007년 2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속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세계적 냉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역내국간 냉전적 대립의 잔재를 안고 있는 동북아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 틀과 북핵문제 해결을 담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 역내국간 안보·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북한과 관련국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은 북한 핵폐기를 넘어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동북아 역내국간 안보·

경제협력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제2절 목표와 전략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개 념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상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평화증진 ○ 남북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해결(단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중기) ○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중장기)

1. 정책 추진배경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이다. 평화번영정책은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어 온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높아진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이 배경이 되었다. 지난 1960~70년대의 경제성장, 1980년대의 민주화, 1990년대의 국제화와 정보화, 그리고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및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역량은 신장되고 국민적 자신감도 높아져 왔다. 이처럼 높아진 우리의 국가위상과 국민적 자신감은 평화변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 공간을 확대하는 평화변영 정책 추진의 기본토대가 되었다.

둘째, 지난 정부가 이룩한 통일·대북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사이에 화해협력의 가속화되어 왔고, 북한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특구 확대,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 등 제한적이나마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노력이 지속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셋째, 동북아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자 국제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추진 시야를 남북관계에서 동북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 10월 이후 심각한 안보현안으로 다시 대두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차원을 넘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도 함께 고려하고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병행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목표 및 추진원칙

이러한 정세환경 속에서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 평화 증진’ 과 ‘남북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반도 평화 증진’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을 해결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간 실질협력을 증진시키면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은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항구적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남북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 모두의 이익을 창출·확대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북경제공동체가 건설되면 한반도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연결하고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평화번영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등 4가지 추진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갈등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로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나 무력사용도 배제되어야 하며, 모든 갈등은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이다. 이는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지역은 상이한 문화와 정치·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남북은 분단 반세기에 걸친 불신과 반목의 대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하되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로서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해 나가면서 주변국가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때, 보다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의 원칙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결여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3. 추진전략

참여정부는 평화변영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평화변영정책의 추진과 그 결실을 위해서는 우선 최대 안보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수적이다. 북한 핵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 과정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북한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 등 핵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50년 이상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남북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토대로 남북간 정치·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평화협정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관리를 위한 조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동안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 이전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확고히 준수해 나가는 한편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을 양대 축으로 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평화번영정책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반도 차원과 동북아 차원의 상호 선순환적 접근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중장기적 전략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지닌 지경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안보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의 경제성장은 물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도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과정에 북한이 참여하게 된다면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데 유리한 구도가 마련될 것이다.

평화변영정책은 역대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평화변영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구해 온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 등의 대북정책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즉 평화변영정책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사실상의 통일’ (de facto unification) 상태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7·4 남북공동성명」(’72.7.4),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92.2.19), 「6·15 남북공동선언」(’00.6.15)등 기존의 남북간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변영정책은 기존 대북정책에 비해 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정책의 외연이 확대되고, 경제와 안보분야의 균형적 진전을 중시하고 있다. 과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화변영정책은 남북관계를 넘어 동북아 지역까지 정책 시야를 확대했을 뿐 아니라 군사안보분야의 진전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조화를 중시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정책 시야를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정책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통치행위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대북정책을 국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과거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보다 성숙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협력의 심화·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한다는 남북협력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갈등의 장이었던 한반도를 지역 평화의 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할 수 있다.

제3절 주요 성과

1.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진행

2002년 10월 다시 대두된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및 전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으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3원칙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정부는 6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과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는 상호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따라 양자를 병행시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우리와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출범 당시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북핵문제는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리고 2007년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북한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2002년 북핵문제가 다시 대두된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4월 미국, 중국, 북한이 참가한 3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

다. 그러나 이 시기의 6자회담은 북핵상황과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는 기여하였으나,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주장 및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다. 북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200만kW의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2005년 6월 「6·15 공동행사」 계기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6.17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1년 여 동안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이루어내어,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최초 합의인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긍정적인 정세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핵문제 대두 이후 2007년 5월까지 총 12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부는 북한에게 핵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태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의혹 및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가 부각되면서 6자회담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BDA(Banco Delta Asia)를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2005년 11월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에서 BDA 문제해결 이전에는 핵폐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와 관련국들은 핵문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BDA 문제를 중심으로 북·미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6자회담 재개가 장기간 지연되었다. 이러한 교착상황 속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대포동 1기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북한이 요구한 쌀 50만톤 제공문제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였다.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실시 계획을 시사하고, 뒤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부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핵 불용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처하였다. 유엔은 재차 안보리를 소집하여, 핵·미사일·여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기술 및 자산의 거래와 이전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2006년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 정부는 14개 관련 부처가 참가하는 대책팀을 구성하여 부처간 대응조치를 조율하고 국회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안보리 결의 이행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2006년 11월 13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 대응조치를 취했다.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정부가 취했던 당국 차원의 쌀과 추가 비료 지원 유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의 금강산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범위도 변화된 정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긴장국면으로 치달던 북핵문제는 미국 부시행정부가 2006년 11월 중간선

거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임으로써 돌파구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1월 말 북미 양자접촉이 이루어지고, 12월 베이징에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재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과 비핵화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베를린 회담을 거쳐, 2007년 2월 13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비핵화 이행 초기단계 조치를 담고 있는 「2.13 합의」를 도출하였다. 「2.13 합의」는 ① 북한은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 ② 다른 5개국은 중유 5만톤 상당의 대북 에너지 지원, ③ 북·미, 북·일간 관계 정상화 대화 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국간에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협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5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는 모든 핵계획의 완전 신고 및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기간 중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북한과 미국은 자국이 취할 조치를 이행해 나갔고 6자회담 모든 참여국들은 실무그룹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2.13 합의」이행을 위한 선도적 조치로서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조속한 제공으로 합의 이행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북한이 폐쇄·봉인 조치를 지연시킴에 따라 중유지원이 연기되고 「2.13 합의」이행이 6개월간 지체되면서 북·미간 책임공방이 계속되었다.

이후 관계국의 협조를 통해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의 송금이 완료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중유 제공시점에 맞추어 5개 핵시설 (5MWe원자로, 50MWe원자로, 200MWe 원자로,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에 대한 폐쇄·봉인 조치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2002년 핵문제 대두 이후 위기로 치닫았던 북핵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3 합의」 이후 다음 단계 비핵화 진전을 위해 6자회담 실무그룹을 중심

으로 구체적 조치 및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2007년 10월 3일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통해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가 발표되었다.

「10.3 합의」는 「2.13 합의」이행의 연장선 상에서 취해진 것으로서 2단계 비핵화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은 ① 연내 모든 현존 핵시설의 불능화, ②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③ 핵 비확산 공약 재확인 등을 천명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6자회담 참가국들은 ① 북·미 관계정상화, ② 북·일 관계정상화 노력, ③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과정 개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종료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11월 이후 북한은 영변의 5MWe 원자로와 핵재처리시설, 핵연료공장 등 3개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을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조 하에 진행 중이다.

2.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역점 과제로 추진해왔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래의 한반도 안보질서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함께 남북간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심화·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우선, 6자회담 과정에서 정부는 한반도에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직접 관련당사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

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및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직접 관련당사국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2006년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 정상 간에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04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수단 제거 및 선전활동 중지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합의·이행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본격 논의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진전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을 통해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해상지역에서 평화와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또한 남북 군사 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

참여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남북경협사업을 확대·진전시켜 새로운 발전단계로 올려놓았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 만에 용수, 전력,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을 준공하는 등 1단계 개발(330만㎡)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기업 29개를 포함하여 총 65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북한측 근로자 2만 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2억 7,342만 달러에 달한다.

금강산 관광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2007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2007년 말까지의 누적 관광객이 170만명을 넘어섰다.

2005년 12월 궤도부설공사 완공에도 불구하고 개통이 지연되던 남북연결 철도는 2007년 5월 17일 시험운행을 실시하여 56년 만에 남북간 열차 운영을 재개하였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남북간 열차의 정기운행이 실현되었다. 이로써 2004년 12월부터 정상 운행하여 2007년 1일 평균 1,529명의 인원과 290대의 차량이 왕래하고 있는 남북연결도로와 함께, 철도도 남북을 연결하는 육상 물류 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측은 상업적 거래방식으로 섬유·신발·비누 제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약 7000만 달러 분(전체 8,000만 달러)을 북한측에 차관형식으로 제공했고 북한측은 이를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우선 2007년 중 상환하기로 한 240만 달러 상당의 대가를 아연피 약 1,000톤으로 상환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에 힘입어 2007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7년에는 남북 왕래인원은 약 16만 명, 남북 교역

액은 약 1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남북간 선박왕래도 편도기준으로 11,891회를 기록하는 등 수송장비의 왕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7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해주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문산-봉동 화물 열차 운행 등과 같이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합의·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 환경개선을 확대하였다.

4.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산가족 교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면상봉 외에 9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2005년 8월부터 화상상봉을 실시하여 왔다. 2007년 6월에는 기존 화상상봉자 중 100명이 화상 재상봉을 하였다. 2008년부터는 제9차 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미 상봉한 자의 재교류 방식으로 영상편지 시범교환이 분기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되었던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공사는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8개월 만인 2007년 3월 재개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남·북 양측의 면회사무소 준공식이 진행되었고, 면회소 건물은 200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 채널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대북협상의 의제로 제기하였다. 2007년도에도 정상회담, 총리회담, 제20~21차 장관급회담, 제8~9차 적십자회담 등 총 6차례의 회담에서 동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남북간의 근

본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기존의 이산가족 상봉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포함시키는 등의 부분적 성과에 그쳤다.

이러한 남북대화 차원에서의 해결노력과 함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적 노력도 경주하였다. 480명으로 추정되는 전후 납북자의 가족과 귀환 납북자의 지원을 위해 2006년 10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어 2007년 4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고, 10월에는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법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와 통일부 소속의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설치되었다. 정부는 전후 납북자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함에 따라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1995년 15만톤의 쌀 지원으로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그 규모와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도에는 비료 30만 톤, 쌀 차관 40만 톤을 지원하였고,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 및 복구용 자재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성홍열, 산림병해충 방제, 구제역 방제 등 지원분야를 다양화하였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미래 한반도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2005년도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더불어 북한 영·유아의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와 WHO(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매년 100억원 내외 규모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병행하여 2007년부터 한국제이티에스(JTS),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이 주관하는 민간의 5개 컨소시엄(총 18개 단체 참여)을 통해 영·유아 지원사업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민간단체의 주요사업은 남포산원, 남포소아병동,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남포시 인근지역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개선 사업 등이다.

5. 남북관계의 제도화

정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남북관계 발전 과정을 법치행정의 영역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5년 8월까지 남북경협과 관련한 13개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2005년에는 중장기 대북정책 추진, 남북회담 대표 임명·관리, 남북합의서 발효절차 등을 담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2007년 11월 국회에 보고하였다. 2007년 8월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관련부처, 국회 및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협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등이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하에 운영되고 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 집행에 앞서 국회에 사전보고토록 한 것도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남북관계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있어서도 이를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우선 경협 분야에서 2005년 10월 개성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당국간 경협 협의를 상시화하고 민간부분의 남북 교역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분야에서는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사무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

련하였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도 「2007 남북정상선언」을 통해 그간의 남북관계 발전상황에 맞추어 남북회담 틀을 재정비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중심으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으로 분야별 회담 틀을 정립하고, 산하에 각 사업별로 12개 분과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남북관계 제도화 노력은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추진해 나가고, 또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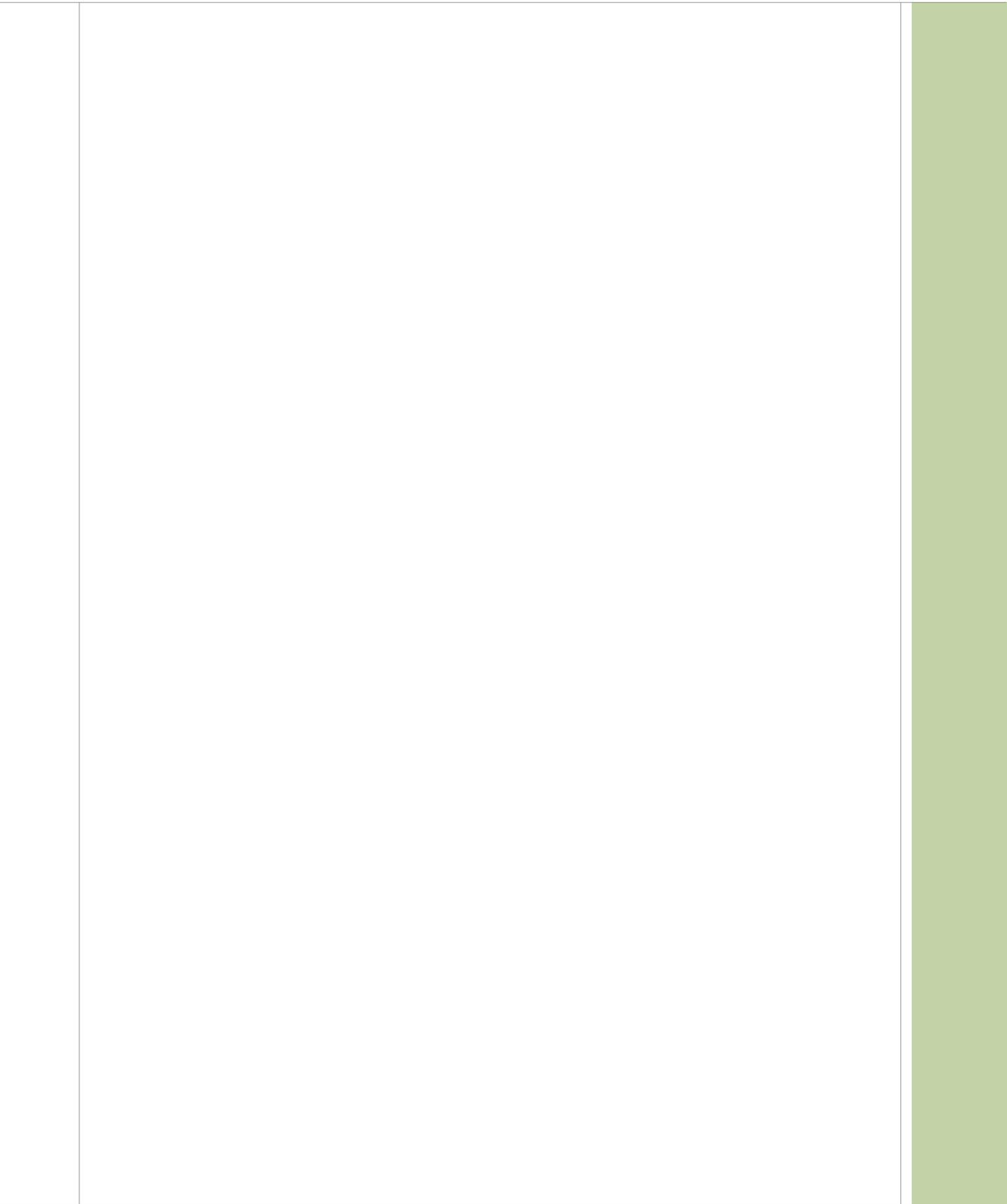


제2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제1절 남북정상회담

제2절 남북정상회담 이전

제3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2장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2007년 한 해 동안 남북대화는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총 55회 개최되었다. 정치회담 13회, 군사회담 11회, 경제회담 22회, 인도회담 3회, 사회·문화회담 6회 등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

상반기에는 북한의 핵실험('06.10)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 타개에 목표를 두고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07.2.27~3.2)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의 백화원 초대소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을 채택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였다. 또한 남북총리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중심협의체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총리회담」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는 남북간 협의의제의 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2.15)을 시작으로 7개월간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고, 그 이후 개최된 제20차 및 제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촉구, 경협사업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추진방향과 과제가 제시되었고 남북총리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00.9.25~26, 제주) 이후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되었고,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군사실무 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경제분야에서는 「2007 남북정상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포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선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가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도로, 조선 및 해운협력 등 8개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는 두 차례의 남북직접접촉 및 실무접촉을 통해 이산가족상봉 확대실시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문제해결에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백두산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남북응원단의 2008 베이징 올림픽 참가 등에 합의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 회담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특히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과학기술·체육 등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친 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도 남북회담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 횟수	
정치분야 (13건)	2007 남북정상회담	1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관련 남북특사접촉(제1차~2차)	2	
	200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1	
	2007 남북정상회담관련 분야별 실무접촉(제1차~2차)	2	
	남북총리회담(제1차)	1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제1차~3차)	3	
	남북장관급회담(제20차~21차)	2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1	
군사분야 (11건)	남북국방장관회담(제2차)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7차)	3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35차)	7	
경제분야 (22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제13차)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제5차)	1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제1차~2차)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제2차~3차)	2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의(제1차~2차)	2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제3차)	1	
	중유 5만 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제1차)	1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	1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제1차)	1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제1차)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제1차)	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	1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실무접촉(제1차)	1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제1차~2차)	2	
	금강산관광 활성화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제1차)	1	
	사회문화분야 (6건)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제4차)	1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남북실무접촉(제4차)	1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 실무접촉		1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		1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1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1	
인도분야(3건)	남북적십자회담(제8차~9차)	2	
	남북적십자실무접촉(제6차)	1	
합 계		55	

제1절 남북정상회담

1. 개최 배경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며 북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에 들어서거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해 왔다.

2006년 10월 북핵실험과 UN 안보리 제재조치로 냉각된 북미관계가 2007년 「2.13 합의」를 계기로 실천적 해결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BDA 북한계좌의 동결을 해제('07.4.10)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한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도 가동하였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여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IAEA 사찰단의 감시를 재개('07.7.14)함으로써 6자 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대립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07.2.27~3.2)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틀 속에서 제한된 경제·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한정되어 군사분야에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간의 만남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정세인식을 배경으로 정부는 2007년 7월 초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의 고위

급 접촉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7월 29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국가정보원장이 비공개로 방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비공개 방북하여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1차 방북시(8.2~3) 북한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중대제안 형식으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고 있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김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였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8월 3일 서울 귀환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였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재차 방북(8.4~5)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수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

8월 5일 남북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대해 합의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통일전선부장 명의로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2. 사전 준비

2007년 8월 8일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켜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회담 준비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10회, 「준비기획단」 회의는 11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협력 하에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서 쌍방이 합의한 대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실무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4일 개성에서 남북 차관급 대표가 만나 정상회담 준비접촉과 의전·경호·통신·보도 분야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최승철(통일전선부 부부장)
대표	김웅희(통일부 국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국장) 리 현(아태평화위 참사)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정상회담 준비에 따른 대표단 규모, 왕래절차, 체류일정 등 제반 절차문제들을 합의하였다.

준비접촉 주요 합의내용

- 대표단 규모: 수행원 150명, 취재기자 50명 등 총 200명
- 회담의제: 8.5 남북합의서에 기초하여 의제 설정
- 체류일정: 참관 등 구체적인 체류일정은 마련되는 대로 북측이 전달
- 왕래절차: 평양방문과 서울 귀환시 서해선 도로(개성 경유) 이용
 - ※ 대통령은 전용차량으로 방북(행사기간 내내 사용, 경호차량 수행)
- 선발대 파견: 35명, 대표단 방북 7일전 파견
- 편의보장·신변보장: 북측은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취재활동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 제공

준비접촉 기간 중에 대통령 의전과 경호, 통신, 보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자간 접촉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 의전분야는 대통령 방북에 따른 일정과 행사별 동선, 의전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였고, 경호분야는 차량 행렬과 숙소 및 행사장 경호, 비상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통신 분야는 서울-

평양간 직통전화 및 숙소 내 통신망·무선통신망 구성 등 통신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보도 분야는 생중계 방안, 행사장별 보도계획, 취재편의보장 내용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되었다. 8월 7일부터 18일까지 북한 지역내 집중호우가 내려 사망·실종 등 600여 명, 주택 파손 24만 세대, 이재민 100만여 명, 농경지 침수 20만여 정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8월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심각한 수해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을 부득이하게 10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8월 20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요청을 수용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10월 2일에서 4일까지 개최하기로 북한에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된 일정에 맞게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의전·경호·통신·보도에 따르는 절차문제들을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회담준비를 병행해 나갔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선발대 파견은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선발대는 9월 18일에서 21일까지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인원 35명이 방북하였다. 1차 선발대의 임무는 그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협의해 온 사항들을 타결짓고 숙소와 회담장, 행사장, 오만찬장, 참관지 등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였다. 9월 27일부터는 윤정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34명의 2차 선발대가 파견되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뒷받침하였으며, 회담종료 후 최종정리를 하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후속조치 이행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 및 일반국민, 정치권 인사, 시민단체, 기업인, 국책연구기관장, 외교사절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약 80여 차례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각계 각층의 대북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회담준비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정상회담에

서 다루어야 할 의제, 회담진행시 유의점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되어 회담전략 수립에 반영되었다.

또한, 통일부는 홈페이지에 「2007 남북정상회담」 코너를 설치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정상회담 후에는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이 직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2007 정상회담 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제사회에도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뉴욕·LA·샌프란시스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일본 동경지역에 특별수행원을 파견하여 현지 의회인사·전문가·교민 등을 상대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다.

3. 회담 경과

남북정상회담의 방북단은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하여 수행원 150명(공식수행원 13명, 특별수행원 49명, 일반수행원 88명), 기자단 50명, 지원인원 100명 등 총 300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표단은 10월 2일 아침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하였다.

【첫째날(10.2)】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아침 8시 45분 청와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입장 등을 밝히는 대국민 인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이 행사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분단 이후 54년

만에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를 출발한 지 1시간여 만에 군사분계선 30m 앞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였다.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대통령은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사분계선 북쪽에서는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을 비롯하여 이상관 황해북도 인민위원장, 김일근 개성시 인민위원장 등이 우리의 대통령 일행을 영접하였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여 만에 평양에 도착한 대통령 일행은 첫 번째 환영식장인 인민문화궁전 앞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오픈카를 타고 4.25 문화회관으로 향했고, 두 번째 환영식장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만찬사를 통해 “북남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이자 우리 민족 성원 모두의 숭고한 사명” 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답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함께 번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 고 응답하였다.



남북 정상간의 첫 만남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남북 정상

【 둘째날(10.3)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전 9시30분 경 백화원 영빈관에서 소수의 배석자만 참석한 단독회담 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우리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청와대 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배석하였다. 북한측에서는 김양진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들은 정치, 대기업, 업종별, 사회단체·언론, 문화·예술·학계, 종교, 여성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북한측 관계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치분야 간담회(만수대의사당)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우리측 6명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하여 남북 국회회담 정례화 및 남북 정당간 교류 등을 논의하였다.

대기업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우리측 6명, 한봉춘 내각 차관 등 북한측 6명이 참석하여 남북경협의 방향 및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업종별 대표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김기문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 등 우리측 12명,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 등 북한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환경 조성,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개성공단 활성화, 수산협력 등 제반 산업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단체·언론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우리측 7명, 안경호 6.15 북측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산가족문제 해결 방안,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남북간 언론교류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학계 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서는 이세웅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 우리측 10명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 등 북한측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한 대화 창구 단일화, 개성지역 내 문화단지 조성 등이 논의되었다.



백화원 영빈관 기념 촬영

종교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우리측은 지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원장 등 4명이, 북한측은 유영선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종교시설 방문 등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분야 간담회(인민문화궁전)에는 우리측은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 3명이, 북한측은 김경옥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여성계 협력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측 대표단 및 지원인원은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였다. 이어 10시부터 12시 25분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된 우리측 주최 답례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를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6.15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입각하여 역사의 기회와 민족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날(10.4) 】

노무현 대통령은 남포시에 위치한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다목적 방조제인 남포 서해갑문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후 1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등 8개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에 합의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2007 남북정상 선언문 서명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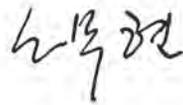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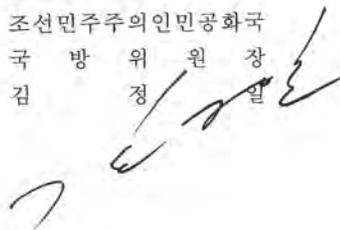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남북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 환송행사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러 현지의 공단 관계자들과 북한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오후 9시경에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여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남북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4일 8개항으로 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였다.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

-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
 -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
 -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 강구

-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 상호 내정 불간섭과 제반 문제를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통일지향적으로 정비
 - 남북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
-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서해평화협력방안과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협의를 위해 11월 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추진을 위해 협력
 - 「9.19 공동성명」, 「2.13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
- 남북 경험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우대조건과 특혜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단 1단계 조속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 분야 등 협력
 -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및 백두산 관광 실시,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 남북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
 - 금강산면회소에 쌍방 대표 상주 및 이산가족 상시 상봉 진행
 -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적극 협력
-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협력 강화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총리회담 개최(11월 중, 서울)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 협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한 선언적 성격이었다면, 「2007 남북정상선언」은 정치·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40여 개의 의제를 담고 있으며 그 의의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은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안이다. 해주지역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개발,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한강하구 공동 이용, 북한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 서해지역에 포괄적인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평화번영벨트를 만들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간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양 정상은 남북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협력을 명문화하였으며, 2000년 한 차례 개최된 후 중단되었던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재개에도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시에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으로 의제가 한정되었던 데 비해, 이번 정상선언에서는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임무를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로 포괄 규정하였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이는 그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6자회담과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선순환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또한 양 정상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관련 당사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그간 관계국과 논의하여 온 종전선언을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평화체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의 위상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셋째,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분야 합의는 크게 남북경협의 장애를

해소하여 경협을 추진환경을 개선하고, 기존의 경협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가운데, 신규사업을 통해 경협의 동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통행·통신·통관 등 개성공단 3통 문제를 비롯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며, 각종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명문화하고, 앞으로 남북경협 추진에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추진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660만㎡ 규모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봉동간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을 개시하기로 하는 등 기존 남북경협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해주지역의 경제특구 건설,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북한내 철도·도로 개보수와 공동이용,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신규 경협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외연을 확대하고 장기적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넷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되어 온 남북대화 총괄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간 협의 틀을 마련하였다.

제62차 유엔총회는 11월 1일 「2007 남북정상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전 및 통일’에 대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는 유엔총회가 「2007 남북정상선언」을 환영·지지하며, 충실한 이행을 남북한에 권고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도록 남북간 대화, 화해 및 통일을 위한 과정에 있어 회원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외 최승철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원동연 아태평화위원회 실장 등 일행 7명이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협의하며 남북협력사업 분야의 현장 시찰을 목적으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측을 공식방문하였다.

양측은 남북협약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이 남북관계 발전의 확고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정상선언의 신속·원활한 이행과 함께, 핵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등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진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 이전

1. 남북장관급회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당국간의 대화채널로 개설된 남북장관급회담은 총 21회 개최되었는데 참여정부 기간 중에만 12회(제10차~제21차)가 개최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중 심협의체로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6자회담이 남북장관급회담 일정과 맞물리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았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7년 2월 6자회담을 통해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연이어 2월 15일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접촉이 성사됨으로써 중단된 남북대화가 복원되었다. 이후 제20차, 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북한 핵문제 해결 촉구, 남북경협사업의 활성화, 인도주의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면회소 착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가.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우리측이 2007년 2월 12일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하자,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2월 15일 개성에서 실무대표접촉이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표	유형호(통일부 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중단상태인 당국간 대화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 상호신뢰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국면을 6.15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나.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하고 「2.13 합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인도적 사업의 신속한 재개, 2007년 상반기 중 열차시험은행 실시 및 연내 개통,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 및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등을 제의하였다. 특히 남북의 철도개통이 남북 공동번영의 물적 토대가 되는 만큼 북한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한강하구 골재

채취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 정기항로 운항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세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따라 민족공조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쌍방 당국이 민족대단합 실현에 앞장서며 다방면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장애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의 개최, 상반기 내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간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
2.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
3.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4.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이산가족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협력
 - 제5차 화상상봉: 3월 27일~29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5월 초순 금강산에서 실시
 -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3월 9일(금강산)
 -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4월 10일~12일(금강산),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해결
5.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4월 18일~21일(평양)
 -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 실시
 - 경추위 위원접촉 진행: 3월 14일~15일(개성)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6.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2007년 5월 29일~6월 1일(서울)

다.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우리측은 국방장관회담 개최, 개성공단 활성화, 철도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편, 「2.13 합의」 이행의 중요성과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고, 진행중인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와 이미 합의된 여러 협력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여 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민족우선·민족중시 원칙의 견지, 국가보안법·합동군사훈련 등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중지, 3대 장벽 철폐 등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동 인식

- 2.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
- 3.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하기로 합의

2. 군사분야 회담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는 2004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시작으로 6회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과 16회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2006년 10월 핵실험 등으로 남북간 군사회담은 2006년 5월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이 넘도록 개최되지 못하다가, 2007년 2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자 군사회담도 재개되었다.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제5차~제6차)

(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 평양)에서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관리구역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논의하자고 수정·제의해왔다. 이에 우리측이 동의하여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승조 (국방부 소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 (국방부 대령) 길강섭 (국방부 대령) 김왕경 (국방부 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	박림수 (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 (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 (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및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에 대한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서해 해상경계선,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 허용 문제, 제주해협 통과문제, 북한지역에 살포된 전단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군사적 충돌방지문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의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위해 서해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문제 지속 협의
 - 서해 평화정착 및 공영·공리 도모의 원칙에서 공동어로 실현
 - 서해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관련 지속 협의
 - 서해상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 데 따라 해주항 직항로 통행문제 협의
- 남북 경제협력·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5.17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협의 지속
 -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등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및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7월 중 개최

(2)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승조 (국방부 소장)	김영철 (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 (국방부 대령) 길강섭 (국방부 대령) 김왕경 (국방부 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	박림수 (인민무력부 대좌) 김응철 (인민무력부 상좌) 리선권 (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문제와 관련하여 함대사간 직통전화 설치, 함정간 정기시험통신 실시 등 실질적 조치들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동일면적·동일거리의 수역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운영하고, 서해해상에서의 평화가 정착되는 데 따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완전 통행의 군사적 보장문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사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문제를 조속히 타결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은 수용할 수 없고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설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문제는 이미 남한측 선박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으므로 남북간 해운협력 차원에서 즉각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간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이 종료되었다.

나. 남북군사실무회담(제29차~제31차)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한 서해해상 충돌방지문제, 공동어로 구역설정문제,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3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정진섭(합참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전창재(인민무력부 상좌)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6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철도·도로의 완전개통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할 것과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과 한강하구 골재 채취 관련 군사적 보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남북 어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제3국 어선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넓은 수역에 걸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비무장수역으로 하자는 등 서해 해상 경계선 재설정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7월 10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제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된 문제 중심으로 협의할 것과 상대방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하며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는 실용적인 자세로 회담을 운영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은 방송, 뼈라 살포, 서해함대의 영해선 침범행위 등을 통해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와 관련 단체 해산·처벌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2007년 7월 1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는 현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과 병행하여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과 관련하여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5개 수역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우리측이 5개 수역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NLL 이남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방안에 대한 쌍방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였다.

3. 경제분야 회담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까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가 9차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성공단실무접촉 등 총 57회의 경제회담이 개최되어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도로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5년 7월 개최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계기로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수산업·경공업·광업 등 경협사업의 범위가 산업의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2005년 8월까지 경협 관련 13개 합의서가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되었고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및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위원급 실무접촉이 2007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대표	고경빈(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방강수(민경협 국장) 량기건, 리영호(민경협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한 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가 발효되면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우선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부터 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우리측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수석대표 접촉 등을 진행하면서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문 없이 회담이 종료되었다.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실시일정부터 확정해야 하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와 함께 병행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함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진동수(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대표	홍재형(통일부 상근회담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오정규(산업자원부 무역투자진흥관)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성길영(통일부 국장)	조현주(민경협 실장) 방강수(민경협 국장) 리영호(민경협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이에 대해 북한측은 식량차관 제공 문제부터 우선 합의하자며, 우리측이 제기한 열차시험운행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입장을 바꿔 열차시험운행 직후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경공업 원자재는 6월 말부터 제공한다는데 합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회의

합의문 요지

1. 5.17 열차시험운영,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제13차 철도·도로 실무접촉 개최(4.27~28)
2.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현지공동조사 실시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 이를 위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5.2~4)
3. 5월 중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개최
4. 제3국 공동진출 관련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
5. 5월초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
6. 한강하구 골재채취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실무접촉을 개최, 추진
7. 자연재해방지,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
8.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견지에서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 지역에서 개최

나.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제1차~제2차)

2007년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2차례(4.27~28, 5.13)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량기건(민경협 부국장)

우리측은 1차 접촉(4.27~28)에서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절차문제를 타결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나, 북한측이 군사적 보장조치 이후에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군사보장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5월 13일 추가접촉을 진행하였다.

5월 11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자 5월 13일 2차 접촉에서 쌍방은 참석자 규모, 기자단 취재협조문제 등 쟁점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은 승차인원 규모를 우리측 100명, 북한측 50명으로 합의하고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명칭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날짜 : 2007.5.17
2. 참가인원 : 남측에서 100명, 북측에서 50명, 참가급 : 장관급
3. 열차시험운행 시간 : 10:30~15:30,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동시 진행
4. 시험운행 구간 : 경의선은 문산역-개성역, 동해선은 금강산역-제진역
5. 시험운행 방식 : 각기 자기 측 기관차에 객차 5량씩 연결

경의선은 북측 인원이 남측으로 와서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이동
동해선은 남측 인원이 북측으로 가서 금강산역에서 제진역까지 이동

다.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제2차~제3차) 및 이행기구 실무협약(제1차~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채택되고,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이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웅희(통일부 경험기획관)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김 민(산업자원부 남북산업자원총괄팀장) 김병호(통일부 팀장) 이송배(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총괄지원부장)**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정주표(경공업성 방직관리국장) 리광순(경공업성 신발관리국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안승수(전 명지총회사 총사장) 등

* 제2차 이행기구 실무협약(7.5~7)시 교체참가, **제1차 이행기구 실무협약(6.7~8) 이후부터 참가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 진행된 실무협의를 통해 쌍방은 섬유·신발·비누 등 품목별 원자재 가격, 당해연도에 3% 대가 상환, 지하자원 현지조사 및 절차문제 등에 대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1)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이 2007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과 관련하여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기준으로 하되, 원자재 중 일부는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하여

1항차는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항로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검덕 아연 광산,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6월과 8월 중 2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하고 원자재는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검덕 아연광산, 대흥· 룡양 마그네사이트 광산 외에 가공공장, 항만·철도·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투자개발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 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을 6월 27일 인천↔남포간 정기 해상수송을 통해 제공
2.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3. 북측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지질도, 지질단면도, 매장량 산출도면, 장비현황 등 광물관련 자료를 6월 12일 이전에 남측에 제공
4. 단천지역의 검덕광산, 룡양광산, 대흥광산에 대한 지하자원 현지 공동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5. 제3차 실무협의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진행

(2) 제3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약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약이 2007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 가격은 CIF 기준으로 할 것이며, 신발과 비누 등

일부품목은 생산여건을 감안하여 1차 가공품 내지 반제품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해연도에 상환하기로 되어있는 3% 대가상환 문제와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2차 현지공동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부대비용은 남한측이 부담해야 하므로 원자재 가격은 FOB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납기를 조속히 확정하고, 원자재 형태도 1차 가공품이 아닌 생원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제1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우리측 이행기구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측 이행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명지총회사간 제1차 실무협약이 2007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우선 6월 27일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제1항차 단섬유 500톤에 대한 가격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채 협의를 종료하였다.

(4) 제2차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실무협약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이행기구간 실무협약이 2007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원자재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을 우리측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측이 원자재 가격과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 국내의 시장가격에 따른 경공업 원자재 가격을 대부분 수용하고, 비누와 신발 원자재를 반제품 또는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도 호응해왔다.

이에 따라 쌍방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경공업 원자재 제공

- 남측은 북측에 2007년중 미화 8,000만 달러(의복류 \$2,700만, 신발 \$4,200만, 비누 \$1,100만)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
- 남측 기술지원단 10명 구성, 북측 경공업 공장 1차 현장방문(8.7~11) 및 추가 3회(9월, 11월, 12월) 실시

2. 원자재 대가 상환

- 경공업 원자재 대가 3%(아연과 및 마그네슘크링카)는 2007년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로 분할하여 상환
-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

3. 지하자원개발 협력

- 북측은 검덕, 대흥, 룡양 등 3개 광산에 대한 자료 제공(7.19) 및 제1차 현지 공동 조사(7.28~8.11, 남북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 실시
- 북측은 현지공동조사, 기반시설조사 등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적극 지원

라.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제1차)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실무접촉이 2007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한중희(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 부단장)	한명철(민화협 참사)
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승신(청와대 과장) 유재필(국무총리실 과장)	문춘원(연유총국) 리인철(해상운송총국 대외사업국 과장) 안해란(연유총회사 연구원) 김태이(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경제에너지협력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기준의 세부사양에 따른 중유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북한측은 가열설비가 준비되지 않는 등 내부사정을 설명하면서 응고점 10℃ 이하의 중유 지원을 요구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시한 사양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품질은 아니나, 가능한 한 사정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협의에 임하였다. 수송일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으나 생산 등 내부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중유 인도·인수 절차에 대해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2.13 합의」에 따라 긴급 에너지 지원으로 1차분 중유 5만톤을 북측에 무상 제공
 - 남측 인도기관은 통일부, 북측 인수기관은 민경협으로 지정
 - 제공되는 중유 품질은 유황 함유량 2.5%, 응고점 10℃ 이하, 항구별 수송량은 선봉항 35,000톤, 남포항 15,000톤
2. 첫배 출항시기는 인도·인수절차 합의 후 2주 이내의 빠른 시기로 하고, 출항 후 20일 이내에 나머지 분량의 출항을 위해 노력
 - 남측 인도기관은 수송선박, 수량 등을 매 출발 5일 전에 통보하고, 북측 인수기관은 매 출발 3일 전에 하역항 준비상태를 통보
 - 북측지역까지의 수송 및 항만비용은 남측이 부담, 하역비용 및 체선료는 북측이 부담

마.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제3차)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조건 마련을 위해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2007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설동근(통일부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이동연(통일부 팀장)	한명철(민화협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4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처장) 김철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측은 개성공단 1단계 건설 내실화를 위해 북한 근로자의 적기 충원과 숙소 건설,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통근 및 화물수송 열차운행 등을 제시하는 한편, 2단계 개발을 조기 착수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연내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실질적인 의제와는 상관없는 국무총리의 헌법 영토조항 관련 발언내용(2.13)과 양영희 판사의 논문(통일정책사법연구 1권) 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등을 시비함으로써 쌍방은 실질적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4. 사회문화분야 회담

참여정부 기간 중 사회문화분야 회담은 총 17회 개최되었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대표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 「2004 아테네올림픽」에 남북선수단이 공동입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또한 「2008 베이징올림픽」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이 2005년 제1차 회의 이후 2007년까지 4차례 진행되었다.

한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합의한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회의를 2005년 9월부터 2007년까지 4차례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등도 개최되었다.

가.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

2007년 2월 5일 북한측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4차 체육회담을 2월 13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동의하여 제4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표	홍양호(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오영우(문화관광부 국제체육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박일남(조선올림픽위원회 상무위원)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참사)

우리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권고안과 베이징올림픽 예선전 개시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우선 예선전에 개별적으로 참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일팀을 구성하되 단일팀은 '경기력 위주'로 구성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북한측은 단일팀 구성의 근본 목적은 6.15 시대에 민족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동수 구성원칙'을 되풀이 하였다.

쌍방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상대방의 입장을 검토한 후 추후 연락하여 차기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제4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제3차 실무접촉 이후 안중근의사 유해매장 추정위치 공동조사가 2006년 6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2007년 3월 22일 우리측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의 상호교환, 유해 매장지역 특정, 유해매장 예상지역 보존 및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공동으로 중국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

한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함으로써 4월 10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병구(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장)
대표	김계진(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김영란(통일부 팀장)	김창규(민화협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쌍방은 현장조사결과 분석자료를 상호교환하며 가장 유력한 매장 추정지를 '여순감옥 뒷산 일대' 로 특정하고 4월 말부터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발굴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중국정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관련 구체적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舊地) 뒷산 일대' 를 유해발굴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정
2. 유해 공동발굴단은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
3. 남북은 발굴 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 요청
4.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관련 구체적 사항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다.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우리측은 2007년 3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

해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제를 위한 지원의사를 전달하였다. 남북은 방역관계자간 실무접촉과 관련한 의견교환을 거쳐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3월 30일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대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김창규(내각사무국 과장) 권정혁(중앙수의방역소 책임검사원) 리순학(내각사무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구제역 확산 범위와 혈청 등 관련자료 및 우리측 방역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현장방문 실시 등을 요구하였고, 북한측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쌍방은 지원물품의 구체적인 전달시기 및 현장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해 마무리짓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라. 북한 산림병충해 방제지원 실무접촉

북한측은 2007년 4월 5일 우리측에 참나무시든병과 송충병 구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적 자료 제공을 요청해왔다. 이에 우리측에서 4월 11일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알리고 쌍방 산림병충해 방제관계자간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동의하여 5월 8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오기표(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장)	량기건(민경협)
대표	김충환(통일부 지원협력팀장) 신상철(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과장)	최정호(국토환경보호성 산림보호처장) 장국일(민경련 정책실 참사)

우리측은 솔나방·솔잎혹파리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북한측은 우리측 방제전문가가 북한내 산림병충해 발생 현장을 방문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물품의 지원시기는 우리측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5. 인도분야 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은 참여정부 기간에도 연 1~2회 개최되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화상상봉 추진, 북한 수해복구 지원 등 인도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도 병행하였다. 특히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발생시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긴급구호품·의료품, 복구 자재·장비 등을 조속히 전달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였다.

2007년도 들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남북 적십자단체간 실무접촉을 2007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대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건설과 관련된 실무적 문제와 함께 북한측의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문제 등 인도적 협력사업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3월 10일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
2. 면회소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
3.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 말부터 시작

나.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상규(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은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서기장)

우리측이 국군포로·납북자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은 국군포로·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였다. 쌍방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대면상봉 및 화상상봉과 시범적 영상편지 교환에 합

의하고, 북한측의 적십자종합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 실시(남북 각기 40가족)
2.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남북 각기 100가족)
3. 추석 계기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
 - 이미 상봉한 바 있는 남북 이산가족 각기 20가족
 -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
4.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
5.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0월 말 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제3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1. 남북총리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 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총괄 조정협의체였던 남북장관급회담의 역할을 격상시켜 쌍방 총리급이 남북관계 전반을 관장토록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2007 남북정상선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회담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국무총리 훈령 제501호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유관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종합기획단」과 「이행사무처」를 구성하여 남북총리회담 대책과 협상전략을 준비하였다.

가.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제1차~제3차) 및 분야별 실무협의(제1차)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이 2007년 10월 26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관세(통일부 차관)	전종수(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대표	홍윤식(국무총리실 심의관) 유형호(통일부 국장)	김정삼(내각사무국 참사) 박용일(아태평화위원회 참사)

접촉에서 총리회담 개최시기와 대표단 구성, 왕래경로 등 주요 절차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제2차(11.9) 및 제3차(11.11) 예비접촉을 통해

나머지 절차문제와 총리회담 의제문제를 집중 협의하였다.

한편, 11월 10일 부문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총리회담 의제 등 정상선언 이행과 관련,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쌍방의 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였다.

남북총리회담 제1차 예비접촉 결과

1.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2.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7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 및 지원인원은 40~50명으로 구성
3. 의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 문제
4. 회담 운영에 있어 필요시 분야별 접촉도 진행하며, 왕래경로는 서해직항로(항공편) 이용
6. 회담기록, 신변안전, 교통, 통신, 편의제공 등 기타 제반 절차문제는 남북회담 전례를 준용
7. 차기 예비접촉은 11.6 개성에서 개최 (* 북한측 사정으로 11.9 개최)

나. 제1차 남북총리회담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한덕수(국무총리)	김영일(내각총리)
대표	이재정(통일부 장관)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 오영호(산업자원부 차관) 이춘희(건설교통부 차관) 박양우(문화관광부 차관) 서 훈(국가정보원 3차장)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백룡천(내각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건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정민(보건성 국장)



제1차 남북총리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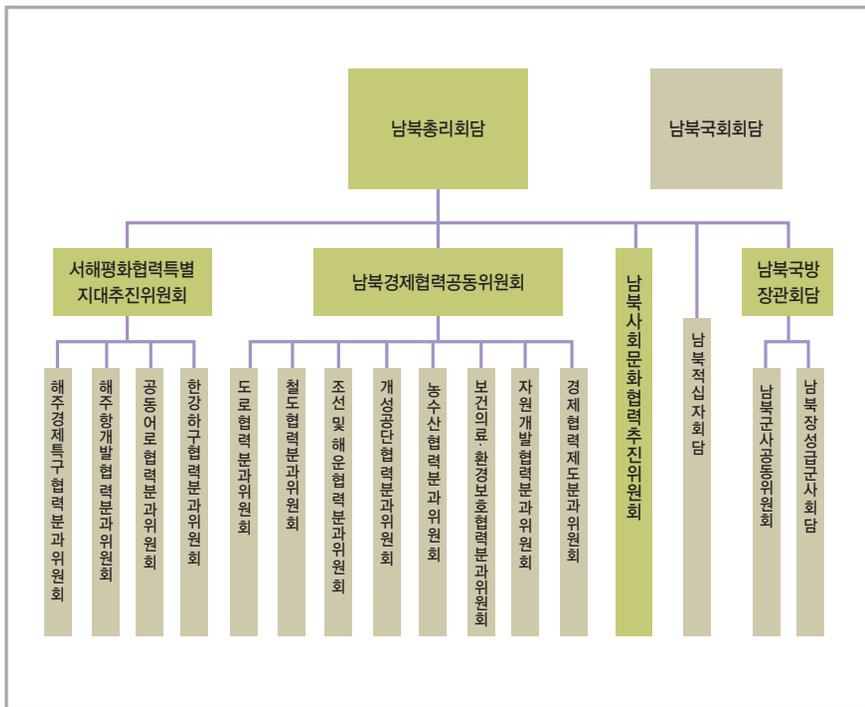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겨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활성화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백두산 관광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응원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언어·교육·문화예술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점을 감안, 동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해주 경제특구개발,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공동이용, 조선협력사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등 정상선언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은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2건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총리회담 이후 남북회담 추진체계도



합의서 요지

1.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
 - 금강산면회소 사무소 개소식(12.7),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12.11) 등 연내 사업 실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활성화, 조선협력단지 등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구체화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별도 협의기구 구성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분야별 협력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해주직항로 통과 등에 대한 추진일정 합의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 통행(출입시간 확대 : 07시~22시)·통신(인터넷, 유무선 전화 등)·통관(물자하차장 건설 등) 문제 개선, 12.11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개시, 2008년 2단계 개발 착수하고, 12월 중 측량·지질조사 실시
4. 경제협력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심화
 - 2008년부터 경의선 철도·고속도로 개보수 추진(2007년 중 현지조사)
 - 2008년 상반기에 안변에 선박용 블록공장 건설 착수, 남포시 영남배수리공장 현대화 및 건설 등 추진
 - 자원개발·농업·보건의료·수산·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사업 방안에 합의
5. 사회문화 및 인도분야 협력의 확대
 -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 영상편지 시범교환, 상시상봉 실시 합의, 제9차 적십자회담 개최(11.28~30, 금강산)

2. 군사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준비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3차례 진행되었으며, 제2차 국방장관회담 이후에는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1회, 장성급군사회담이 1회 개최되었다.

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 이후 7년 만에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에서 11월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장수(국방부장관)	김일철(인민무력부 부장)
대표	정승조(국방부 중장) 박찬봉(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조병제(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문성목(국방부 대령)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허찬호(인민무력부 소장) 리인수(인민무력부 소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북한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주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다른 문제들도 해결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관할해오고 있는 구역을 존중하도록 한 점을 상기시키고, 우선적으로 서해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선언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쌍방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 조치 추진
 - 적대감 조성행위 금지, 기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 철저히 준수
 -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체계 현대화 및 상호 연락채널 확대
2. 전쟁 반대, 불가침 의무 준수를 위한 군사적 조치 추진
 -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
 - 해상경계선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3.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문제를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협의
 -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 설정
 - 서해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에서 협의
4.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적 협력
 - 전쟁시기의 실종자 유해발굴 추진대책을 협의·해결
5.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추진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즉시적 군사보장대책 수립, 12.11 철도화물수송 개시를 군사적으로 보장
 - 서해 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군사보장을 최우선적으로 해결, 북한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 허용, 백두산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보장조치 마련
6. 합의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
 - 2008년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서울), 군사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

나.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홍기(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이상철(국방부 대령) 정진섭(국방부 대령) 황봉연(통일부 팀장)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쌍방은 사전에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 합의를 우선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실무대표접촉을 갖고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매일 07:00~22:00까지 상시적 통행 보장
 - 일요일 등 공휴일의 통행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
2. 2008년부터 인터넷과 유선 및 무선전화통신 허용
 - 통신센터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은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
3. 선별검사 방식 등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검사장 신설·확장

또한 우리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과 관련 공동어로구역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에 북한측은 우선 NLL과 북한측이 주장하는 경계선 사이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할 것과, 평화수역이 설정되기 전에는 현장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쌍방은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군사실무회담(제32차~제35차)

제32차·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절차·의제 등의 문제를 협의하였고,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 합의를 마련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박림수(인민무력부 대좌)
대표	이상철(국방부 대령) 황봉연(통일부 과장)	리선권(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12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는데, 쌍방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실무절차·회담의제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어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각 초대소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측 대표단은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2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으며, 쌍방은 남측 대표단 규모는 3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신회선 구성문제 등 기타 실무적인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1월 24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북한측 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은 12월 5일 판문점 북한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한 군사보장 합의서 마련의 시급성을 감안, 상호 입장을 절충하여 2007년 12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철도화물수송을 위해 남북관리구역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 통과 24시간 전 관련사항 통보 등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마련하였다.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 합의서 요지

1.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위해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 개방
2. 통과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 열차 현황 등을 상대측에 통보
3. 열차는 최저 20m/h, 최고 60km/h로 운행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출입 및 세관 심사 등 실시(세관심사에 필요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는 추후 협의)
4. 열차운행구간에서 사진촬영 금지, 통제품·금지품 등 철저히 준수

3. 경제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의 중심협의체로서 기존 차관급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철도, 도로, 개성공단, 보건의료·환경보호, 농수산, 조선·해운, 경협제도, 자원개발 등 8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농수산·개성공단분과위원회 등 총 12회의 회담이 진행되었다.

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권요규(부총리겸 재경부 장관)	전승훈(내각 부총리)
대표	김중태(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김용근(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유영학(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원인희(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이재균(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박봉식(통일부 국장)	백룡천(내각 사무국 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박정성(철도성 국장) 박철수(민경협 부국장) 박용일(조평통 서기국 참사)

우리측은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협의를 마무리하고,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지하자원개발 협력, 농수산, 보건의료·환경보호 등 분야별 협력과제들을 협의·확정하며, 추가적 협력과제로서 평양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설치, 세계은행의 북한 경제인력 교육훈련사업,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중장기 남북경협 발전계획 공동연구, 대북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분야의 협력의제들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가 협력과제들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의제들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부문별 분과위원회 일정 등을 중심으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철도·도로 공동이용과 물류유통 확대를 위한 개보수 협력
 - 도로협력분과위('08.2.12~13, 개성) 및 철도협력분과위('08.1.22~23, 개성) 개최
2.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협력
 - 2차 현지조사 : 12월 11일부터, 「조선 및 해운분과위」 개최(12.25~28, 부산)
3.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문제 조속 해결
 - 12월 17일부터 2단계 개발 측량 및 지질조사 시작, 개성공단분과위 개최 (12.20~21, 개성)
4. 남북공동이익을 위한 자원개발 협력 추진
 - 남북자원개발 분과위 제1차 회의(2008년 1월, 개성) 개최, 제3차 단천지역 광산

현지조사(12.20~26)

- 5. 농업 및 수산분야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
 - 종자생산·가공시설 및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위해 현지조사(12.21~25) 실시
 - 농수산협력분과위(12.14~15, 개성) 개최
- 6.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 협력 추진
 - 실태조사 실시, 약솜공장 건설 우선 추진
 - 환경보호협력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병충해 방제 등을 2008년부터 추진
 - 보건의료·환경보호 분과위(12.20~21, 개성) 개최
- 7.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제도분과위 구성 및 제1차 회의(2008.4월 초, 개성) 개최
- 8.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개최

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1차 예비접촉

(1) 제1차 예비접촉

「2007 남북정상선언」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예비접촉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기간 중인 2007년 12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표	이동욱(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장) 손명선(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장) 이안호(해양수산부 남북협력총괄팀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용일(조평통 서기국 참사) 김광일(남북경제협력연합회 참사)

우리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일정, 대표단

구성 등 제반 실무절차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사업이행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촉박한 준비 일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부족 등으로 실무적 문제들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예비접촉은 주로 우리측에서 사업추진 구상과 현지조사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백종천(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박송남(국토환경보호상)
대표	고경빈(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김영과(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진 흥(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박상규(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김춘선(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정순(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김일영(수산성 국장) 강종관(육해운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 기사장) 김광운(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임룡철(조평통 참사)

우리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사업비전을 설명하고 구체적 추진방안과 일정을 제시한 반면, 북한측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사업계획과 현지조사문제는 추후 분과위원회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해주경제특구 및 해주항 개발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사회담에서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긍정적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설득하였다.

쌍방은 우선 사업추진이 용이한 해주지역 현지조사 및 실무접촉 일정과 제2차 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합의서 요지

1.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를 통해 점차 확대 개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개최, 구체적 사업계획, 시범단지 조성 및 착공식, 법률·제도적 장치 정비 등 협의
 - 해주지역 현지조사를 2008년 1월 31일 경 실시, 조사단 방문관련 실무접촉을 2008년 1월 개성에서 개최
2.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개발하고 활용
 - 해주항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
 - 2008년 상반기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3.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 실시
 - 2008년 상반기 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구체적 공동어로 실시 방안, 공동어로구역 관리운영문제, 수산자원보호 및 수산 협력방안 등 협의
4.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
 - 2008년 상반기 안으로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 한강하구 현지조사, 골재채취 실시방안 및 공동이행기구 설치,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5. 2008년 상반기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제2차 회의 및 4개 분과위원회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

다.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박현출(농림부 농업정책국장)	리만성(농업성 국장)
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임송학(해양수산부 남북수산협력팀장) 허진봉(국무총리실 과장)	박인건(수산성 국장) 량기건(민경협 부국장) 고창림(수도건설위원회 기술국장) 전석조(농업성 과장)

농업분야에서 우리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사업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의·결정할 사안이고, 북한측이 제기한 동식물 검역문제는 북한 지역을 질병 청정지역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종자가공 및 처리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2007년 12월 25일 이전에 착공해야 할 것이며, 청정화 지역문제는 북한과 국제기구 간의 문제로 남북간 협력사업이 아니며 남북간 검역합의서가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산분야에서 우리측은 동해수역 어장은 은덕어장 외에 북한측의 동해 50해리 직선 기선 바깥수역을 조업지역으로, 입어로는 동해어로수역을 확정된 후에 협의할 것과, 종묘배양장 건설은 인공적인 방식보다 자연적인 종묘생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은덕어장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측이 희망하는 다른 어장도 검토할 수 있으며, 입어로 제공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 후 세부적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하고, 종묘배양장 건설은 인공 종묘배양장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 협의한 후 농업 및 수산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방향을 담은 합의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조속추진
 - 현지조사 : 12.21~25, 규모 20명, 기반시설 등 입지여건 조사
 - 북한측은 기초자료 및 편의보장, 남측은 설비·물자 제공
 -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 종자, 유전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기술협의 개최
2. 검역체계 확립 및 관련협력 추진
 - 정보 상호교환, 중요 검역소 검사·소독장비 현대화, 가축 예방·진단·치료약품 등 협력
 - 2008년 1월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3. 과수·채소·잡업·축산, 농업과학기술 협력 추진
4. 수산분야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 중 북한측 동해어장의 일정수역에서 남한측 어선 입어 및 어로 진행
 - 수산물 생산, 가공, 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 협력 추진(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효율적 유통을 위해 적극 협력
 - 수산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8년 초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5. 농수산물과위원회 제2차 회의와 기타 실무접촉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

라.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최보선(통일부 사업조정관)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이용석(정보통신부 협력기획팀장) 정준희(통일부 지원총괄팀장) 박문태(통일부 팀장)	류창만(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4처장) 황명호(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6처장) 윤승현(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우리측은 군사실무책임자 접촉('07.12.13, 판문점)에서 군사적으로 보장한 3통문제 개선사항을 재확인하고 실시시기를 확정하는 한편, 북한측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건설, 출퇴근 도로 개보수, 통근열차 운행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3통문제는 군사당국간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협의할 내용이 없으며, 숙소 및 출퇴근 도로, 물자 하차장 등 건설분야 의제에 대해서만 개별 합의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시행일부터 연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통행 보장
2. 통신센터 완공, 인터넷 및 유무선 전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
3.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로 빠른 시일 안에 간소화, 물자 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
4. 북측 근로인력의 적기 충원 보장을 위해 1만 5천여 명 규모의 숙소 착공('08년 상반기)
5. 북측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
 - o 개성-평양 고속도로 연결 진입로 건설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08년 1월 중)
 - o 2008년 개성공단 근로자의 통근열차 운행
6. 개성공단협력분과위 제2차 회의 개최('08년 2월 중, 개성)

마.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문창진(보건복지부 차관)	리봉훈(보건성 부상)
대표	이재홍(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양창석(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윤영균(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 최상규(통일부 국장)	김영철(국토환경보호성) 장준상(보건성 국장) 림춘철(국토환경보호성) 김영희(민화협 부원)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측은 도병원 현대화·약솜공장·전염병 공동방제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심장병원 지원, 주사기 공장·제약공장 건설 등 보건의료장비 협력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환경·산림분야에서 양묘장·산림녹화·병해충 방제 등 쌍방이 공동으로 제안한 사업은 사업지역·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환경분야 협력사업에서 관심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황사피해 등 대기오염 피해방지 사업, 한반도 생물지 사업, 환경보호센터사업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의견이 접근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당국간 시범협력사업, 공동조사 및 실무협의 일정에 합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은 차기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보건의료 협력사업 적극 추진

- 2008년에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사업 시범 진행, 도병원 현대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 착수, 구체적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협의
-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냉장운반장치, 진단시약, 치료제 등을 지원하고 전염병 공동퇴치를 위해 노력
- 사리원 도인민병원 지원, 약솜공장 건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 사업기간 중 기술실무진의 현장방문 보장

2. 환경·산림분야 협력 적극 추진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공동연구사업 추진, 2008년 2월중 평양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황사 및 대기오염 피해 축소를 위해 2008년 중 평양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설치, 그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환경보호센터·한반도 생물지 사업 중요성 인식, 2008년 4월 개성에서 실무협의 개최
- 사리원 지역에 양묘장을 조성, 2008년 3월 중 공동조사 실시
- 산림병해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조사 및 방역 실시,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3. 제2차 회의는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

바.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최평락(산업자원부 기간제조선업본부장)	차선모(육해운성 참모장)
대표	김우철(해양수산부 연안해운팀장) 김충환(통일부 교역물류팀장) 허진봉(국무총리실 과장)	맹인섭(육해운성 조선국장) 한명철(민화협 참사) 리상덕(육해운성)

조선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조선협력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조선협력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에 조선협력 부지를 선정하고 단계적 건설계획 수립, 전력, 용수 등에 대해 실제적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우리측이 제의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문제는 경협제도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해운협력분야에서 우리측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허용에 따른 통항질서 준수문제를 강조하고, 장거리 직접통신문제, 해난구조기관장 직통연락망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해주직항로 통과는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우리측의 통항절차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제3국 경우 북한선박의 남북항로대 이용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 요지

1. 안변과 남포지역 조선협력사업과 해주직항로 통과 등 해운협력사업과 관련한 제반 문제 계속 협의
2.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2008년 1/4분기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3월 중 개성에서 개최
3.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계속 협의

사.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및 남북철도운영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이 2007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협기획관)	박정성(철도성 국장)
대표	김경중(건설교통부 남북교통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철호(철도성 부국장) 황삼린(철도성)

우리측은 12월 11일부터 화물열차 정례운행 개통,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지조사 방안,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채택, 열차운행의 점진적 확대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화물열차 정례운행과 열차운행 확대는 국방장관회담 이후 협의·확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 또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국한하고 여객운송과 동해선 열차운행 부분은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위원 명단을 11월 중에 교환,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진행
3.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매일 1회 운행, 화물수송량 확대에 따라 횟수 증대
 -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계기로 남북열차운행 점차 확대
4. 개성-신의주간 철도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현지조사 진행
 - 2007년 12월 12일~18일 개략조사 진행, 2008년 초에 구체적인 정밀조사 진행

(2)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호성(통일부 출입총괄팀장)	김철호(철도성 책임부원)
대표	박영수(건설교통부 서기관) 김난영, 전철중, 유학곤(통일부 사무관) 강승룡(국방부 중령) 변현진, 윤양수(한국철도공사 팀장) 임재익, 임동춘, 박대희(한국철도공사 부장)	황상린(철도성 부원) 석영철(철도성 부원) 림영두, 김만선, 강순덕, 장철수, 김영호, 리룡국, 김철준

쌍방은 화물열차 운행횟수 및 열차편성, 화물 취급절차, 화물운임 등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정례운행에 필요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채택하였다.

쌍방은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매일 1회 왕복하고, 운행열차는 총 12량으로 편성하며, 매일 오전 9시 도라산역을 출발, 9시 30분 판문역에 도착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 후 오후 2시 판문역을 출발하여 귀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화물운임은 각기 자기측이 제정하는 운임체계에 따르며, 적용화폐는 유로화 또는 미 달러화로 합의하였다.

아.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강수진(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대표	유인상(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장)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이영훈(통일부 팀장)	김성일(민경협 부위원장) 김성호(민경협 참사) 리용국(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내 착공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완공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2008년 상반기 내 착수하여 1~2년 내 완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이 개보수를 계기로 경협 및 지원물자의 수송, 남북행사 참가 등 다양한 공동이용 방안을 제의한 데 대해, 북한측은 총리회담 등 상위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지조사 일정과 관련 우리측이 1차 개략조사를 12월 중순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정밀조사를 2008년 초에 실시하자고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12월 중 현지조사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여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2008년 중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완공
2.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기본적인 현지조사(남북 각 20명)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완료하고, 추가적인 조사는 필요시 쌍방의 합의하에 추진
 - 남측은 현지조사를 위한 인원, 기재, 측량설비 등 보장, 북측은 필요한 관련자료 및 편의제공
 - 전반적인 도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 보고서 공동작성
3.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8년 2월 개최

자.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제1차~제2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05.8, 개성)에서 합의한 농업협력사업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두차례(11.5, 12.18)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1차	수석대표	김기혁(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	김영철(조평통 서기국)
	대표	김경규(농림부 구조정책과장) 이동언(통일부 팀장)	김영희(민화협 참사) 리학철(농업성 축산관리국)
2차	수석대표	배광복(통일부 남북경협총괄팀장)	전호연(농업성 축산관리국 사무장)
	대표	이천일(농림부 농업정책과장) 허진봉(통일부 팀장)	김영학(농업성 축산관리국) 림룡철(아태평화위원회 참사)

(1) 제1차 실무접촉

우리측은 시범 양돈협력사업은 차관방식의 유상지원으로 할 것과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육로수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북한측은 유상지원 방안에 동의하고 사료의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육로수송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실무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서에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쌍방은 이견이 있는 육로수송방안은 추후 이행기구간 논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시범 양돈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평양 강남군 일대에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의 시범양돈 협력사업 진행
 - 총괄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 2007년 11월 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답사 실시
2. 남측은 자재 및 장비·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지원,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사항은 쌍방 이행기구가 협의
 - 북측은 토지·전력·용수·노동력 등 제공,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남측 인원들은 사업현장 방문, 기술지원
3.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2007년 중에 개성에서 개최

(2) 제2차 실무접촉

우리측이 신축 양돈장 규모를 부지면적 45,000㎡, 건물면적 11,000㎡ 내외로 제시하자, 북한측은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고, 시범 양돈협력사업 이행기구로 「농업성 축산관리국」을 선정·통보하였다.

쌍방은 양돈장 시설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장비의 차관제공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총 사업기간 2년의 범위 내에서 북측에 연산 1천톤 규모의 양돈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장비와 종돈, 종돈 입식 후 1년간 소요되는 사료·약품 등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2.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
 - 차관 공여 및 상환은 「南 한국수출입은행 ↔ 北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따름.

3. 자재·장비의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에서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로 설정

- 수송비용 관련, 육로의 경우 쌍방이 합의한 장소까지, 해로의 경우 지정된 항구까지의 수송은 남측이 부담하고, 그 외 북측 지역 내에서의 수송·하역·항만비용과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

차.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접촉이 2007년 12월 25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정동문(통일부 남북산업협력팀장)	강용태(아태평화위원회 참사)
대표	정성태(통일부 서기관) 김훈아(통일부 사무관)	리덕수(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부국장) 한웅희(조평통 참사)

우리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체계적 발전과 확대를 위한 금강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은 빠른 공법을 이용해도 16개월이 소요되므로 차후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통행검사소의 신축이 금강산관리위원회 설치보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행사무소 착공식 후 관리위원회 설립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남과 북은 관리위원회와 통행검사소 건립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재검토한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4. 사회문화분야 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회담 일정 및 협의의제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가.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김형석(통일부 경험기획관)	한광일(기상수문국 처장)
대표	남재철(기상청 국제협력담당관) 김경식(기상청 기술기반정책과장) 황진규(통일부 과장)	최광국(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황철호(기상수문국 중앙연구소 실장) 현창건(내각 책임부원) 리영민(조평통 서기국 참사)

우리측은 기상정보 공유를 위해 전용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기상전용통신망 개통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북한측은 직접적인 논의를 회피하였다. 쌍방은 북한측에 대한 지상관측장비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2차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나.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관련 실무접촉이 2007년 12월 2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우상일(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황철(민화협 부장)
대표	김문호(통일부 문화교류팀장) 권영진(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책임부원) 김문규(문화성 무대예술지도국 부국장) 주광일(민화협 참사) 림대석(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우리측은 응원단 규모가 확정되어야 열차, 숙소, 입장권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남북응원단 규모를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강조하였고, 북한측은 관계기관간 협의 후 결과를 조속히 통보해주겠다고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쌍방은 차기접촉을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갖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5. 인도분야 회담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7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홍양호(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전문위원) 유광수(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정소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김영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우리측은 2008년 상반기에 금강산면회소를 완공하여 면회소를 통한 상시 상봉을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 제시한 데 대해, 북한측은 대면상봉·화상상봉·영상편지사업의 정기적인 추진방안을 제의하였다.

금강산면회소 대표 상주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2008년을 기해 대표가 상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이 상주시점을 밝히지 않아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측이 제안한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측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총리회담 위임사항임을 강조하며 협의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이산가족문제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하는 방향으로 절충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 실시
 -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간 남북 각 400명씩 대면상봉
 - 분기별로 남북 각각 40가족씩, 1년에 남북 160가족씩 화상상봉
 - 2008년 「6.15 공동선언」 계기, 기 화상상봉자 중 남북 각 100명씩 특별상봉
 - 대면상봉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동반가족 1명 추가
2. 2008년 새해에 남북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 분기마다 기 상봉자 대상 남북 각 30가족씩 교환
3.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
4.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 참가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

--	--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자정부

2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1-3-178



제3장 남북경제협력

- 제1절 남북교역
- 제2절 개성공단사업
-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 제4절 남북관광협력
- 제5절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 제6절 기타 남북경협

제3장

남북경제협력

2007년 남북경제협력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국면 진입과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대내외 환경개선에 힘입어 확대·발전하였다. 남북교역은 2006년 대비 33.2% 증가한 1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1995년 (주)대우 남포공단이 최초 승인을 받은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협력사업 승인은 2004년부터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총 176건에 달했다.

연도별 경험 사업자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단위: 건 수〉

구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협력사업	1	5	9	1	2	5	2	2	26	32	23	176	284
협력사업자	11	16	13	2	1	6	3	4	28	29	24	176	313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에 따라 남북간 인적왕래도 크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6년 대비 56.5% 증가한 16만명에 육박했다.

연도별 남북 왕래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89-'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계	6,297	5,661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434,663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개성공단은 2003년 1단계(330만㎡)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7년 말 현재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총 65개 기업(아파트형공장 입주 소규모기업 29개 포함)이 가동 중이고 북한측 근로자 2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7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1억 8,477만 달러에 이르렀다.

금강산 관광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2007년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 2007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70만명을 넘어섰다.

남북연결 철도는 2005년 12월 궤도부설공사가 완료되고 2007년 5월 17일 시험운행이 실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개시되어 남북간 열차의 정기운행이 실현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구간

구분		남측 구간	북측 구간	총 연결구간
경의선	철도	문산-임진강-도라산-군사분계선 (12km)	개성-손하-판문-군사분계선 (15,3km)	27,3km
	도로	통일대교 북단-군사분계선(5,1km)	개성 - 군사분계선(7km)	12,1km
동해선	철도	제진 - 군사분계선(7km)	금강산-삼일포-감호-군사분계선 (18,5km)	25,5km
	도로	송현리 - 군사분계선(4,2km)	북고성 - 군사분계선(20km)	24,2km

또한 2007년에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약 7,000만 달러(전체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였으며, 북한측은 2007년도에 지불해야 할 대가로 약 240만 달러 상당의 지하자원을 아연피 1,000톤으로 상환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가동, 남북경제협력협 의사무소 활성화, 육로출입시설 확충 및 통행체계 개선 등을 통해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과 북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합의·추진하기로 하였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및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이 그것이다.

제1절 남북교역

1. 교역일반

가. 교역규모

2007년 남북교역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수요, 6자회담 합의 이행의 대내외적 화해 분위기 속에서 2006년 대비 33.2% 증가한 17억 9,789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 반입증가 및 북한산 농수산물·광산물 반입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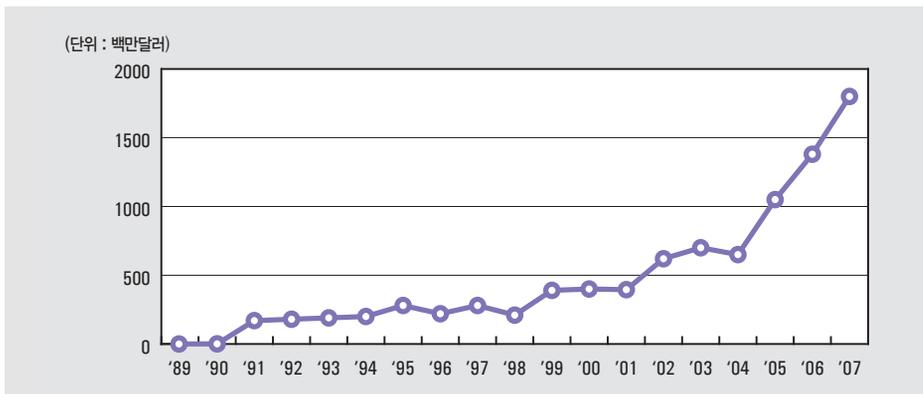
교역규모를 반입·반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반입은 7억 6,534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3% 증가했고 반출은 10억 3,255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 증가하였다.

남북교역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4,957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4,238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9,195

연도별 남북교역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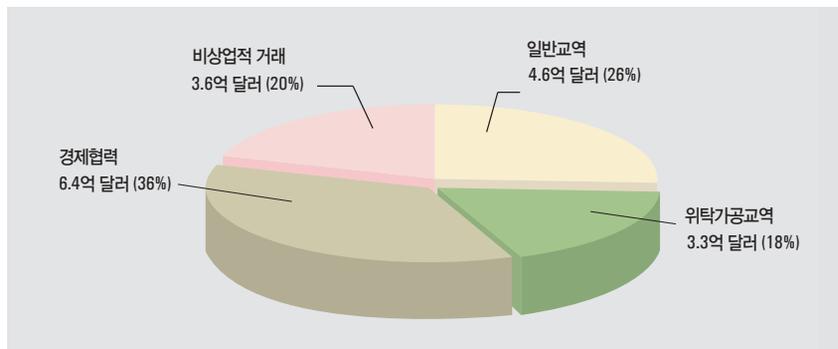
나. 유형별 교역현황

2007년도 상업적 거래는 미화 14억 3,117만 달러로 전년대비 54.2%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79.6%를 차지하였다. 이 중 반입은 미화 7억 6,529만 달러로 전년대비 47.6% 증가하였고, 반출도 미화 6억 6,588만 달러로 전년대비 62.5%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4억 6,140만 달러로 전년대비 51.7%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3억 2,991만 달러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개성공단은 4억 4,067만 달러로 47.5%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타 경제협력은 1,191만 달러로 전년대비 23.3% 감소하였다.

비상업적 거래는 3억 6,672만 달러로 전년대비 13% 감소하여 전체 교역액의 20.4%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93만 달러로 전년대비 61.4% 감소하였고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3억 2,89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6% 감소하였다.

2007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다. 교역수지

2007년 남북간 교역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제협력사업 및 대북지원 등 비상업적 거래부문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부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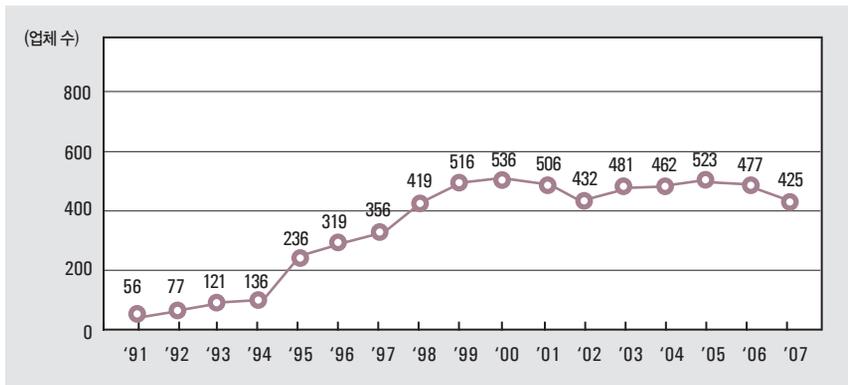
서의 실질교역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7억 1,805만 달러 흑자인 반면 누적 실질수지는 28억 8,500만 달러 적자이다. 이와 같은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교역구조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농수산물, 광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섬유류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05년 10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개소되어 남북 교역 기업에 각종 투자 알선, 관련 정보제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남북 간 직접교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의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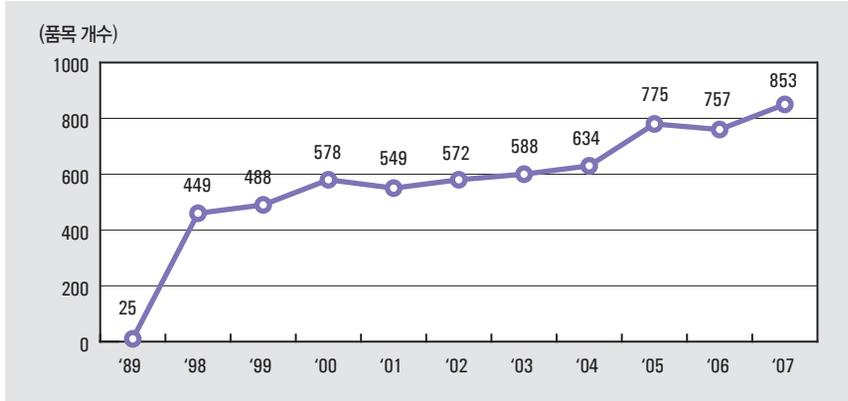
연도별 교역업체 현황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4년 634개, 2006년 757개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7년의 경우 전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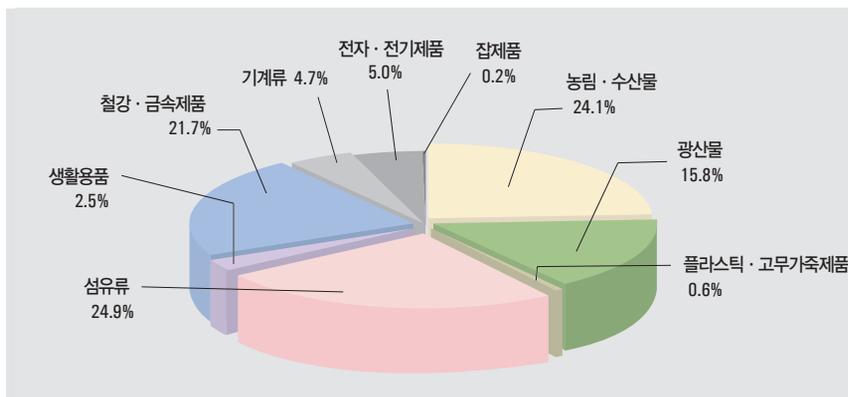
비 13% 증가한 853개로, 이 중 개성공단 657개, 일반교역 293개, 위탁가공교역 166개 품목이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2007년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24.9%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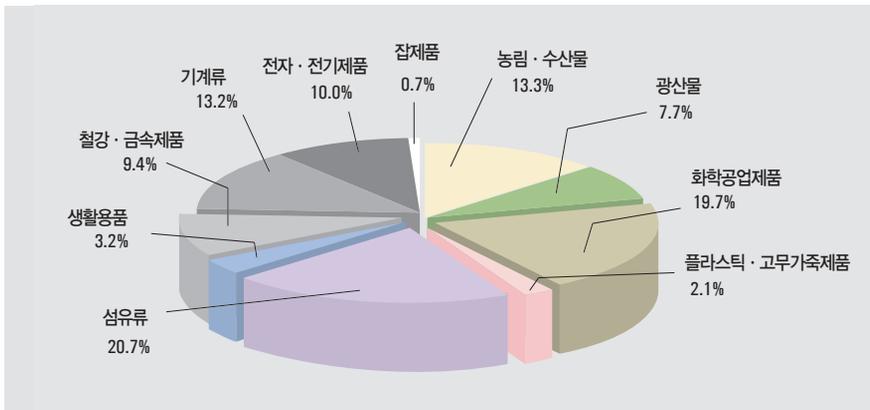
반입품목 구성비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

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원부자재)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직물 등 섬유류(20.7%), 비료 등 화학공업제품(19.7%), 쌀 등 농림수산물(13.3%), 건설 중장비 등 기계류(13.2%) 순이다.

반출품목 구성비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의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형태이다. 2007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3억 2,9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깐마늘 등 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 등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용 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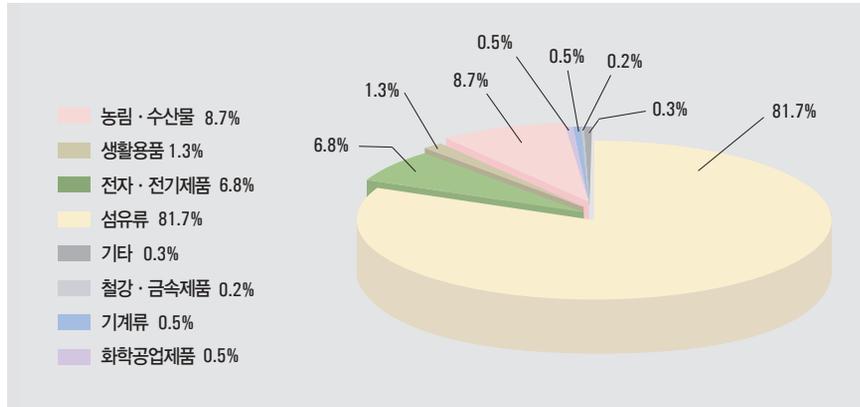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7년 89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역에 대한 관심 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했지만, 영세 교역업체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고 위탁가공교역 시장이 경쟁원리에 따라 재편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여업체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개)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248	166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89

위탁가공 구성비



제2절 개성공단사업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공되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완료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은 긴장의 대결지역을 화해와 평화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

일 1천여 명의 인원과 6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며 공단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 착공된 이후 약 5년여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6년 10월 말까지 26개 기업이 모두 가동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동이 본격화 되고 국내 입주 희망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단지 분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8월 1차로 16만 9천㎡의 용지에 총 23개 업체와 1개 기관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 말 실시된 1단계 2차 분양은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경협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공사도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료되어 2007년 10월 16일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에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기반시설은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공되었다. 전력은 10만kW 용량의 송변전 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5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송전 방식의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다. 통신은 2005년 12월 303회선을 개통한 이래 2007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653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2007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기업 29개를 포함하여 총 65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누적생산액은 2억 7,342만 달러에 달하고, 총 수출액은 약 6,036만 달러로 누적 생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0만 달러, 2006년 7,373만 달러, 2007년 1억 8,477만 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생산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총계
생산액	14,906	73,737	184,779	273,422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수출 실적은 2005년 86만 달러, 2006년 1,982만 달러, 2007년 3,966만 달러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기준 누계액은 6,036만 달러이다.

연도별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총계
생산액	866	19,825	39,669	60,360

개성공단 분야별 추진 일지

구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 현대-北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 현대-토공-북측간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계약 체결	'04.4.13
	○ 토공, 시범단지 9만 3천㎡ 분양 공고	'04.5.18
	○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05.8.1
	○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06.5.31
	○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6.12.21
	○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4.30
북한 조치	○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02.11.20
	○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 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4-'06.11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22
남북 당국간 합의	○ 「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 체결	'02.12.8 ('05.8.1 발효)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04.1.29 ('05.8.1 발효)
	○ 양 정상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합의	'07.10.4

구분	추진 내용	일자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04.4.23
	○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23개 기업 및 1개 기관)	'04.6.14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04.10.20
	○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04.12.15
	○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가동	'06.10.31
	○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06.11.21
	○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07.1.30
	○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4.30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7.5.25
	○ 총생산액 2억달러 달성	'07.9.30
	○ 북한 근로자 2만명 고용	'07.11.5
	○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지질 조사 착수	'07.12.17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07.12.31

1. 1단계(330만㎡) 개발 완료

가. 기반시설 준공

(1) 내부 기반시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단지내 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전력·통신 등 외부 기반시설이 있다.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



개성공단 1단계 전경(2007년 10월)

는 점과 공단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내공단 수준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도로, 상하수도 등 단지내 시설 공사는 2007년 6월에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2007년 10월까지의 용수, 환경기초시설, 전력·통신 등 개성공단 1단계의 주요 기반시설 공사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10월 16일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우리측 관계자 255명과 주동찬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장 등 북한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2007년 10월에 완공된 개성공단 정·배수장은 개성공단 북쪽 약 17.8km 지점에 위치한 월고저수지로부터 원수를 취수하여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의 용수를 입주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26,446㎡ 부지에 하루 3만톤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규모로 2005년 4월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루 1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1단계 폐수처리시설이 2007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2단계 1만 5,000톤 처리 시설이 2009년 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 지역 5만㎡ 부지에 매립용량 20.4만㎥, 소각시설 하루 62톤 규모(12톤 1기, 50톤 1기)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6.1만㎡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이 2005년 12월에 착공되어 2007년 6월에 완공되었다. 1일 1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도 2007년 8월에 착공되어 200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또한 나머지 매립시설과 소각시설도 분양 기업들의 입주 추이에 따라 건설될 예정이다.

(2) 외부 기반시설

2004년 12월 3일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1만 5,000kW 용량의 배전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16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개성공단 본단지에 대한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6년 12월 21일 남북간 송전선로를 연결하였다. 2007년 5월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송전방식의 전력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 6월 21일 「평화변전소」 준공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 조선체신회사 간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 및 2005년 3월의 「통신공급 부속합의서」에 따라 남북간 통신망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인 KT는 2005년 7월 18일 민간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간 광케이블을 연결하였다. KT는 이어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하고 2005년 12월 28일 303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통신과 같은 제3국 경유 방식이 아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KT는 회선 용량 부족에 따라 2007년 7월에 350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2007년 말 현재 653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본단지에 대한 원활한 통신 공급을 위해 2008년까지 9,917.4㎡ 규모의 통신센터를 건립하여, 인터넷·이동전화 개통을 포함한 1만회선 규모의 통신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입주기업 가동 확대 및 분양 완료

2005년 8월 본단지 1차 16만 9천㎡에 대한 분양이 실시되어 총 23개 업체

및 1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선정되었다.

본단지 1차 분양에 이어 2006년 2차 분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양이 착수되지 못하다가, 2007년 4월 말에 본단지 2차 분양이 공고되었다.

2차 분양에서는 일반공장 용지 외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선도기업 유치용지,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협동화단지, 영세기업에 유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용지, 개성공단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외국기업유치용지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섬유·봉제·의복, 가죽·가방·신발, 화학·고무·플라스틱,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등 6개 군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였다.

2차 분양에서는 183개 업체가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봉제·의복이 53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이 30개 업체로 뒤를 이었다. 가죽·가방·신발이 15개 업체, 화학·고무·플라스틱이 15개 업체, 기타 제조업이 42개 업체, 전기·전자 17개 업체, 복합 업종이 11개 업체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유치용지의 경우, 6필지 중 3필지(중국계 기업 2, 독일계 기업 1)가 매각되었다.

2007년에는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가동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시범단지 26개 기업과 본단지에 입주한 39개 기업 등 65개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가동 중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아파트형 공장(29개사)을 제외한 36개 업체의 총 투자액은 1,889억원으로 한 업체당 평균 5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화학업종이 1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 80억, 전기·전자 54억, 기계·금속 20억원 순이었다.

입주기업 투자액

(단위: 억원)

업종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업체수	12개사	2개사	17개사	5개사	36개사
총투자금액	963	324	332	270	1,889
업체평균투자액	80	162	20	54	52

- 주: 1. 투자금액은 2007년말 기준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2. 투자액=토지+건물+기계설비
 3. 업체당 평균투자액=투자금액/업체수
 4. 업체수 : 토지를 분양받은 36개사 기준(65개 가동기업중 아파트형 공장 29개사 제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가동률은 77.3%로 국내 제조업 평균인 83.7%보다 6.4% 낮으나, 국내 중소기업 평균인 70.0%보다 7.3%가 높다. 특히 1년 이상 가동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82.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 업종 분류

(2007.12.31 기준)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계	65	41	2	17	5
시 범 단 지	26	(주)삼덕스타필드 (주)신원에벤에셀 문창기업(주)개성	(주)태성하타 (주)지에스	(주)로만손 개성공장 (주)로잔 개성공장 (주)현진 개성공장 (주)엔·아트 동일정공(주) 대선테크(주) (주)픽시스 (주)에버존 아라모드시계(주) 개성공장 (주)개성대화 소노코쿠진웨어(주) 개성신영(주) (주)조민 P&P (주)대간실업 (주)호산에이스 (주)티에스피	개성부천공업(주) 솔루텍지에스(주) (주)제씨콤 개성 공장 (주)개성마이크로 (주)용인이엔티

업종 구분	계	섬유(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본단지 1 차	10	성화개성(주) (주)좋은사람들 개성공장 (주)진글라이더 개성코튼클럽(주) (주)평안 개성공장 (주)개성제일상품 (주)평화제화 (주)만선개성 (주)개성아트랑		케이엠에프개성	
본단지 1차 (아파트형 공장)	29	(주)에버그린 (주)개성스킨넷 개성티스포츠 (주)나인모드 가드뱅크 (주)엘고개성 (주)아이에스레포츠 (주)개성자수 제이패션 (주)아진개성 (주)개성쉬크베베 (주)진성산업 (주)드림에프개성 (주)동우 (주)개성창대어패럴 개성신한물산(주) (주)와이에스개성 (주)개성금담 (주)에스앤티스포츠개성 (주)신한모드개성 (주)광일 (주)개성성림 웅피 (주)신즈개성 청송 뷔에세 (주)새서울자수 (주)에이치디글로벌 (주)국제실크유통개성			

개성공단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누적 총생산액도 2007년 1월 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8개월만인 2007년도 9월 말에 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6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억 8,477만 달러를 생산

하여 총생산액은 전년도보다 약 150%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섬유 8,554만 달러(207% 증가), 화학 1,826만 달러(67% 증가), 기계·금속 4,194만 달러(101% 증가), 전기·전자 3,902만 달러(173% 증가)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 실적

(단위: 천 달러)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증가율)
섬유	6,780	27,793 (310%)	85,543(207%)
화학	1,768	10,900 (517%)	18,262(67%)
기계·금속	5,250	20,853 (297%)	41,947(101%)
전기·전자	1,108	14,191 (1,181%)	39,027(173%)
계	14,906	73,737 (395%)	184,779(150%)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2007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약 100% 증가한 3,966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업종별로는 화학 1,034만 달러(107% 증가), 기계·금속 2,396만 달러(86% 증가), 전기·전자 536만 달러(168% 증가)로 나타났다.

업종별 수출 실적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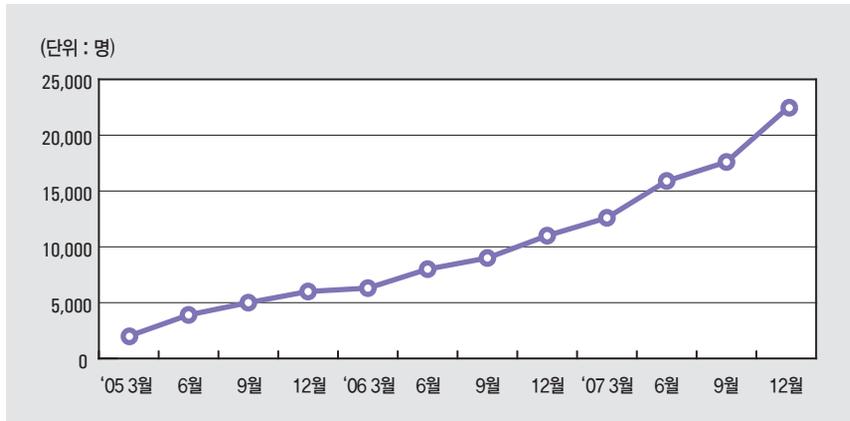
구분	2005	2006(증가율)	2007(증가율)
화학	538	4,974 (825%)	10,342(107%)
기계·금속	328	12,855 (292%)	23,967(86%)
전기·전자	-	1,996 (-)	5,360(168%)
계	866	19,825 (2,189%)	39,669(100%)

북한 근로자의 고용은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현 소노코쿠진웨어(주))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12월 말에는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가 모두 6,511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월평균 4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2006년 11월에 1만명을 돌파하였고, 2007년 11월 5일에 2만명을 돌파하였다.

2007년 12월 말 현재 북한 근로자 2만 2,538명과 우리측 근로자 7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분기별 북한측 근로자 증가 추이(누계)



2007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근로자 1인당 생산액은 평균 1,258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생산액은 신규 가동업체 및 기존 업체 신규 근로자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58달러(25.8%) 증가하였다.

2. 개성공단 지원 법·제도 정비

가. 남북 당국간 협의

분단지 1차, 2차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입주 가동기업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통신·통관의 3통문제 개선, 북한 근로 인력의 안정적 충원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개성공단사업 추진사례가 남

북공동변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성공단 경쟁력 강화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1단계 조기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조속히 완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7.12.20~21, 개성) 등 일련의 남북회담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2단계 개발은 2008년 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측량·지질조사를 2007년 12월 17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다. 북한 근로자의 적기 충원을 위한 숙소 건설, 근로자 출퇴근 도로 확충 및 통근열차 운행 문제도 합의하였다. 통행 시간을 확대하고, 전자출입체계(RFID)를 남북간 연계하여 출입업무와 출입심사를 전자처리하기로 하는 등 통행제도 개선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통관 검사 방식을 선별검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통관제도 개선조치에도 합의하였다. 통신은 2008년 내에 인터넷과 무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07.12.12~14, 판문점)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도 개성공단 통행·통신·통관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사업 진행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향이 합의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법·제도 정비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7년 10월 말까지 총 16개의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2007년 말까지 「부동산 등록 준칙」 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7개의 사업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업준칙과 일부 하위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북한측과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지원법의 기본 취지는 개성공단 투자자 및 근로자를 국내 공단에 준하여 지원·보호하자는 것이다. 지원법은 여야의 호응을 얻어 2007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25일 제정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원법 제정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기반시설을 국내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개성공단에 설립된 현지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각종 기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성공단 현지기업에 채용된 우리측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어 국내에 준하는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요지

- 공단개발 지원
 - 국내공단에 준하여 개성공단 개발에 대해 기반시설, 자금 등을 지원(6조)
- 현지기업 및 투자자 지원
 - 남측 주민이 투자한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에게 국내기업 지원제도 적용(7조 내지 10조)
 -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 허용 및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측 주민에게 조세 감면 혜택 부여(11조, 16조)
- 근로자 보호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국내 4대 보험 적용(13조)
 - 현지기업에 고용된 남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근로보호의 기본법률 적용(15조)
 - 개성공단 내 병원에서 남측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실시(14조)

□ 공단개발사업 관련 각종 기관 등 정비

- 공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정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4조)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법인격을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공무원·민간전문가 파견 및 자금·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18조 및 20조)
- 민법상 사단법인인 지원협회를 공법인인 지원재단으로 변경(19조 및 부칙 2조)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05년부터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판·검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에는 총 11회의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시행세칙, 관리위원회 사업준칙 및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현안문제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다. 사업 지원체계 강화

(1) 관리체계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현지에 설립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말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관리총괄부, 기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비서팀, 법무팀 등 5부 2팀의 체제를 갖추고 모두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협력부에는 5명의 북한측 인원이 근무

무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재단은 기존의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확대한 것으로 관리위원회의 남측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로 지원재단 이사장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상근이사가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서 관리위원회와 지원재단은 동일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은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9개 정부 부처 인원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사업지원단은 개성공단 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반시설 건설 지원, 협력사업 승인 및 조정, 기업 운영 관련 각종 제도 마련, 통행·통관 등 출입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및 판로 지원 등 당면 업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획 및 대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007년에는 범정부차원에서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주기업 지원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정책협의체 운영

개성공단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개성공단포럼 등이 개성공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협의체이다.

개성공단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각종 현안은 물론 중장기 발전과제들

을 협의하는 개성공단사업협의회가 2004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관리위원회와 사업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모두 41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관리위원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4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 18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는 전체회의와 상시 실무협의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였다.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채널이다. 2004년 10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는 약 30여 차례 이루어졌다. 사업지원단은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들은 북한측의 조치도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남북간 각종 회담을 통해 북한측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해 왔다.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 2004년 8월 발족되었다. 총 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개성공단포럼은 학계, 각종 연구소, 개발사업자, 관리위원회 등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으로, 정기 및 수시 정책 자문을 통해 사업 추진전략 수립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07년 1월 개성공단포럼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개성공단발전연구회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분야별로 자문활동을 수행하였다.

3. 기업 투자 환경

가. 통행·통관

(1) 통행절차 간소화

1단계 시범단지와 본단지 입주기업 공장들의 생산가동이 확대되는 등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원과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이 보다 내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는 통행을 07시부터 22시까지 하루 15시간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 출입을 위해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군당국간 출입 관련 통보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남북군사회담에서 통행 간소화를 위한 협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07년 12월 13일 체결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는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각각 개방하고 도로 통행시간을 늘리는 원칙에서 연간 통행시간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통행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날짜의 도로통행이 마감되기 3시간 전에 상대측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다시 승인을 받은 다음 통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회의('07.12.20~21, 개성)에서 개성공단 통행 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종전 08시 30분부터 17시 40분까지이던 통행시간을 07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평일에는 24시간 전에 인원 명단과 군사분계선 통과 날짜를 통보하고, 일요일에는 남북출입당국간 원활한 연락과 준비를 위해 48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며, 주요 명절과 기념일 등에 통행 시에는 남북이 상호 합의하여 편리하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휴일과 공휴

일을 포함하여 연간 80여 일간 중지되었던 개성공단의 연간 통행시간이 확대되었다.

통행·통관과 관련한 남북간 합의, 제도개선과 함께 기술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RFID(전자출입체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우선 2007년 초부터 개성공단의 상시출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수첩형태의 방문증을 보안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방문증으로 교체하여 출입수속시 심사소요시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이러한 전자방문증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차량에는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자동적인 출입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FID 태그 인식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여 민원인 뿐 아니라 담당 세관업무 효율도 높였다.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간에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 규정 시행세칙」을 협의·확정하고, 출입계획 통보, 출입심사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기 위한 전자출입체계를 2008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 출입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출입체계(RFID)가 북한측 지역에도 시행되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의 통행 편의성은 홍콩-심천 등과 같은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될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2007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이 시작되었다. 2007년 5월 17일 남북열차시험운행 이후 7개월 만에 개성공단 물류운반 등을 위한 화물열차 정기운행이 실현되었다. 현재 남북간의 물자운반은 약 96%가 해운을 통해 수송되어 높은 물류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에 따라 철도 물류체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물류수송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08년 내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열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문산-판문역-개성을 잇는 통근열차 운행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북한측 근로자 뿐만 아니라 우리측 근로자들도 열차를 타고 출퇴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통관절차 간소화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통행·통신·통관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북측 세관원이 일일이 입주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화물검사를 하는 현행 통관방식을 서류검사를 기초로 한 선별검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빠른 시일 안에 통관절차를 선별검사방식을 통해 간소화하고, 통관시간 단축을 위한 물자하차장을 2008년 중에 건설하며, 남북 세관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간 합의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내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제출서류 축소와 함께 차량 및 물자의 통행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우선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제출하던 ‘휴대품신고서’를 통일부와 관세청간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략하였다. 차량의 입·출경 시에 제출하던 출·도착 보고서를 폐지하였으며, 물자 반출입시 제출하던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 등을 전산을 통한 반출입신고서와 적하목록 신고로 대체하였다.

나. 노무관리

(1) 직무교육

입주기업은 북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에 인력 공급을 신청하고, 총국은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모집·공급하고 있다. 기업은 총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을



기술교육센터 행정동(좌) 및 교육동(우) 전경

대상으로 기능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합한 인력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로 채용되는 북한 인력 및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 11월 개성공단에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였다.

기술교육센터는 대지면적 23,142㎡, 건축면적 10,909㎡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2개의 강의 실습실, 대강당, 회의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1일 동시 교육 가능인원은 약 700여 명이며, 연간 4,000명의 기능인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가능하다.

(2) 근로조건

개성공단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실시한다. 기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입주기업은 노동규정에 따라 북한의 명절과 공휴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연간 14일의 정기휴가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보수는 노임과 가급금, 장려금 및 상금으로 구성된다. 월 최저노임은 관리위원회와 총국의 합의로 결정되며 전년도 최저노임의 5% 이상을 초과하여 인

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																						
이름	성명	부서	직책	근로계약종류	근로계약기간	시간제 여부	노동시간						로임			가급금	장려금·상금	월노동보수계	수표			
							가동보수	연장	야간		휴일근무	결근	지각	조퇴	외출					기본로임	초과로임	공제로임
									150%	200%												

복측 근로자는 노동보수 지불계산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월 노임액을 확인함

상할 수 없다. 2003년 9월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서 정한 북한 근로자의 월 최저노임은 50달러였는데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합의에 의하여 2007년 8월 1일부로 52.5달러로 인상되었다. 기업들은 노동보수와 별개로 월 노임총액의 15%를 익월 10일까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근로자들은 노동보수 중 약 30% 정도를 사회문화시책 기금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물(생필품)과 북한 화폐로 지불받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식시간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의료시설·체육시설 설치 등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금융지원 및 손실보조제도

(1) 금융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의 열악한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을 대출받아 초기시설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12월 말까지 시범단지 입주기업에 약 471억원,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약 282억원이 대출되었다.

그러다가 입주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기금 대출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경제 논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2006년 6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로 본단지 2차 입주기업부터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통해 시중금융기관이 소요자금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기업당 보증지원의 규모는 총 투자예정금액의 70% 이하, 국내 보증금액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 이하로 하며, 초기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이 보증지원 대상이다.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벤처·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담당하며, 보증업무 처리방식은 국내 기업과 동등하다.

(2) 손실보조제도

북한 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중단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액의 90%까지를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종의 손해보험과 유사한 손실보조제도는 기금과 기업간 손실보조약정 체결에 따라 시행되며, 약정금액은 기업당 50억원 이내, 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약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약정금액의 0.375%(대기업은 약정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보조수수료(일종의 보험료)로 매년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약정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결정하고, 기간만료 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

라. 원산지문제 해결 및 판로확보

개성공단이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고 입주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 11월 타결된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요한 선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5년 9월 1일 발효한 한국-EFTA(스위스, 노

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국-ASEAN FTA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2일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에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 기준하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특정 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합의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했다. 2007년에는 「2007 서울 국제 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28~3.3, 서울), 「프리뷰인 상하이」(3.26~29, 중국), 「2007 국제유통산업전」(5.23~26, 서울) 및 「프리뷰인 서울」(9.4~6, 서울), 「2007 부산 국제 신발·섬유패션전시회」(11.29~12.1, 부산) 등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입주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 활동을 펼쳤다.

마. 전략물자관리

정부는 다자간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해 개성공단으로의 물자 반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을 제정하여 전략물자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에 따라 입주기업은 전략물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기업의 관리담당자는 회사별

전략물자 관리대장을 비치해 수시로 전략물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주요물자 관리준칙」과는 별도로 전략물자 반출 및 사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24일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는 첫째,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반출품의 기술 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여부 등을 반출 승인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전략물자 반출 이후 10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수출통제품목의 반출과 관련하여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EAR 규정 준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관리규정상 수출통제품목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2006년 3월 통일부 고시인 「개성공업지구반출컴퓨터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정기적 점검 및 보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컴퓨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제3절 남북간 수송체계

1. 남북연결 철도·도로 사업

가. 남북열차 시험운행 실시

2006년 예정되었던 남북열차 시험운행(5.25)은 행사 전날 북한의 일방적인 통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통과하는 우리측 열차



제진역에 도착하는 북한측 열차

보로 돌연 취소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와 핵실험('06.10.9)으로 남북간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은 지연되었다.

2007년 2월에 개최된 6차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 평양)에서 상반기 내에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한다는 데 합의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4.22, 평양)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2007년 5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07.5.8~11, 판문점)에서 5월 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였다.

당초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1차 회의('07.4.27~4.28, 개성)에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열차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조치가 취해지면 다시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보장조치 이후 제1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2차 회의('07.5.14, 개성)에서 열차시험운행의 명칭 및 날짜, 참가인원 및 참가급수, 시험운행 시간과 구간, 시험운행 방식, 시험운행 행사, 시험운행 일정 등이 포함된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5월 17일 역사적인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였다. 경의선은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우리측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에서 제진역으로 북한측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운행됨으로써 분단 이후 60여년 만에 남북의 기차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나. 남북철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정례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철도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했다. 이에 따라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0~21, 개성)을 개최하여 남과 북의 분계역에 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2005년 8월 1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 열차운행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철도 운영을 위한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1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1, 개성)에서 화물열차 운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화물의 인수인계 등 세부적인 처리방법과 남북열차운행사무소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북한 판문역에 남북열차운행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남북화물열차 개통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합의한 이후,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실무접촉('07.11.20~21, 개성)에서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에서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11.27~29, 평양)에서는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제1차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07.12.1, 개성)에서 열차운행에 대한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매일 1회, 총 12량(기관차 1, 화차 10, 차장차 1)의 차량을 편성하여 오전 9시에 남측 도라산역을 출발하고, 오후 2시에 북측 판문역을 출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35차 군사실무회담('07.12.5, 판문점)에서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화물컨테이너 상차



남북 화물열차 개통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 남과 북은 북한 판문역에서 화물열차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영을 시작하였다. 남북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한달 간 28회(편도 기준) 운행하면서 총 219.5톤의 철도화물을 운송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180톤,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39.5톤이었으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와 대북 식량지원 물자를 수송하였다.

라.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신의주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및 2008 베이징올림픽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이용을 위한 철길보수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실무접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성-신의주 구간(412km) 철도 개보수를 위하여 남과 북의 철도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열차로 이동하면서 선로 전반과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을 조사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1차 조사결과와 북측이 제공한 자료를 종합하여 2차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량과 터널 등 구조물과 노반 설계를 거

쳐 개성-신의주간 개보수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총리 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07.11.28~29, 개성)에서 2008년 중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착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완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2007년 12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쌍방 합의하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008년 2월 예정)에서 개보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남과 북의 도로분야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개성-평양 고속도로 포장분야와 구조물 분야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제1차 현지조사를 통해서 포장·교량·터널 등 세부 조사 대상 구간을 선정하였고,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26명이 참가한 제2차 현지조사('07.12.21~27)에서는 구간별(개성→사리원, 사리원→평양), 분야별(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등)로 남북 공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차량 및 검사 기재를 활용한 점검과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구간의 교량, 터널, 포장, 사면 및 배수 등에 대한 세부조사도 병행하였다.



개성-신의주 철도 현장조사



포장 지지력 측정



교량 상부 점검

2. 해운 및 항공협력

가. 해운협력

2005년 8월에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우리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와 북한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 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어 남과 북의 국적선이 운항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4월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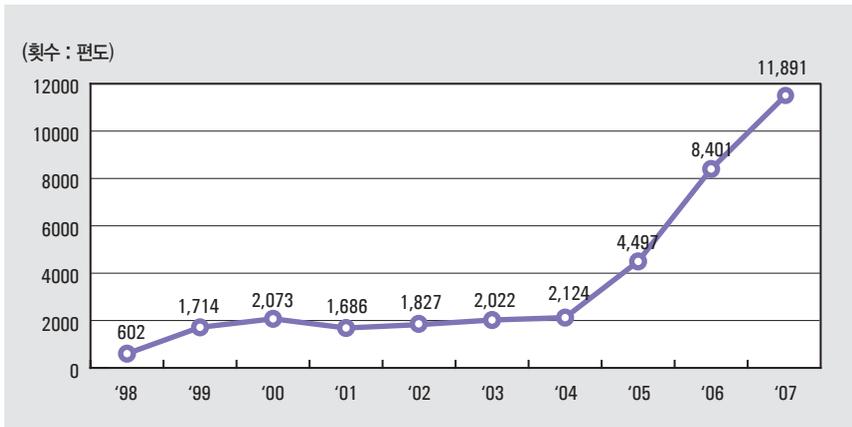
2007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11,891회로 전년대비 41.5%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측 선박의 북한으로의 운항은 11,682회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으로의 운항은 209회로 전년대비 63.3% 증가하였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05.8) 이후 2007년 12월까지 북한 선박은 우리측 해역을 총 534회 운항하였다. 이 중 남한-북한 항구간 운항은 260회, 북한-북한 항구간 운항(예: 서해 남포 ↔ 동해 청진)은 274회였다.

2005년 8월부터 남과 북의 해사당국(남: 통일부, 북: 육해운성)은 전화 1회선과 FAX 1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 해상항로대를 이용하는 선박의 운항 허가 및 이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

며, 해양사고 또는 긴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통보하는 등 쌍방의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선 및 해운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12.25~28, 부산)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및 통항질서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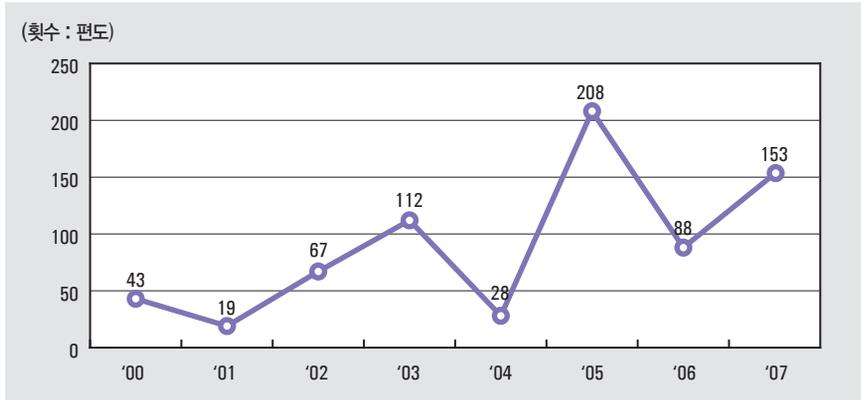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나. 항공협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서울-평양간 남북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남북회담 등 각종 계기시 부정기적으로 운행되어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 하반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당국간 회담과 민간행사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2006년 88회 대비 73.9% 증가한 153회로 늘어났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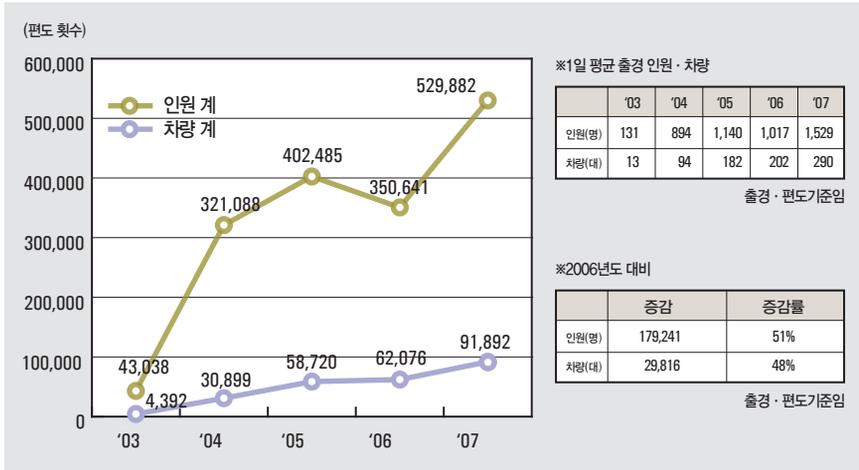
3. 육로 출입시설 및 통행체계

가. 육로 출입시설 확충

2007년 육로를 통한 방북인원 및 통행차량은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대외환경 개선, 남북관계 진전 등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선 도로를 이용한 방북인원은 총 529,882명으로 2006년 350,641명 대비 51%가 증가하였다. 이 중 144,971명은 경의선 도로를 통해, 384,911명은 동해선 도로를 통해 북한을 다녀왔다. 육로를 통한 방북차량은 91,892대로 2006년도 62,076대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이 중 71,857대는 경의선 육로를 통해, 20,035대는 동해선 육로를 통해 북한을 왕래하였다.

이처럼 확대되는 남북간 교류협력에 맞추어 정부는 출입시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2005년, 2006년에 경의선과 동해선에 각각 철도 및 도로의 출입시설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12월 10일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일원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경의선 물류센터(일명 도라산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경의선 물류센터에는 컨테이너야드, 화물창고, 동·식물 검역시설, 인

방북인원 및 통행차량의 육로 출입 추이



입철도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화물통관, 물류기지, 동식물 검역, 철도차량 정비 등이 가능하다. 앞으로 경의선 물류센터는 화물통관장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통관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그리고 동해선 물류센터는 2009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해선 물류센터도 경의선 물류센터와 함께 남북한 교역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물류 기반시설로 역할을 할 것이다.



경의선(도라산)물류센터 준공식

출입시설 현황

구분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부지면적/동수
경의선 (도라산)	철도출입시설	11,048㎡	'04.9 ~ '06.4	442,015㎡ (36개동)
	도로출입시설	16,957㎡	'04.9 ~ '06.5	
	물류센터	19,227㎡	'05.10 ~ '07.12	
동해선 (고성)	철도출입시설	6,706㎡	'04.9 ~ '06.4	294,933㎡ (15개동)
	도로출입시설	14,055㎡	'04.9 ~ '06.5	
	물류센터	9,474㎡	'06.12 ~ '09.6(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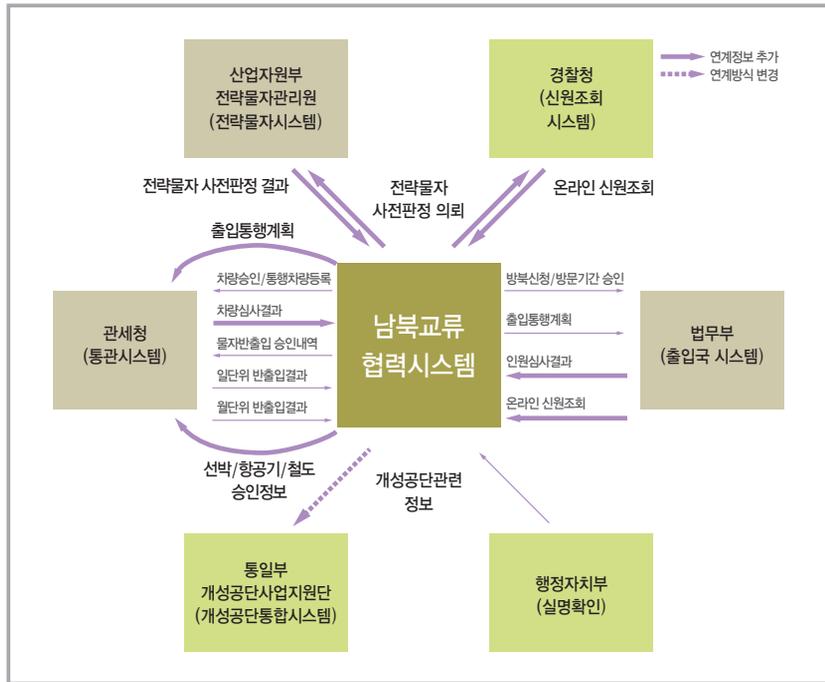
나. 육로 통행체계 개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하드웨어와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법무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였고, 전자식 방문증과 차량운행승인증을 도입하여 전자출입체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간 출입통행을 위한 법무부의 출입심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출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남북간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심사결과를 즉시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심사가 가능해졌으며 민원서류도 간소화됨으로써 민원인 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방문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기존에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하였으나 지금은 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그 결과를 확인 처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연계망



앞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전자통행시스템 운용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스마트카드형 방문증과 여권형 방문증(e-passport)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카드형 방문증은 유효기간이 5년인 방문증으로 신용카드와 같은 크기로 내부에 72KB 용량의 정보저장 칩을 사용하여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자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문인식 등 무인자동심사시스템 도입에도 대비한 것으로 수시 방북하는 협력사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권형 방문증은 표지에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브랜드로 통행·통관·통일의 관문을 상징하는 「통통」을 삽입하였고, 내부에 RFID 태그(1KB)를 사용, 인적사항 등을 전자 인식하도록 제작했다. 회담 및 인도인수 참여인원처럼 연 2~3회 정도 방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차량운행승인증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성공단 출입차량 운행승인

증과 같은 형식의 스마트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방북하는 운전자는 차량전면 중앙에 차량운행승인증을 부착하고 남북출입사무소 차량 출입심사대에 진입하게 되면, 전자출입시스템(RFID)으로 차량 정보를 자동 인식하고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 12월 3일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차량운행 승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남북간 출입통행시간 연장 등에 따라 경의선 및 동해선 지역 남북관리구역 가운데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경비·안전장치 보강 설치작업을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였다. CCTV, 모니터, 비상전화를 교체·신설함으로써 이 지역의 경계 및 안전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차량운행 승인증



제4절 남북관광협력

1. 금강산 관광

금강산관광은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의해 기업인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그 해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 사업에 합의하고 11월 18일에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장전항을 향하여 첫 출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9월부터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됨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해로 관광은 중단되었다. 2002년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했던 금강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참여, 정부의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 현대아산의 자구책 마련 등으로 2004년부터 정상화되었다.

2007년 상반기에는 북핵실험의 여파로 관광객의 큰 증가는 없었으나 6월부터 내금강 관광이 개시되고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호전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 6월 들어서 1998년 금강산 관광 시작 이후 누적 관광객이 150만명을 돌파하였다. 10월 한달 동안의 관광객이 1998년 이후 최고치인 63,000여 명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7년 한해 동안 34만 5천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현황

구분	'98.11~12	'99	'00	'01	'02	'03	'04	'05	'06	'07	총계
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734,696

※ 이산가족행사 및 남북공동행사 등을 위한 금강산지역 방북인원은 제외

2007년 6월 1일부터 2박3일 일정의 내금강 관광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외금강 지역 위주의 관광코스가 내금강까지 확대되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편의 시설과 기반시설이 확충되었다. 2006년에 외금강호텔, 농협 금강산지점 개장에 이어, 2007년 5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금강산 면세점이 개장되었고 11월에는 (주)한국엘피가스의 가스충전소가 준공되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난방·온수 사용을 위한 무공해 연료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금강산에 골프장도 만들어졌다. (주)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골프·스파 리조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7년 10월 시범경기를 개최하였다. 골프장은 2008년 상반기 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불교사찰인 신계사 복원공사를 4년여 만에 마무리하고 2007년 10월 13일 낙성식을 개최하였다.

현대아산은 2007년 12월 북한측 관계자들과 비로봉 답사를 실시하였다. 비로봉은 그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구간으로 이번 답사를 통해 비로봉 관광계획이 구체화되고 빠르면 2008년 상반기 중 비로봉 관광이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현대아산은 북한측과 함께 「금강산 관광지구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왔으며, 10월에 최종안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금강산개발 종합계획은 북한측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강산개발 종합계획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2조 1,244억원(22억



내금강 관광사진

6천만 달러)을 투자(관광시설 1조3,997억원, 기반시설 7,247억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고성군, 금강군, 통천군, 원산시 일원에 10개의 관광특화지구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여 2007년 12월에 개성에서 북한측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와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승인·등록 등 행정지원 업무 △소방·안전 등 시설물 관리 △출입절차·수속, 인프라 건설지원 등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한 지원업무와 금강산 특구의 체계적 개발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 개성 관광

2005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개성 시범관광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3차에 걸쳐(8.26, 9.2, 9.7) 1,600명이 고려 성균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의 시범관광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서 북한 아태는 현대아산과의 내부갈등을 이유로 현대 아산과 맺은 관광사업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 존중'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북한측을 설득함으로써, 현대 아산과 북한 아태는 2007년 11월 3일 「남북관광협력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개성관광은 2007년 12월 5일부터 1일 300여 명 규모로 실시되고 있으며,



개성관광 개시



선죽교 관람

2007년 12월 말까지 7,400여 명의 관광객 수를 기록하였다. 사업자인 현대는 관광객의 증가추세 등 사업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1박2일 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개·보수 투자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백두산 관광

2005년 7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북한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백두산 관광실시에 합의하고, 관광도로 및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을 위한 자재 제공, 현지 기술협력 및 시범관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백두산 현지 기술협력과 시범관광은 지연되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백두산간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 실시에 합의하면서 다시 백두산 관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 3일 현대 아산과 북한측 아태는 2008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 실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및 통일부, 문광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백두산 현지에 대한 사전답사(11.27~12.1)를 실시하고 백두산 지구의 관광자원 현황 및 관광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삼지연 공항의 항행안전시설과 활주로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제5절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1. 추진경위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7.12, 서울)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한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0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10.28, 개성)를 비롯하여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그 후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6.3~6.6, 제주)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시 등 여건이 조성되는 때에 합의서를 발효하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부터 우리측이 북한에 미화 8천만 달러 상당의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한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그 대가를 상환(당해년도 3% 상환, 잔여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않은 가운데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발효되지 못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집중되면서 6자 회담에서 「2.13 합의」가 이루어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재개되면서 2007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4.18~22, 평양)를 통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남북은 각각 이행기구(우리측: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측: 명지총회사)를 지정하고, 세부합의서 채택을 위해 이행기구간에 2차례의 실무협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제2차 이행기구간 실무협의(7.5~7, 개성)에서 우리측은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39품목, 신발 49품목, 비누 7품목)를 2007년 11월 말까지 북한측에 제공하고, 4회에 걸쳐 경공업 현장을 방문, 기

술지원하며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3차례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2. 추진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우리측은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 제공과 관련하여 전체 미화 8,000만 달러분 중 87%(6,993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였다. 당초 2007년 11월 말까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규격수정 협의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약 224만 달러)분 추가제공 문제 등으로 지연되었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3차례의 기술지원(1차: 8.7~11, 2차: 10.23~27, 3차: 12.3~8)을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10여 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북한의 생산공장(평양방직공장, 평양편직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보통강신발공장 등)을 방문하고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측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겪는 문제점 등을 협의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북한 단천 지역의 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및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 등 3개 광산에 대해 3차례(1차: 7.28~8.18, 2차: 10.20~11.7, 3차: 12.20~26)의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측은 현지공동조사를 위해 15~17명의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북한 단천지역 3개 광산에



대흥 마그네사이트 노천광산 전경



검덕, 대흥, 룡양 광산 채취광물 샘플



보통강신발공장 신발 생산현장



평양화장품공장 비누 생산현장

대한 현장조사와 주변의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고 남북 전문가간 분야별 협의도 실시하였다.

정부는 3차례 현지 공동조사결과를 토대로 3개 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투자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국내 투자희망업체를 모집하고, 투자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과 관련하여, 북한측은 2007년도 상환분(8,000만 달러의 3%, 240만 달러)을 2차에 걸쳐('07.12.14, '08.1.4) 아연괴 약 1,000톤으로 상환했다. 우리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대가에 대한 북한측의 상환은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차관 제공 후 처음으로 북한측이 상환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6절 기타 남북경협

1. 조선업 협력

남북조선협력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남북간 조선협력은 우리 조선업계의 호

향으로 해외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날로 악화되는 해외투자 여건에서 벗어나 남북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하였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고, 남포시 영남배수리공장의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에서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적극 협력하고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에 실시하기로 하며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된 필요한 제도적 장치(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07.12.25~28, 부산)를 통해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투자환경의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를 논의하고, 2008년 1/4분기에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며, 3월 중에 차기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담기간 중 회담 참가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선박 건조 과정을 시찰하였다.

남북간 합의에 따라 남북조선협력 대상 지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현지조사에서는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조선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안변과 남포지역을 방문하였다. 조선업체에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 SLS, 대한조선, 씨앤(C&)중공업과 기자재, 블록 제작업체 등이 참여하였다. 현지조사단은 북한측이 제시한 부지를 현장 방문하여 지형, 기상조건, 배후시설 등 입지여건과 도로, 항만, 전력 등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였다. 남포지역에서는 서해갭문 밖의 황남 서해리 일원과 갭문 안의 영남배수리공장 및 배후부지를 실사하였고, 안변지역에서는 월랑리 일원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북한측 조선 관계자와 조선협력단지 건설·가동을 위해 필요한 투자환경의 법적·제도적 보장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병행하였다. 제2차 현지조사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었다. 2차 합동조사단은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협력단지의 부지여건 외 전력, 용수, 인력 등 산업 인프라 현황을 정밀 조사하였다.

2. 수산업 협력

남북간 수산업협력은 남북 어민들의 소득향상 및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005년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05.7.25~27, 개성)에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이용, 제3국 불법 조업 어선 출입통제 협력, 우량품종 공동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진출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수산업협력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측이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 등 군사적 문제 선결을 주장함에 따라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7년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07.4.18~22, 평양) 수산업협력 실무접촉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07.11.14~16, 서울)에서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별도로 협의,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 내에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또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07.11.27~29, 평양)에서 남과 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 설정 위치에 대한 이견 등으로 추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07.12.4~6, 서울)에서 남과 북은 2005년 제1차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한측 동해의 일정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 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07.12.14~15, 개성)에서는 2008년 중에 북한측 동해수역의 일정 어장에서 우리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협력대상 수역 선정, 입어료에 해당하는 어구자재 등의 제공 및 어장이용 조건과 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수산물 생산과 가공, 우량품종 개

발, 양식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협력대상과 규모, 방법 등을 협의, 확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농업 협력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기존의 일회성 대북지원에서 벗어나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인적·물적 상호교류를 수반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남북간 농업협력을 논의할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4, 서울)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2005년 8월 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남과 북은 시범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분야 지원 및 협력,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및 양묘장 건설과 병충해 방제협력 등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속적인 농업협력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와 핵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당국간 사업에 앞서 민간 전문단체(통일농수산사업단)를 통해 간접적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5년부터 금강산 지역에서 삼일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남한의 농자재·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을 결합한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측의 우수 벼종자와 다수확 발작물 종자로 시범 재배한 결과 농작물 생산량이 20~30%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금강산지역에 금천리 협동농장을 설치하고, 2007년에는 개성지역에까지 공동영농사업을 확대(금강산 지역: 2,500ha, 개성지역: 506ha)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성 및 자생력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북한 농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농수산 협력을 위한 당국간 협의창구를 마련하였다.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회

의('07.12.14~15, 개성)에서는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검역체계 확립 및 농업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축산분야 협력을 위해 두 차례의 실무접촉을 개최(11.5, 12.18)하여 평양시 장남군 고읍리 인근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 규모로 양돈장을 건설하는 양돈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차관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양돈 전문가들과 함께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돈장 예정부지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여 북측 양돈전문가와 함께 양돈시설 설계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1990년대 후반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수해(재산피해 9천억원, 사망 116명)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1999년 8월에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9.1,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고, 김용순 특사 방한시('00.9.14)에는 2000년 내 남북 공동조사 실시 및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2004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3.2~3.5, 서울)에서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제3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04.4.10, 개성)에서는 단독조사 항목 및 조사용 기자재 대북 제공, 북한측의 사전자료 목록 제공 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측에 현지조사용 기자재 33종을 제공하였다. 2005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7.9~12, 서울)에서 단독조사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상호 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를 진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동년 8월 10일에 단독조사 결과를 북한측에 전달하였고 북한측은 12월 23일에 우리측 경험협회사무소를 통해 임진강유역 상류지역의 단독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다. 2006년 제1차 임진

강 수해방지실무접촉(6.26~27, 개성)에서는 공동조사문제, 홍수예보체계구축 및 산림복구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5) 및 핵실험('06.10.9)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07.4.18~22, 평양)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해 우리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임진강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기 위해 북한측과 6차례에 걸쳐 문서교환방식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임진강 홍수예보체계 구축, 황폐지 산림복구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발효절차와 관련한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다가 의견접근을 보였다. 우리측은 하루속히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합의서를 타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경추위 등 상위회담이 개최된 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다시 합의서 채택이 지연되었다.

그 후 우리측은 「2007 남북정상회담」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이어 개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07.12.28~29, 개성)에서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이른 임진강 수해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에 대한 서명·교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5.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사업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2006년 10월 북핵실험으로 주춤하였으나 2007년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북사업 재개 및 신규 투자 상담이 늘어났고 경협사업자의 방북도 늘어났다. 방북 횟수의 경우 1월 이후 매월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경협 관련 방북자 수는 2006년에 비해 30% 증가한 2,241명을 기록하였다. 남북간 경제협력사업 승인 건수

는 1995년 대우의 남포공단 협력사업 승인 이후 총 51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승인이 취소되어 2007년 12월 말 현재 48건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2007년에 승인 받은 협력사업은 한국엘피가스(6.25), 두담(7.23), 개성관광(12.4), 아스트라(12.12), 한국체인(12.31),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12.31) 등 6건이다. 이들 48개 협력사업의 투자액은 승인기준으로 5억 7,883만 달러이고 실제 투자액은 2007년 말 기준 3억 7,853만 달러이다. 투자된 금액을 분야별로 보면 금강산관광에 약 3억 달러, 평양 등 내륙지역의 제조·서비스업에 8천만 달러, IT분야에 207만 달러 등이다.

주요 경제협력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태창은 2007년 1월 회사명칭을 일경으로 변경하고 금강산 샘물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생수를 육로로 반입하여 국내에 시판하였다. 2007년에는 추가로 3호정을 개발하여 월간 생산능력을 2,000톤으로 확대하고 생수 3,000톤을 반입하였다.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평양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준공한 이후 2007년 12월까지 총 1,075대의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였고, 이 중 948대를 북한에 판매하였다. 현재 조립생산 외에 자동차 수리정비, A/S 부품판매, 휘발유 판매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2007년 4월부터 정촌 흑연광산의 전기공급을 정상화하고 본격 가동하여 흑연정광 750톤을 생산하고, 이 중 인상흑연 550톤을 국내에 반입하였다. 안동대마방직은 5월부터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공장 4개동의 외관공사와 전기시설 공사를 마치고 육로로 설비를 반출하여 직기를 안장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태림산업은 2007년 6월 석산 추가개발에 따라 투자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협력사업 변경승인(투자금액 증액, 295만불→500만불, 투자형태 합작→합영)을 받았다. 이후 12월에 장풍석산 개발 준공식을 가졌으며, 2007년에 경계석 3천개, 사고석 15만개, 자연석 4톤을 반입하였다. 대동무역은 북한측과 상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고 처음으로 판매용 500ml 페트병 강서청산수 136,200개를 국내에 반입하였다. 제일유통은 개풍군 묘목장을 관리하면서 과수재배(대동강구역)와 축산(평양 중화군) 분야로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엘피가스는 11월 30일 금강산관광지구에 가스 충전시설을 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IT분야는 초기 투자비가 적은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도 정보기술 습득에 관심이 많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KT, 아사달 등은 북한측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비즈닷컴은 북한측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합영회사를 중국 단둥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70개의 과제를, KT는 2004년부터 16개의 과제를 개발하였다.

일반 경제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대우	1995.5.17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512	512
일경	1997.5.22→2005.11.23	금강산 샘물 생산	980	980
녹십자	1997.11.14	혈전증 치료제 사업	311	201.8
(주)아자커뮤니케이션	1998.2.18	인쇄물 및 TV 광고 제작	25	0
미흥식품	1998.3.13	북한 수산물 채취·가공	47	6.4
국제옥수수재단	1998.6.18	신품종 옥수수 개발	2,160	715.5
두레마을영농조합	1998.7.27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	200	0
태영수산/LG	1998.8.28	가리비 양식생산	65	1.3
(주)코리아랜드	1998.8.28	북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60	20
백산실업	1998.8.28	버섯류 생산·수출	20.8	0
평화자동차	2000.1.7	자동차 수리·개조 및 조립	5,654	2,608.7
G-한신	2001.10.16	북한 내 유리제품 생산시설 설립 운영	560	215.7
국양해운	2001.11.21	해상 운송사업 및 하역시설 개선사업	619	118
(주)유니코텍코리아	2002.8.7	발포수지 성형사업	51.8	51.8
평화항공 여행사	2003.8.25	평양 관광	0	0
대한광업진흥공사	2003.10.4	정촌 흑연광산 개발	510	509
G-한신/경평인터네셔널	2004.3.20	식품가공공장 설립 및 가공식품 생산	240	95.2
(주)안동대마방직	2004.9.17	삼베섬유 제조	1,000	1,000
(주)서진 인터크루	2004.7.7	핸드백 등 피혁제품 제조	800	0
제일유통	2004.8.21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54.6	1.0
상하씨엠	2004.9.17	농수산물 및 토산품 가공공장 설립·운영	5	0
(주)제이유네트워크	2004.12.30	김치제조 공장설립 및 유통·판매	160	72
아이니무역	2005.6.15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15	15
(주)쓰리엔테크놀러지	2005.12.27	기계제품 생산·판매	350	0
(주)대동무역	2005.11.10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250	250
(주)태림산업	2005.12.1	석재 가공 및 판매	500	495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제일유통	2005.12.30	나무재배 및 판매	26	23
제일유통	2005.12.30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164	14.7
제일유통	2005.12.30	소사육 생산 및 판매	30	3
현대아산	2006.6.22	남북사이 왕래되는 견본품 운송사업	11	8
(주)두담	2007.7.23	개성공단 식자재 공급 사업	50	20.9
현대아산	2007.12.4	개성 관광 사업	1,100	28
(주)아스트라	2007.12.12	무연탄 가공, 생산 및 판매	1,000	53.5
주)한국체인	2007.12.31	북측 기념품 및 농임특산물 가공, 판매	250	0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2007.12.31	북측 인삼재배, 가공 공장 운영 등	285	0
계		35개 업체	18,066.2	8,019.5

금강산 관광지구 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1998.9.7	금강산 관광사업	30,286.5	22,633.0
				2,585.9 (현대아산 협력업체)
에머슨퍼시픽	2005.12.30	금강산 골프 스파 리조트 건설, 운영	7,230	4,252.7
주)한국체인	2006.5.8	금융업	500	58.6
한국엘피가스	2007.12.31	금강산 관광지구내 가스충전 및 공급사업	200	96.6
계		4개 업체	38,216.5	29,626.8

IT 협력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승인일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대가등
KT, 온세통신	1998.11.11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47.5		
삼성전자	2000.3.13	S/W 공동개발	554		510.3
하나비즈닷컴	2001.7.18	프로그램 공동개발	200		184
엔트랙, IKD그룹	2001.8.22	평양고려정보기술센터건립	400	170.2	
KT	2004.7.23	S/W 공동개발	129.4		127.9
에스피메디텍	2004.9.17	의료 S/W 개발	159	6.7	
알티즌하이텍	2005.9.21	CTP 인쇄기 개발	10	9.6	3.6
아사달	2006.7.5	디자인 콘텐츠 제작	32.8		11.7
경기디지털 콘텐츠진흥원	2006.8.23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1.3		1.3
계		9개 업체	1,534	186.5	838.8

취소사업

(단위 : 만 달러, '07.12.31 기준)

업 체		사업내용	승인액	투자액	용역대가등
(주)훈넷	2001.12.29 승인 2004.1.19 승인 취소	인터넷 게임 S/W 공동개발	20	20	
브이케이(주)	2004.9.23 승인 2006.11.1 승인 취소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	43.3		11.4
(주)스튜디오투모로우	2005.6.1 승인 2007.5.18 승인 취소	애니메이션 제작	3.8		1.0
계		3개 업체	67.1	20	

평화통일을 위한 8·15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E
블록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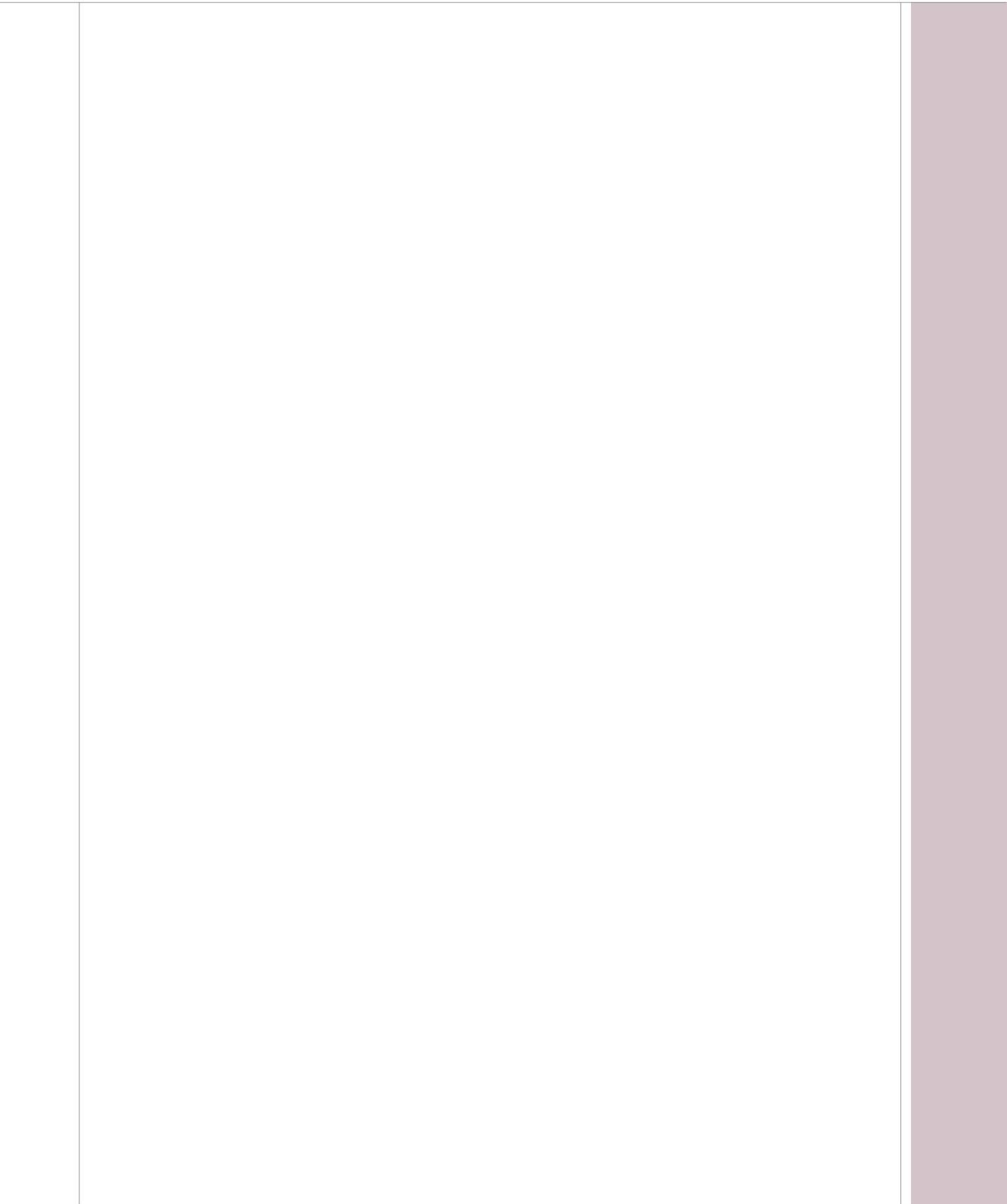
민족대축전



제4장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 제1절 남북공동행사
- 제2절 문화예술 교류
- 제3절 역사·학술 교류
- 제4절 체육교류
- 제5절 종교교류
- 제6절 지방자치단체 교류



제4장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교류협력 과정에서 서로의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양식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간에 신뢰를 높여주고, 나아가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간 문화·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화된 사회문화교류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체된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까지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사회문화분야 남북왕래 인원

(단위: 명)

구분	분야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방북	교육학술	19	21	1	76	76	68	360	797	273	273	827	2,783
	문화예술	17	87	92	25	134	513	34	784	286	138	271	2,395
	체육	187	0	163	446	310	326	1,190	5	799	266	1,198	4,890
	종교	9	-	39	47	86	165	584	376	1,231	788	4,899	8,275
	언론출판	11	48	14	143	82	84	253	107	1,122	487	289	2,630
	과학기술	12	31	16	8	13	37	51	121	0	43	135	345
	기타	446	1	1	476	2,215	1,308	923	1,367	7,066	2,266	4,720	20,789
방북 소계		701	239	330	1,150	2,916	2,501	3,395	3,557	10,777	4,324	12,217	42,107

구분	분야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방남	교육·학술							18	41		21	19	99
	문화예술	33			336				141			30	540
	체육	148		62		1	765	717		78	4	213	1,988
	종교												0
	언론·출판									60			60
	과학기술												0
	기타	353			68	31	172	206	98	537	268	221	1,954
방남 소계		534	0	62	404	32	937	941	280	675	293	483	4,641
합계		1,235	239	392	1,554	2,948	3,438	4,336	3,837	11,452	4,617	12,700	46,748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단위: 건)

연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협력사업	2	1	5	5	5	6	7	13	16	47	26	20	153
협력사업자	2	1	7	7	8	4	5	12	14	47	25	19	151

2007년에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인적왕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한 해 동안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북왕래인원은 498건 12,700명으로 2006년(333건, 4,617명)과 비교할 때 왕래인원이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종교·체육·학술분야의 교류가 두드러졌다.

남북 인적교류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온 남북공동행사는 2007년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6월 평양에서 개최된 「6.15민족통일대축전」에서 귀빈석(주석단) 배치문제로 행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다가 마지막 날에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북한이 불참의사를 통보해옴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나 「6.15민족공동위원회」 산하의 노동·농민·학술·언론·교육 등 직능별 공동행사는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회문화 협력사업의 경우 신규 승인건수는 20건으로 2006년(26건)에 비

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신계사와 봉수교회 복원·재건사업,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사업 등 중장기 사업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남북언어 통합차원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2007년 4월 27일 제정·공포되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2007년에 네 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열렸다.

종교분야 교류에서는 기존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각 종단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꾸준히 전개된 가운데, 남북 종교인간의 개별접촉을 넘어 연합기구간 연대를 모색하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조선종교인협의회간 종교교류 1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 완료되었고, 2005년부터 추진해 온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도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2008년 상반기 중에 헌당예배를 가질 예정이다. 2005년 10월 복원된 개성 영통사에서는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지순례가 실시되었다.

체육분야에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청소년축구팀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제주·광양 등지에서 장기 전지훈련을 가졌고, 이어 유소년 축구팀이 네 차례에 걸쳐 남북을 오가며 교환경기를 가졌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사회문화교류 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그간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회문화교류가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총리회담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2007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명·사업내용 (→변경내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충북 제천시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	삼일포농장 관리사 전력시설 설치, 사과축제행사 등 문화교류협력, 신계사관광, 농장 운영 등	'04.3.24 ('04.3.24)~('07.9.12)
6.15 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6.15북측위원회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위원장 회의 (남, 북, 해외 참가) 개최	'05.12.8 ('07.3.2)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성헌)	민족화해협의회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남북 협력사업	'06.2.22 ('07.1.1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개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개성역사유적 보수관리를 위한 물자 지원 추가 →사업기간을 '06.9.2까지에서 '07.7.13까지로 연장	'06.6.20 ('06.6.20) →('06.7.6) → '07.5.2)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 (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문화보존지도국 등	고구려 벽화무덤 남북공동 보존사업	'06.4.3 ('07.5.25)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삼천리 총회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교육 ① 3D그래픽 전문가 교육(6개월, 30명) ② 임베디드 전문가 교육(3개월, 30명)	'07.2.9 ('07.2.9)
(주)통일뉴스 (대표이사 이계환)	조선6.15편집사	남북이 각각 상대측 제공용으로 제작한 기사,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이메일로 교환, 홈페이지에 게재	'07.3.16 ('07.3.16)
(주)PMGnetworks (대표 신주선)	재일본조선인연 합회 「금강산가 극단」	① 금강산가극단공연 “장새남과 함께하 는 민족배합 관현악의 밤”	'07.4.3 ('07.4.3)
		② 금강산가극단 음반 제작	'07.4.3 ('07.4.3)
민족21 (대표 안영민)	민족화해협의회	6.15 7돌 기념 평양-남포 자전거 평화행진	'07.4.5 ('07.4.5)
(재)천주교서울대교구민족 화해협의회 (대표자 정진석)	조선가톨릭교협 회 중앙위원회	평양 장충성당 주일학교 건립 지원	'07.4.6 ('07.4.6)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임종석)	내각산하 저작권 사무국	음반 제작사업	'07.5.4 ('07.5.4)
(사)남북체육교류협회 (대표 김경성)	4.25체육단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환 경기	'07.5.23 ('07.5.23)
▲(사)한국풍력에너지학회 (대표 손충렬)	삼천리총회사	북한지역 풍력자원 공동조사	'07.5.29
▲(사)한국항공스포츠협회 (회장 오세훈)	민족화해협의회	남북종단 비행 (평양-서울)	'07.6.1
(사)평화3000 (대표 신명자)	평양시체육단· 조선가톨릭협회	남북축구단 친선경기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포함	'07.6.22 ('07.6.22)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명·사업내용 (→변경내용)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PMGnetworks (대표 신주선)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금강산가극단」	「금강산가극단」 무용단, “조선무용 50년 -북녘의 명무” 서울 공연 →5개작품 삭제, 3개작품 추가, 공연횟수 증가, 영상물제작 추가	’07.7.10 (’07.7.10) →(’07.9.28)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허상만)	민족화해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대복지원	’07.9.11 (’07.9.11)
남북체육교류협회 (대표 김경성)	4.25체육단	태극 차이퐁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참가(10.20~27)	’07.9.27 (’07.9.27)
(사)한국권투위원회 (대표 박상권)	조선프로권투협회	제6차 남북프로권투대회 (개성) 개최	’07.10.5 (’07.10.5)
(재)순복음선교회 (대표자 조용기)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	’07.11.5 (’07.11.5)
안성시(시장 이동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병모)	민족화해협의회	전통 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북한측 지역 공연	’07.11.7 (’07.11.7)
▲(주)PMGnetworks (대표 장현석)	조선국립민족 예술단·조선미술 박물관	민족가극 「춘향전」 내한공연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 남한지역 전시회 및 조선미술박물관 현대화 사업	’07.11.29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위원회(위원장 서중석)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남북역사용어 공동연구	’07.12.3 (’07.12.3)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회장 염무웅)	6.15민족문학인 북측협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 창간	’07.12.31 (’07.12.31)

- 주1) ▲는 협력사업자 승인만 받고 협력사업 승인은 받지 못한 단체
주2) →는 기 승인된 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경우(내용 및 일자)

제1절 남북공동행사

1. 6.15 공동행사

2007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남한 백낙청 대표 등 57명, 북한 안경호 위원장 등 20명, 해외 문동환·곽동의 공동위원장 등 22명, 총 99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 결

과 ① 6.15공동행사는 평양에서, 8.15행사는 남한에서 개최하고, 과거보다 더욱 폭넓고 성대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한다. ② 부문별·계층별 통일행사도 향후 합의되는 장소에서 반드시 진행한다. ③ 6월 15일을 「민족공동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④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에 대해 「6.15민족공동위원회」 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⑤ 「6.15민족공동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6.15민족통일대축전」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남한 284명, 북한 300명, 해외 132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석한 남한대표단 중에는 국회의원 10명과 취재기자단 12명이 포함되었다. 행사 첫날인 14일에는 개막식과 만수대예술단 공연 관람 및 환영만찬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15일 본행사인 「민족단합대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주석단 배치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행사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경 평양 태권도전장에서 남·북·해외 대표단과 평양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민족단합대회」 겸 「폐막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2007년 3월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후속 협의를 통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월 4일 이 행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인사배제·반북 시위방지·해외

남북공동행사 개최 현황 및 참가 인원

연도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2001	금강산 (6.15~16) - 남 450, 북 200, 해외 20	평양 (8.15~21) - 남 337, 북 223
2002	금강산 (6.13~16) - 남 217, 북 350	서울 (8.14~17) - 남 530, 북 116
2003	싸스(SARS)로 인해 미개최	평양 (8.14~17) - 남 339, 북 400
2004	인천 (6.14~17) - 남 1,200, 북 126, 해외 39	조문파동, 이적단체 소속원 참가보장 요구로 무산 (평양 예정)
2005	평양 (6.14~17) - 남 300, 북 200, 해외 100	서울 (8.14~17) - 남 400, 북 200, 해외 150
2006	광주 (6.14~17) - 남 483, 북 147, 해외 145	수해로 미개최 (평양 예정)
2007	평양 (6.14~17) - 남 284, 북 300, 해외 132	을지훈련 등 사유로 북한이 불참통보(부산 예정)

동포들의 입국편의 등에 대해 남한정부가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과 을지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로써 2001년 8.15공동행사가 시작된 이래 2004년 조문과동, 2006년 수해로 개최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세 번째로 8.15 공동행사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2. 직능별 공동행사

2007년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산하의 노동·청년학생·농민·교육·학술·언론·여성 등 7개 직능 분과별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한 해였다. 남북 분과별 연대모임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으로써 남북공동행사 이외에 직능분과별 교류도 정례화의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7개 분과의 공동행사 중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는 노동부문의 5.1절 행사 하나로 그쳤고, 나머지 행사들은 모두 북한에서 개최됨으로써 쌍방향 교류라고 하기에는 미흡하였다.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는 2007년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었다. 남한측에서는 이용득 한국노동총위원장 및 이석행 민주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경남 창원)

노총 위원장 등 300명, 북한측에서는 원형국 직총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6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기간 중 본행사인 노동자통일대회를 비롯하여 남북노동자 상봉모임 및 통일축구대회, 마산 3.15묘역 참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남한에서 개최된 최초의 남북노동자 공동행사로서 쌍방 간 교류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청년학생부문에서는 2005년에 두 차례의 「남북대학생 상봉모임」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데 이어, 2006년 5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2007년에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한측 140명, 북한측 70명 등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청년학생 연대모임」을 개최하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토론회, 공동 등반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농민부문에서는 2001년과 2004년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를 개최한 이후, 2007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농민연대모임」을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남한측 93명, 북한측 500명이 참가하여, 남북농민연대모임 및 만경대협동농장 방문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 남한측 참가단은 전국 11개 농민단체를 망라하여 구성됨으로써 이전의 행사보다 대표성이 격상되었다. 또 12월 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지 30여 만평에서 직접 생산한 ‘통일쌀’ 297톤을 북한으로 보냈다.

여성부문에서는 199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위안부 문제 협의와 더불어 남한의 「한국여



통일쌀 인도인수식 (개성)



남북학술토론회 (금강산)

성지도자연합), 「6.15 여성본부」 등이 북한 「조선여성협회」 등과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2006년에 개최된 6.15공동위 여성분과의 「남북여성대표자 회의」에 이어, 2007년에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여성대표자모임」을 진행하여 여성교류의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2007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북한 대표단 5명이 참가하여,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일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교육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온 「남북공동수업」이 2007년에도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6.15 공동선언」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2007년 8월 6일부터 9일까지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평양·백두산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남한에서 교육자 100여 명이 참여하여 교육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고 북한 교육시설을 참관하였다. 이 모임은 2003년에 개최된 「남북 교직원 상봉모임」을 발전시킨 것이다.

학술부문에서는 1995년 이래 한국통일포럼, 한국정치학회 등의 학술회의를 중심으로 남북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6.15공동위 학술분과의 「남북학술토론회」로 이어졌다. 남북학자 36명은 12월 8일 금

강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학자들의 역할’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술 교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언론부문은 2006년 11월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토론회」 를 진행한 데 이어, 2007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6.15 남측위 언론분과 21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6.15 북측위 언론분과측과 남북 언론교류와 향후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7년 12월 26일에는 인터넷사이트 ‘통일언론’ 을 개통하였다.

제2절 문화예술 교류

2007년 문화예술분야 교류는 통일음반 제작, 제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금강산가극단」 음반 제작 및 방한 공연, 전통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의 북한 공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방송·언론분야에서는 남한의 기자 및 제작진들의 방북 취재가 주를 이루었고, 북한 방송사와의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도 이루어졌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북한의 생활가요 10곡을 남한의 유명가수들이



「금강산가극단」 무용공연 ‘조선무용50년-북녘의 명무’

녹음하여 제작한 통일음반 「동인」을 발매하였다. 음반에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는 동포애, 애향심, 남녀간의 사랑 등 서정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북한의 생활가요로서 북한과 직접 저작권 계약을 통해 소개된 첫 사례이다.

(주)PMG networks가 추진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금강산가극단」 방한 공연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서 단순 일회성 교류의 한계를 넘어 지속적인 남북문화예술 교류로 발전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00년, 2002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금강산가극단」의 무용공연 ‘조선무용 50년-북녘의 명무’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공연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공연되었다.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은 1955년 재일동포 2, 3세들로 구성된 해외 예술단으로 북한의 미학사상과 독창적인 무용예술 방침을 기반으로 독특한 색채의 무용 작품들을 창작하고 보존·계승하고 있는 전문 무용단체이다. 「금강산가극단」 무용단이 단독으로 북한 무용의 대표작들을 남한에서 공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PMG networks는 협력사업으로 북한의 개량악기 장세남 독주곡집 ‘열풍’, 조선민족기악곡집 ‘소통’, 북녘 서정가요 독창곡집 ‘봄’, 고음저대 독주곡집 ‘금강산녀’ 등 금강산가극단 음반시리즈 4종을 음반으로 제작, 발매하였다.



전통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공연 (황해도 정방산)

경기도 안성시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안성남사당」의 북한 공연을 추진하여 2007년 11월 21일 황해도 정방산에서 첫 공연을 하였다. 남사당놀이는 안성지역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된 남한의 대표적 전통공연예술로서, 북한 지역에서 공연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의 전통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 공연은 서울-평양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황해도 정방산이라는 지방에서 진행되어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공연을 계기로 안성시·(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북한은 남한에서 매년 개최되는 안성 「바우덕이 축제」 또는 2012년 안성에서 열리는 「세계민속축전」에 북한의 농악무 공연단이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방송분야에서는 남북합작드라마의 방영이 이루어졌다. 2005년부터 KBS와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첫번째 남북합작드라마인 「사육신」(24부작)을 공동으로 제작해왔다. 「사육신」은 KBS가 방송장비와 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극본, 출연 배우, 스태프 등 제작 전반을 맡아 만들어졌으며, 2007년 8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KBS 수목드라마로 방영되었다. 「사육신」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교류가 짧은 기간,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방송분야에서 장기간 교류로 추진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남북 드라마 공동제작, 공동연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통일뉴스와 월간 민족21은 공동으로 기사, 사진, 동영상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북한과 교환하여 홈페이지 또는 잡지에 게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문화예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인터넷 등에 제공하여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제3절 역사·학술 교류

2006년 북핵사태로 인한 부진에서 벗어나 2007년에는 남북 학술·교육·

역사·언어분야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동안 학술교육 분야는 일회성 행사가 중심이 되어왔으나 2007년에는 남북의 전문가가 함께 역사유적을 발굴하고, 남한의 강사가 북한의 학생을 교육하였으며, 학술토론회도 정례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양 일대의 고구려 고분군을 남북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07년에는 그 중 보존 조치가 시급한 고분에 대하여 공동 보존사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 고분의 보존상태 개선은 2004년 세계문화유산 지정 당시 유네스코가 요구한 보완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평안남도 중화군에 위치한 진파리 1·4호분 벽화에 대해 보존처리를 하고, 종합 환경측정 장비를 고분 안팎에 설치하였다. 앞으로 1년 동안 기온, 습도 등 고분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공동으로 분석·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5월 18일에서 7월 13일까지 개성 만월대 서북지구 30,000㎡에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9월 3일에서 11월 16일까지 주요 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물지 2,500㎡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9동의 주요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수백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으며 분단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고려 궁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발굴조사에는 남한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였고, 남한 인력이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공동작업을 진행하였다. 동 사업은 행사중심의 일시적 남북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학술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분단에 따른 우리말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4년 초 발간을 목표로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7년 4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되어 편찬사업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뒷받침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공동편찬회의가 4차례 개최되어 그간 남북 양측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올림말을 선정하고 어문규범단일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각 학술단체를 중심으로 남북공동학술회의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7년 7월 5일 평양에서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을 주제로 제7차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립국어원은 2007년 11월 16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와 ‘민족어 발전의 현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



평양 민족화학학술포럼회

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7년 5월 7일 평양에서 화학분야를 주제로 북한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민족화학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당국간 합의사업인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제4차 남북실무접촉이 있었다. 동 접촉에서 남북은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로 중국 대련시 여순구 여순감옥 뒷산으로 특정하고 남북공동 유해발굴 실시에 합의하였다. 남북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유해발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여 유해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우리민족인재양성센터는 중국 단둥에 위치한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된 것으로, 2007년에는 ‘3D 그래픽스’, ‘인베디드’ 등 2개 과정에 각 30명씩 총 60명의 북한 전문인력을 교육하였다. 교육생들은 북한 내 관련학과 대학생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이었다.

2001년에 시작된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의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사업과 2006년에 시작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종합대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되었다. 남한은 김일성종합대 과학도서관에 도서관리시스템, 전자도서 제작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북한은 디지털화한 소장자료를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남한에 제공하게 된다. 평양과학기술대학 건립은 여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개 동의 건물이 완공된 가운데 2008년 4월 대학원 과정을 개교할 예정이다.

제4절 체육교류

2007년 체육분야에서는 다양한 종목의 교류가 추진되었다. 특히 북한 청소년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하여 한 달간 전지훈련을 하는 등 축구분야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5~17세의 북한 청소년 축구팀 23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제주와 수원, 전남 순천과 광양, 서울 등에서 8월에 열리는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 대비하는 전지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 축구팀이 그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한 달 동안 장기체류 하면서 전지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 15세 이하 청소년팀 34명이 2007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고, 이어서 청소년팀 22명이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강진 등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남한의 중등연맹 등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한편 남한의 12세 이하 유소년팀 26명은 2007년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22명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러한 축구팀 상호 교환방문은 남한의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의 4.25체육단이 합의한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에서 비롯되었다. 양 단체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남북왕래 형식으로 교환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민간차원의 축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등 8개 도시에서 진행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에 북한대표팀도 참가하였다. 북한대표팀 31명은 8월 7

일 입국하여 전남 광양에서 전지 훈련을 하면서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를 준비하였다.

10월 19일에는 개성시 학생소년궁전체육관에서 남북권투대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남북권투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여섯 번째 실시된 대회로서, 남자 아마추어 2경기 및 여자프로 5경기가 진행되었으며, 남북대결은 남자 아마추어 친선경기 2경기 및 여자 프로경기 2경기로 진행되었다.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이 이끄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48명이 4월 6일부터 9일까지 방한하여 춘천과 서울에서 2차례의 태권도 시범행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각종 손발 응용동작과, 1대1 대련, 건강태권도, 불량배로부터 여성 구하기와 같은 호신술 시범 등을 선보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체육교류의 발전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2008 베이징올림픽 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6일 남북 총리는 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로 남북은 12월 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응원단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남북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 겸 국제친선 축구대회 개최식



2007 FIFA청소년(U-17) 월드컵대회 참가 북한대표단 훈련모습



제6차 남북권투대회

제5절 종교교류

2007년 남북 종교분야는 기존 종교시설 복원사업들이 추진된 가운데 남북 종교인들간의 개별접촉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위한 종교단체 연합기구간의 연대와 교류협력을 모색하였다. 또한 종교분야 왕래인원이 2007년 한 해에만 4,899명에 달해 2006년까지 종교분야 왕래 인원수인 3,376명보다 45%가 증가하였다.

2007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7대 종단 연합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이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KCR)의 초청으로 양 단체간 교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양을 공식 방문하였다. 7대 종단 대표 41명으로 구성된 KCRP 방북단은 북한 내 각 종단 시설을 방문하고, 북한 종교인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졌다. 양 단체는 그 동안 개별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부정기적인 교류사업을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민간교류차원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연합기구간의 연대와 함께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방북도 이어졌다. 여의도 순복음선교회 조용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맹 이용규 회장, 한국기독교교회연합 권오성 총무,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한국유교학회 최근덕 회장 등이 종단차원의 개별행사 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남한 대표단 평양 방문

는 연합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불교계의 교류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과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2004년부터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으로 추진되어 온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이 3년 반 만인 2007년 10월 13일 준공되었다. 이 날 남한측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370여 명이, 북한측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 유영선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성 법회가 개최되었다.

신계사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사찰의 하나로 꼽혀왔으며, 범기암 등 10여 개의 암자를 둔 큰 사찰이었으나 6·25 전쟁 때 전소된 후 방치되어 오다가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복원이 논의되어 2004년 4월 남북 공동으로 복원공사가 착공되었다. 2004년에 1단계 사업으로 발굴조사 및 대응전 공사가 추진되었으며, 2005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묘사채, 묘사채, 산신각 등에 대한 전각 복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나한전, 칠성각, 극락전 등을 복원하였고, 2007년에는 묘사채 및 주변 건물에 대한 단청작업이 진행되어 완공을 보게 되었다. 복원 과정에서 문화재 복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북한은 문화보존지도국, 조선역사중앙박물관 등 해당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천태종은 개성 영통사 복원을 기념하여 불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성지순례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8일



금강산 신계사 남북 합동 준공식



복원된 개성 영통사



완공된 평양 봉수교회

영통사 복원 3주년 기념법회를 시작으로 11월 14일 대각국사 열반 다례재 등 8차례에 걸쳐 4,000여 명의 불교신자들이 개성 영통사를 방문하였다.

영통사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년 고찰로 개성시 외곽인 개풍군 오관산(五冠山) 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16세기에 소실되었다가 2005년 10월 복원되었다. 천태종은 기와 및 단청재료, 건축 마감재 등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2007년에도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에 착수하였다.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사업은 기독교 예장통합 남신교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기쁜소식과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함께 2005년 9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에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준공식을 기념하여 2007년 12월 21일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한 교인 31명과 북한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당예배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완공된 봉수교회는 1,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연건평 600여 평 규모로, 교회 건축과정에서 남한의 물자가 지원되고 기술진이 빈번

히 방북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하였다. 남북의 기술자 및 기능인들이 동시에 협력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남한 교인들이 방북하여 합동예배를 가졌다.

여의도 순복음선교회는 2007년 9월 5일 평양에 심장전문병원을 건립하기로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하고, 12월 4일 조용기 목사를 비롯하여 남한 교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예배와 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사업이다.

그 밖에 감리교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 온 평양신학원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천주교에서는 평양 장충성당에 주일학교 건립을 지원하였다. 주일학교 건립은 조선카톨릭협회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건축을 담당하고, 남한은 자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제6절 지방자치단체 교류

남북관계가 발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사업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2007년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충북 제천시)에서 23건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총 160억원이 투자되었다. 이 중 부산시의 평양항생제공장 건립, 울산시의 북한 영유아 이유식시설 건설 등 6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7년에 부산, 전북, 경북, 제주 및 충북 제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7년 말 현재 대전, 충북,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사업의 재원 마

련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남, 경남 등이 자체적으로 남북협력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도는 2008년 기금설립을 목표로 관련 조례의 제정과 출연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남북교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남북교류실무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제1차 회의는 7월 31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는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금강산-제천시 사과수확축제와 연계하여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사업 추진실적

□ 사회문화협력사업

시도별	사업실적	사업비 (백만원)	협력단체
인천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 인조잔디 8,362㎡, 육상주로 8,206㎡, 포설장비 차량 1대, 관람석 페인트 1식	699	평화3000
강원	○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 - 솔잎혹파리 방제(금강산지역) 1,500ha -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북강원도전역) 1,000ha	323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삼지연 빙상장 보수자재 지원 - 아이스링크 시스템 제공 및 설치	895	
	○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 - 북한태권도시범단 48명 방문, 시범경기(4.7 춘천)	2	
충북 제천	○ 복고성군(삼일포) 과수원 조성 - 비배관리 및 기술협력 : 6ha, 11회 65명 방북 - 금강산 제천사과축제 개최(9.6-15) - 삼일포 농장 태양광 전력시설 구축 등	303	제천시남북협력협회

□ 지원협력사업

시도별	사업실적	사업비 (백만원)	비고
서울	○ 평양 「조선암센터」 의료장비 지원 - 수술 기구 및 인공호흡기 등	500	장미회
	○ 수해 구호물자 지원 - 항생제, 방역품 등 45종 의료품 및 생수	300	장미회
부산	○ 평양 항생제공장 건설 - 김일성종합대 생명공학센터내 1,200㎡ 규모 * 월 80만 캡슐 항생제 생산	75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수해물자 지원 - 의약품, 식료품, 수해복구 자재 등	120	
광주	○ 수해지역 주택복구 지원 - 시멘트 912톤, 강재 112톤	170	광주남북교류협의회
울산	○ 북녘 옥수수 국수공장 지원 - 옥수수 국수 기계 설비 1식	470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건립 지원 - 공장건설, 생산설비, 원자재 지원 등 * 2007년 12월 현재 70%의 공정률	919	남북나눔공동체
경기	○ 개성 산림녹화사업 - 온실 양묘장 설치자재(3동 330㎡), 종자, 트랙터 등 농기자재	36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 벼농사 협력사업 200ha - 농업기반조성: 도정공장, 도로포장 등 - 생활환경조성사업: 진료소·탁아소 신축 등	1,860	
	○ 수해 구호물자 지원 - 라면, 밀가루 등	100	
강원	○ 안변 연어부화장 사료공장 건립 - 공장 250평 규모 건립, 생산기계 설치	741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 지원 - 주택복구용 판유리 지원 1만㎡	60	
전북	○ 양돈장 지원사업(남포시 대대리) - 축사 5동(1,465㎡), 종돈 267두, 사료 220톤	1,1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남	○ 평양 발효 콩 공장 건립(일 16,000명 공급 규모) - 발효 콩 공장 건설자재 지원 및 기술공유	880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경북	○ 개성지역 「경북 사과원」 조성 - 북한 파트너 선정(민경련) 등 사업 추진 준비		경북남북농업교류협의회
경남	○ 농업교류협력사업(강남군 장교리 협동조합) - 공동 벼농사 200ha, 통일딸기 모종생산 25,000주 - 콤바인 등 9종 23대 등	1,100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 2층 연면적 1,920㎡ 규모(교실 10실 등)	1,393	
제주	○ 감귤 북한보내기 - 감귤 8,260톤, 당근 4,100톤	3,000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





제5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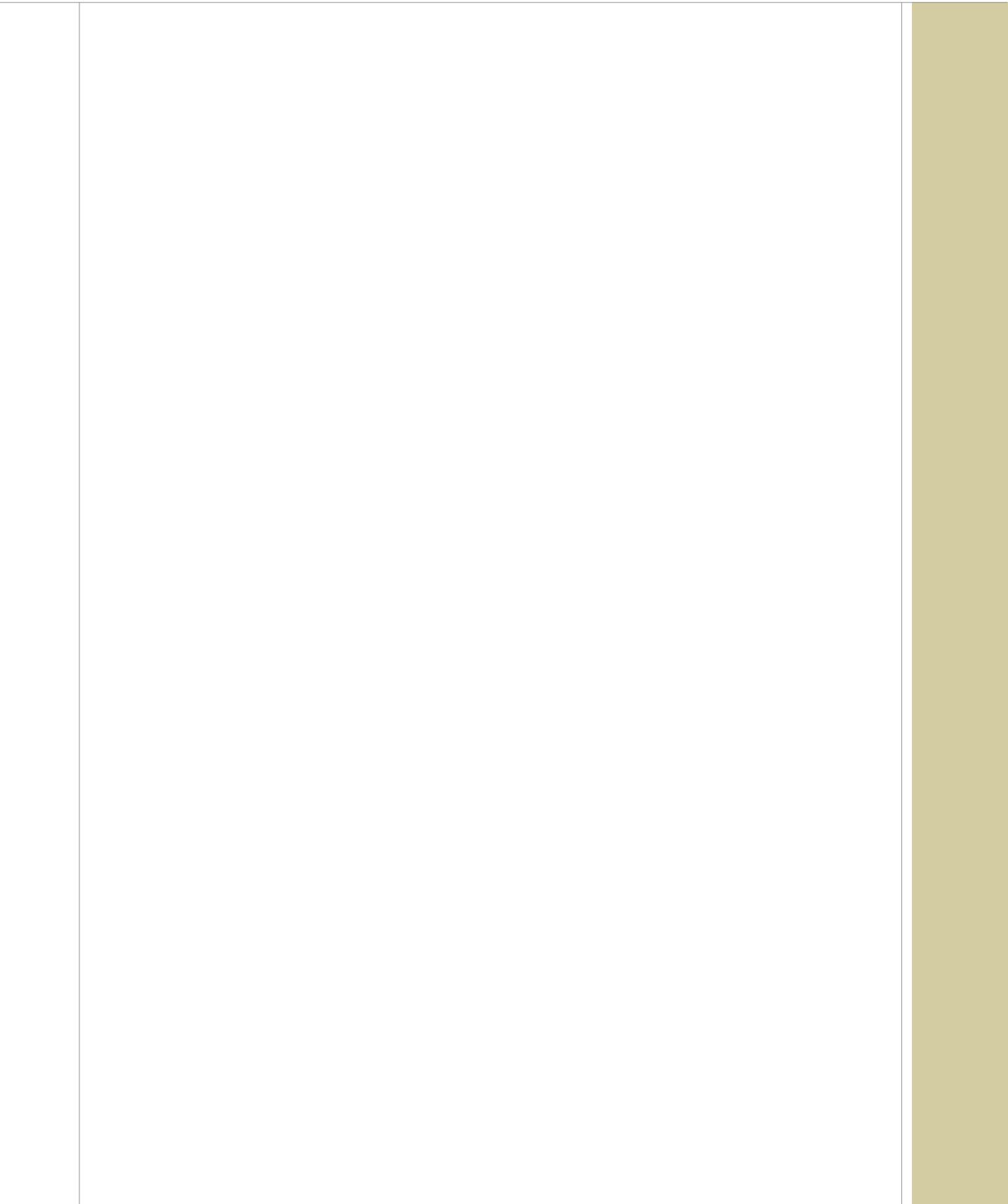
제1절 남북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새터민 정착지원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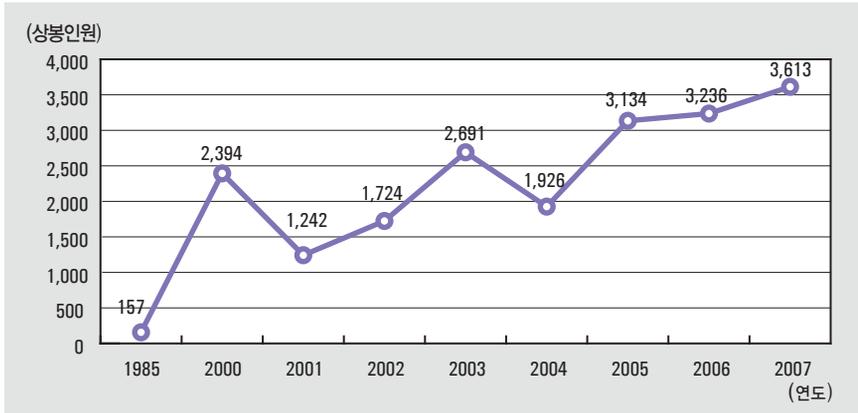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북한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대북지원, 새터민 정착지원 및 북한주민의 인권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분야 협력은 1970년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에서 출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인도분야 협력이 확대되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7차례의 화상상봉, 1차례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류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남북한 총 48,338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성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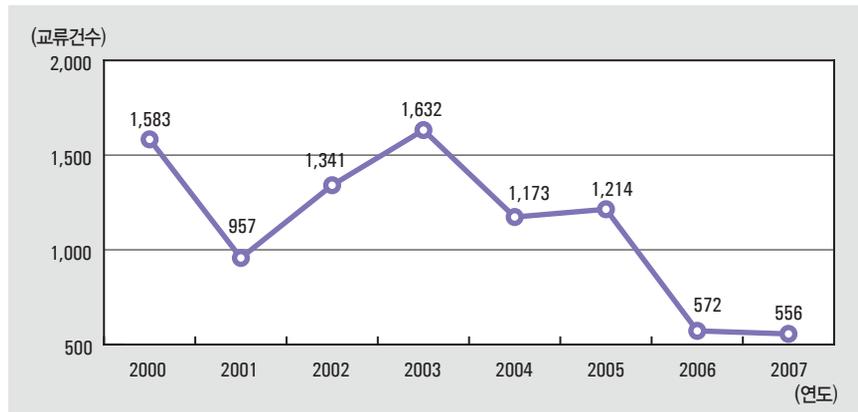
정부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생사확인, 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90년 처음 시작되어 2007년 까지 생사확인 3,756건, 서신교환 11,093건, 제3국을 통한 상봉 1,638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당국차원의 상봉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현황



※ '05년부터는 화상상봉 인원을 포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추이



※ 제3국 상봉,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포함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여 2007년 12월 면회사무소가 준공되었으며 2008년 7월에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될 예정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면회소의 완공을 계기로 '상시상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11월 제9차 적십자회담에서 상봉행사의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반면, 국군포로와 남북자문제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남북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모든 기회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상봉 현황 (2~16차 이산가족 상봉시)

구 분	생사확인 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 가족수
국군포로	101	13	12	76	11	20가족(78명)
전시납북자	16		2	14		2가족(7명)
전후납북자	97	15	19	63	14	16가족(73명)
합 계	214	28	33	153	25	38가족(158명)

를 활용하여 대북협상의 의제로 제기하였다. 남북회담에서 공식 의제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부는 남북회담과 병행하여 2000년 11월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부분적으로 포함시켜 생사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여 왔다.

2000년부터 2007년 10월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214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한에 의뢰하여 38가족 158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10.28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및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2008년에는 납북자 가족들의 신청에 따라 본격적 피해 위로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0년 이후 매년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부 유관부처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합동으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의 상호보완적 구도하에 북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북한 내 대량 아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복지원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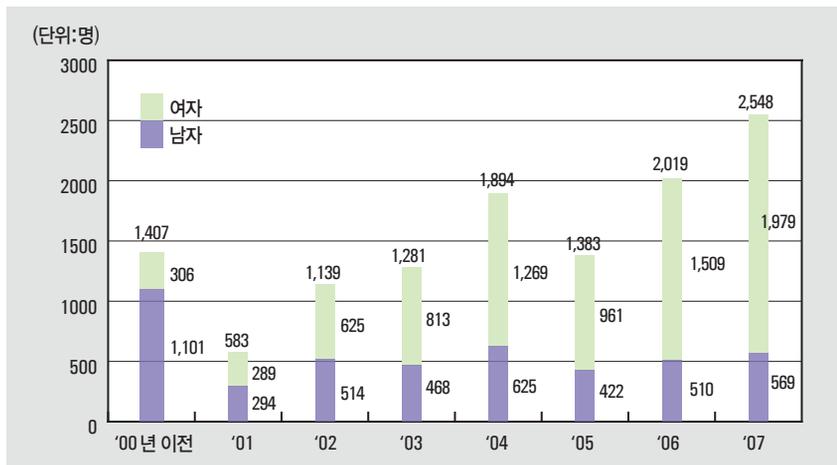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누계	
무상	정부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96	2,159	13,929
	민간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7,171
	계	1,856	36	422	429	562	1,365	1,757	1,716	1,863	2,871	2,139	3,005	3,079	21,100
식량차관						1,057		1,510	1,510	1,359	1,787		1,649	8,872	
총계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9,972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매칭지원)분은 정부지원에 포함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모니터링 확대 등 분배투명성을 국제기준으로 제고시키는 노력도 계속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령과 UN 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복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터민 입국 추이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입국 새터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1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총 2,548명이 입국하여 역대 최다 입국을 기록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7년에는 약 78%에 이르고 있다. 국내 입국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자립·자활의지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정착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1절 남북이산가족

2007년에는 남북간 합의에 따른 당국차원의 이산가족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 모두 증가하였다. 2007년 중 이산가족교류는 2006년 11,550명 대비 10% 증가한 12,734명으로 증가하였고, 민간차원에서도 2006년 572건, 623명 대비 2007년 556건, 671명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8%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상시상봉’에 합의하고 제9차 적십자회담(’07.11.28~30, 금강산)을 통해 연간 상봉규모 남북 각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각 40가족 등을 확정함으로써 정례적·상시적인 상봉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5년 만인 12월 7일 남북이 참석한 가운데 면회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8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1998년 이산가족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료를 통합 관리해 왔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산가족 신청현황 및 교류현황 통계 산출, 이산가족대상 대민서비스 제공,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민 간 차 원	생사 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89	3,756
	서신 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1,093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1,638 (3,079)
	방북 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4 (19)	1 (5)		30 (124)
국 차 원	생사 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579 (48,338)
	서신 교환												39 (39)	623 (623)	9 (9)	8 (8)	-	-	-	-	679 (679)
	방남 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3,112 (13,669)
	화상 상봉																	199 (1,323)	80 (553)	278 (1,872)	557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2007.12.31 현재) : 126,787명 등록 (사망 33,300명 / 생존 93,487명)

이산가족 관련 정책수립 지원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2007년에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재구축,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접속하게 만드는 한편, 신청자료의 갱신사업을 진행하였다.

통일부는 2007년 1월 16일 대북지원, 이산가족 등 남북간 인도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대한적십자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부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진행,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운영 등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비롯하여 북한주민 사체 처리 등 남북 사이에 추진되는 인도적 사업의 집행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1. 이산가족 상봉행사

2007년 3월에 개최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7년 5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측 98명과 동반가족 48명이 재북가족 226명을 상봉하고,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38명을 상봉함으로써 전체 상봉자는 총 910명이었다.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7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되었다. 200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측 가족 396명이 재북가족 9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가족 216명이 재남가족 122명을 상봉함으로써 전체 상봉자는 831명이었다.

제16차 상봉행사부터 90대 이상 고령자 및 직계가족의 상봉률 제고를 위해 상봉후보자 선정시 인선기준을 조정하여, 90대 이상 고령자 및 직계가족의 선정비율을 확대·반영하였다. 그러나 제16차 상봉은 건강 이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상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남한 7명, 북한 3명)하여 당초 예정했던 상봉 인원수(남북 각기 100명)를 채우지 못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16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007년도 상봉 현황

구분	15차 상봉	16차 상봉
일정	5.9~5.14	10.17~10.22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삼일포(금강산)
상봉 가족수	○ 우리측 146명이 재북가족 226명 상봉 (방문단) * 우리측 동반가족 48명 ○ 북한 100명이 재남가족 438명 상봉 (상봉단)	○ 우리측 396명이 재북가족 97명 상봉 (상봉단) ○ 북한 216명이 재남가족 122명 상봉 (방문단)

2. 화상상봉

2006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6차 특별화상상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중단되었다가 2007년 「2.13 합의」 이후 속개되었다. 제5차 화상상봉은 2007년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북 각각 60가족씩 총 120가족 819명(남한 495명, 북한 324명)이 상봉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3,242명의 생사확인파와 이산가족들의 사진파일 1,088매를 교환하였다. 제5차 화상상봉은 상봉후보자 인선시 상봉자 60명 전원을 90대로 선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이산가족에게 더 많은 상봉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첫날 한적 총재와 북적 위원장간 화상대화도 실시되었다.

이어 2007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제6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각각 40가족씩 총 80가족 550명(남 335명, 북 215명)이 상봉하였으며, 총 869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제6차 화상상봉에서는 남한의 8개 도시 12개 상봉실(제주 제외)과 북한 평양 고려호텔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1일 4회 매회 10가족 2시간씩 상봉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 제7차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화상상봉 장면

2007년도 화상상봉 현황

회차		제5차 화상상봉	제6차 화상상봉	제7차 화상상봉
일시		3.27~3.29	8.13~8.14	11.14~11.15
상봉 가족수	남한	60가족 495명	40가족 335명	39가족 291명
	북한	60가족 324명	40가족 215명	39가족 212명

각각 39가족씩 총 78가족 503명(남 291명, 북 212명)이 상봉하고, 총 576매의 가족사진 파일을 교환하였다.

3.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정부는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 때부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사업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면회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2002년 9월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 확대를 위한 면회소 설치가 합의되었다. 2003년 11월 제5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면회소를 남한이 전담하여 건설·운영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인해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2007년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07.2.27~3.2)에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3월 말부터 면회소 건설공사가 재개되어 2007년 12월 7일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12월 기준으로 면회소 건설은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산가족면회소 개요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특구지역내)
- 대지면적 : 50,000㎡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2층 및 전망대(면회소동), 19,835㎡
- 구성 : 12층 면회소동, 3층 면회사무소동(2동), 파워플랜트(발전 시설)
 - 면회소동: 총 객실 206실(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면회사무소동: 지상 3층, 2개동(남북)
 - * 1~2층 연회장 등, 3~4층 호텔식 객실(78), 5~12층 콘도식 객실(128)



금강산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국군포로는 6.25 전쟁 직후 정전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포로교환시 귀환하지 못한 군인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 신고 등으로 전사 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의 「6.25참전 실종자 명부」를 1997년 10월에 공개하였는데, 이 실종인원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의 미송환 국군포로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많게는 5~8만명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한국전쟁의 전선의 범위, 성격 및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2007년 말 현재 약 560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4년 10월 조창호 중위가 최초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총 7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다.

납북자는 크게 6.25 전쟁 중 납북자(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이후 총 3,796명이며, 이 중 3,310명(87%)이 납북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귀환하였다. 2000년 이후 전후 납북자 중 6명이 탈북 귀환하였다. 현재 미귀환자는 약 48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시 납북자는 조사시기와 조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 연감에 따르면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사업에는 7,034명이 등록되어 있다.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구분	생존	사망	행방불명	합계
국군포로	560	910	300	1,770

※ 참여정부 기간중('03~현재) 귀환 인원 : 국군포로 41명 / 국군포로의 가족 92명

전후 납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계
납북자	3,696	50	24	26	3,796
귀환자	3,269	39	-	8	3,316
억류자	427	11	24	18	480

전시 납북자 관련 통계

구분	출처	추정인원
서울시 피해자 명단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0)	2,438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2)	82,959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 연감(1953)	84,532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1954)	17,940명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1956)	7,034명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인도적·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시비를 지양하고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에 우선 주력하였다.

정부는 2000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 각종 대화 채널을 통해 약 25차례에 걸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총 13차례의 협의를 도출하였다. 2007년에도 정상회담(10.2~4), 총리회담(11.14~16), 제20차 장관급회담(2.27~3.2), 제21차 장관급회담(5.29~6.1), 제8차 적십자회

담(4.13), 제9차 적십자회담(11.28~11.30) 등 총 6차례의 회담에서 국군포로·남북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4차례의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북한의 미온적 태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제8차 적십자회담시 동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적십자 채널과는 별도로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별도채널 구축방안, 북한의 협조에 따른 경제적 보상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설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 이산가족 틀 내에서의 접근만을 고집하여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시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나 남북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남북회담시 국군포로·남북자문제 합의 현황

회 담	합의사항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2002.9)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2002.10)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기로 한다.
제2차 적십자실무접촉 (2002.12)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 (2003.1)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 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 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를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6)	3.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9)	4. ㉔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2005.12)	5.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2006.2)	4.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확인 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2006.4)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회 담	합의사항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2007.2)	4. ③ 쌍방은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2007.4)	4. 남과 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제1차 남북총리회담 (2007.11)	5.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2007.11)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제정

2006년 1월 정부는 과거 남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6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10월 20일 정기국회에 정부법률안으로 제출되었고,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법률 제 8393호로 공포되었다.

전후 남북피해자 지원법 주요내용

- 국가의 책무로 납북자 생사확인, 송환, 가족상봉 및 귀환납북자 재정착 의무 확인 (제4조)
- 3년 이상 납북자의 가족: 피해위로금 지급(제9조)
- 3년 이상 납북자 중 귀환자 : 정착금 등 지급(제8조)
-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 등 피해자: 보상금(제10조) 및 의료지원금(제11조) 지급
- 국무총리 산하 「남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회」 설치(제6조)

법률안 제정 및 국회심의 과정에서 법률 적용대상,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수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률 적용대상으로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인사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전후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후 납북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납자가 1년 6개월 이내에 귀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북된 후 3년 이상 돌아오지 못한 자로 한정하였다. 입법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소재와 위로금의 수준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나, 납북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작위·부작위를 전제한 보상이나 배상은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장기간 납북된 데 대한 위로차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위로금 수준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과 위로금의 성격, 납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납북자 가족단체는 동 단체의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이해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납북자 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령은 2007년 10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3일에 대통령령 20333호로 공포되었다. 시행령에서 귀환납북자 정착금은 월 최저 임금액의 200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국내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착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호프만식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상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와 「납북피해자지원단」이 구성되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통일연구원 등 기관의 추천에 의해 8명이 선정되었다.



전후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남북피해자 보상·지원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남북피해자의 해당여부, 피해위로금·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실태조사 등 남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남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 남북자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보좌할 「남북피해자지원단」도 11월 5일 개소함으로써 법률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지원단 사무실 개소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총 70건의 피해위로금 신청이 접수되었다.

제3절 인도적 지원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의 지원 여력과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실시한다는 입장으로, 2007년에는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포함하여 총 4,72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비료 30만톤과 쌀 차관 40만톤을 비롯하여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 및 복구용 자재장비를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성홍열, 산림병해충 방제, 구제역 방제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5년에 북한 영유아에 대한 특별지원 장기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와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100억원 내외 규모의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부터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의 영유아지원사업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인도적 대북지원 분야에서의 큰 특징은 민간차원의 교류가 당국차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12.4~6, 서울)의 합의에 따라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개성에서 제1차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도병원 현대화, 전염병 통제 등 5개항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보건당국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환경 분야에서는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 대기오염 피해감소를 위한 공동협력, 한반도 생물지(生物誌) 사업 등 3개항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산림녹화 분야에서는 시범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등 2개항에 합의하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당국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 비료지원

정부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1999년에 대북 비료지원을 시작한 이래, 정부차원에서 매년 20~30만톤씩 비료를 지원하여, 2007년까지 총 255.5만톤, 7,995억원 상당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2.27~3.2)에서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3월 7일 북한은 장재언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30만톤의 비료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3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비료 30만톤, 956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료 수송은 3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총 39항차를 끝으로 6월 23일에 완료되었다. 항구별로는 남포(160,000톤), 해주(58,000톤), 원산(15,000톤), 흥남(37,000톤), 청진(30,000톤) 등 5개항으로 전달하였다. 비료전달 과정에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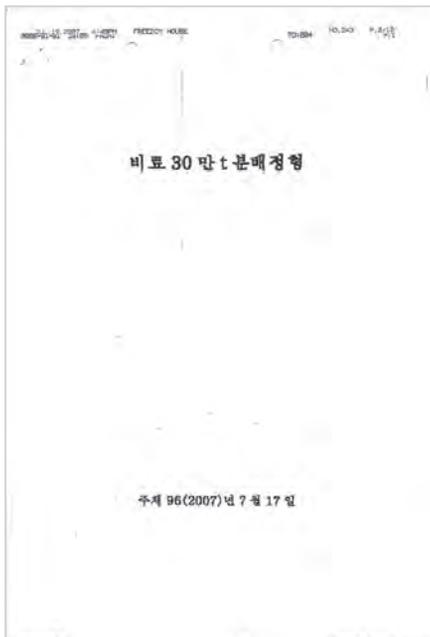
일부·한적·유관기관·국회·장학사 등 총 156명이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도·시·군(구역) 단위의 비료 분배내역을 7월 17일에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 현황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규모(만톤)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금액(억원)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북한이 보내온 비료분배 정형 통보서



구분	비료종류	분배량(단)	소송량	비율(%)	가액(백원)
합	소곡물	990	26	2.6	572
	벼	1,200	36	3.0	1,130
	밀	200	25	12.5	100
	콩	200	20	10	150
	겨대	800	35	4.4	228
	사과	400	38	9.5	225
	감	300	20	6.7	140
	배	300	20	6.7	140
	딸기	1,200	50	4.2	500
	양념	200	40	20	130
시	소양	400	30	7.5	240
	중양	400	30	7.5	240
	소양	400	30	7.5	240
	대양	200	25	12.5	200
	중양	1,200	40	3.3	400
	소양	2,000	200	10	2,400
	중양	1,000	200	20	2,000
	대양	800	150	18.8	1,700
	소양	600	80	13.3	1,100
	중양	1,200	100	8.3	1,200
보	소양	2,500	220	8.8	2,400
	중양	2,100	270	12.9	2,400
	대양	1,400	130	9.3	1,200
	중양	1,100	100	9.1	1,200
	대양	1,300	140	10.8	1,200

2. 식량차관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1995년에 쌀 15만톤을 무상 지원한 이래, 2000년부터 식량 차관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4월 22일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의 쌀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총 40만톤의 쌀 수송은 6월 30일 군산-남포간 제1항차 수송선이 출항한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육로를 통해 개성 3만톤, 고성 2만톤 등 총 5만톤이 제공되었고, 해로를 통한 전달은 12월 5일 완료되었다. 북한 도착항은 남포항(187,887톤), 해주항(31,500톤), 청진항(37,613톤), 흥남항(44,700톤), 원산항(48,300톤) 등 총 5개항을 통해 35만톤이 지원되었다. 지원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총 293명이 식량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2007년도 식량차관 제공시 남북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톤 지원마다 분배현장 방문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개성, 남포, 해주, 함흥 등 쌀 차관 전달지역 인근에 위치한 총 20곳의 식량공급소에 각 5명씩 총 100명의 남한 인원이 방문하여 북한 주민들이 쌀을 배급받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지원식량 대북인도 현장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7	계
지원실적	외국산쌀 30만톤 중국산옥수수 2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국내산쌀 15톤 외국산쌀 25만톤	쌀(국내외) 240만톤 옥수수(중국산) 20만톤
남북협력기금	1,057억원	1,510억원	1,510억원	1,359억원	1,787억원	1,649억원 (의결기준)	8,872억원
지원기간	'00.10~'01.3	'02.9~'03.1	'03.7~'12	'04.7~'05.2	'05.7~'06.2	'07.6~'12	

3. 수해 등 긴급구호지원

가. 수해지원

2007년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평양 580mm, 평남 북창 796mm, 황북 서흥 769mm 등 북한의 중남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사망·실종이 600여 명에 이르고 주택손상 24만 세대, 농경지 침수 20만 여 정보, 이재민이 100만 여 명에 이르는 등 1995년 대홍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조선중앙TV 방송을 통해 상세히 보도(8.25)하면서 UN 인도지원조정국(OCHA)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정부는 수해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8월 14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구호방침을 결정하고, 북한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라면, 모포, 생수, 취사도구, 의약품 등 총 75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육로로 수송하여 개성에서 전달하였다. 한편 북한은 8월 21일에 피치, 디젤유 등과 도로건설용 중장비, 살림집 건설용 시멘트, 강재와 운송수단 등 복구자재를 요청해왔다. 정부는 총 374억원 규모(운송비 100억원 별도)의 수해복구용 자재·장비 지원을 결정하고, 건설장비 20대, 트럭 80대, 철근 5천톤, 시멘트 10만톤, 피치 2만톤, 경유 500톤을 9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육

로와 해로를 통해 전달하였다.

UN 인도지원조정국은 북한 수재지원을 위해 미화 1,400만 달러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참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는 UN 인도 지원조정국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158억원 상당의 자체지원을 결정하고 정부의 참여를 요청해오에 따라 30억원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는 등 총 598억원 규모의 수재지원을 하였다.

나. 기타 긴급지원

대북지원 중 긴급구호 형태의 지원은 2004년 용천재해를 시작으로, 2005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과 수해지원, 2006년 수해지원 등 상황발생시 간헐적으로 추진되었다. 2007년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성홍열, 구제역, 산림병해충 방제지원과 수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이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처하였다.

2007년 초 정부는 북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실을 국제기구(FAO, OIE)를 통해 확인하고 3월 9일 구제역 방역 지원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구제역 발생경위 및 피해상황을 전달하면서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소독약, 소혈청, 알부민, 분무기, 멸균기 등 26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 산림지역에 솔나방,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 등 산림병해충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5월 8일 개성에서 방제관련 대북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이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정부는 7월부터 9월까지 분무기, 천공기 등 18억원 상당의 약품과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특히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의 경우,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평양시 중화군 지역에서 남북공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북한지역의 산림병해충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2006년 10월 중순부터 양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성홍열이 2007년에 접어들면서 강원, 함북, 평안도 등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07년 1월 「우리민족서로돕기」 등 3개 민간단체가 전염병 치료제를 지원하였으나 지원양이 부족하다

고 판단하고, 1월 22일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하여 4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치료제 지원규모는 북한의 10세 미만 어린이 약 400만 명 중 약 10%의 유병율을 추정하여 결정하였다.

4.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미래의 한반도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2005년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 영유아의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2006년 민간단체로 구성된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민간차원에서 북한과 사업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에 한국제이티에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이 주관하는 5개 컨소시엄(총 18개 단체 참여)이 북한과 영유아 지원사업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추진한 남포시 산원 및 소아병동,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남포시·대안군의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개선 사업 및 어린이 영양생산시설 지원사업, 함경북도 회령시 영유아와 임산부의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사업 등에 총 105억원을 지원하였다.

제1차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12.20~21, 개성)에서 당국차원의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도 병원 현대화, 전염병 통제 등이 합의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차원의 지원과 함께 당국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5. 민간의 지원활동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

다. 2006년 하반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민간단체의 물품지원이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모니터링 인원의 방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서도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액은 총 7,171억원이며, 이 중 1,757억원(25%, 국제적십자사 경우분 포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414억원(75%)은 독자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2007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 민간단체 독자창구를 통해 880억원 등 총 920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한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한 단체가 추진하는 단일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7개 단체에 33.8억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2개 단체에 117억원을 지원하는 등 7년간에 걸쳐 총 569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개별사업의 지원분야 및 품목도 다른 형태의 대북지원과 동일하게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씨감자, 젖소 농장, 젖염소 농장, 조림사업 등에 지원되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 및 제약공장 시설·기자재,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에 지원되었다.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육아원이나 소학교 어린이 급식(빵, 국수, 콩우유 등), 공책 공장 등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수반하여 재배농법 전수, 공동 의료기술, 제약공장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전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도 진행되었다.

또한, 정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수송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에 1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 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제주도산 당근 4,100톤, 감귤 8,260톤의 수송비로 24억 6,3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민간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 등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 이후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 확인 형식의 대규모 방북도 추진되면서 2007년에는 총 9,898명이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방북하였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통해 개별단체나 개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정부의 재원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경험을 결합한 합동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2007년 합동사업 현황

연도	사업내용	지원액(의결기준)
2005년	① 모자보건 복지사업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 ③ 축산사료 자급사업 ④ 농업·보건용수 개발사업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	50억원
2006년	① 강남군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신규)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계속) ③ 북도직파 농업협력사업(신규) ④ 보건·식수환경 개선사업(계속) ⑤ 주거환경 개선사업(계속)	50억원
2007년	① 강남군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계속) ② 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계속) ③ 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계속)	37.6억원

다. 정책사업

기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민간단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가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전문가 추천 등을 받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분류하고, 2007년에 처음으로 4개 사업에 33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정책사업으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봄철 북한의 수요에 맞추어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16억원, 2006년에는 7억원, 2007년에는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산림녹화 시범사업은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민화협 등 3개 민간단체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겨레의 숲」을 통해 13억원을 지원하여 양묘장 조성 및 조림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필수약품 원료지원은 이미 남한이 지원한 제약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부족하여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10억원을 지원하였다.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의료인력 교육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6.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5년 이래 다양한 국제기구 경로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6월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2007년 초부터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시 대북지원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

황변화에 따라 WFP가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2007년에 옥수수, 밀, 밀가루 등 약 3만 2,000톤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는 조건으로 WFP에 미화 2,000만 달러(190억원)를 지원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정부는 2001년부터 말라리아 방제를 위해 매년 방제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해왔고, 2007년에도 미화 138만 달러(13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워크숍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식수·위생개선을 위해 미화 315만 달러(29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2006년 미화 1,068만 달러(106억원), 2007년 미화 938만 달러(8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후속 3개년 사업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는 2007년부터 북한 아동에 만연한 뇌수막염, 일본뇌염 등의 퇴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정부는 2007년에 처음으로 동 연구소를 통해 5억원 상당의 뇌염백신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234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191억원)

연도	내역	지원액
2004	옥수수 10만톤	2,400만불(264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불(190억원)
계	543,950톤	12,836만불(1,457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불(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20만불), 영유아지원(1,068만불)	1,188만불(124.7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불(13억원)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1,043만불(99억원)
계		2,778만불(284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불(8억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불(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10억원)
2006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230만불(23억원)
2007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315만불(29억원)
계		1,289만불(123.4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불(0.4억원)
1997	UNDP	지원	120만불(15억원)
	FAO	지원	30만불(3.8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불(4.7억원)
계			205만불(23.9억원)

제4절 새터민 정착지원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새터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 12월까지 총 12,254명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7년에는 약 78%를 상회하고 있다.

새터민 입국 현황

(단위: 명)

구분	'89이전	'9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남성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510	569	4,503
여성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09	1,979	7,751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2,548	12,254

※ 새터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으며 특히 2007년에는 자립·자활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2007년에는 새터민 지원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종합대책은 새터민의 자립유도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감액하는 대신 취업장려금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생활능력세대에 대해 생계급여 조건부과 면제기간 및 특례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의 취업보호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새터민 모범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부 우선구매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등 새터민의 고용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정착도우미제 도입, 새터민 채용박람회 개최 및 새터민 일자리 창출협약 등 새터민의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발주하여 새터민 2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84%의 새터민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새터민 지원정책은 남성·성인·단

독세대의 소규모 입국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해외 장기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및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동반 새터민의 입국 증가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대외적으로 해외 장기체류 탈북자의 조기 국내입국 추진 및 체류국 수용시설의 체류여건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의약품 지원 등 직·간접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1.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사회적응 교육시설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주거알선, 취적(就籍) 등 우리사회 편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정착지원시설로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8주 동안 하나원에서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된다. 하나원의 주된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사회제도와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프로그램, 원활한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의 주요 내용은 남북간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남한가정 체험, 산사 체험, 도시생활 체험, 시장구매 체험, 역사유적 탐방 등의 현장학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탈북 및 제3국 도피·은신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불안과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 내의 하나의원에서는 현재 5명의 공중보건과의와 3명의 간호인력이 새터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2006년 5월 18일 「통일부-노동부간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하나원에서 실시하던 직업교육을 기술교육 전문기관인 폴리텍대학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에서는 새터민에게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총 108시간(3주)의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컴퓨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5월 위탁교육이 시작된 이래 2007년 12월 31일까지 1,933명의 새터민이 폴리텍대학을 수료하였다.

이와 함께 하나원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에 의한 ‘적성검사와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새터민들의 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원에서는 새터민들이 하나원에 있는 동안 일반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남한생활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탁 교육시간을 50% 이상 배정하고 있다.

하나원은 남·여 분리교육을 위해 2006년 3월부터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원에서는 그 수가 적은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원과 분원



을 합치면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2,300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1999년 7월 하나원 개원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총 10,333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국내 입국 새터민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하나원 증축을 추진 중에 있다. 2차 증축공사는 2007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축이 완료되면 본원 시설만으로도 지금의 2배 규모로 동시 600명, 연간 3,600명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새터민의 중국 여행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종전 하나원 소재 면사무소에서 일괄 부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2007년 5월부터는 이들의 거주지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 정착지원

정부의 새터민 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맥락 하에서 새터민에 대한 보호와 우리사회 내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새터민들은 거주지에서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이른바 '수혜적인 보호정착 지원' 을 새터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았으나, 새터민 증가와 더불어 새터민 정착지원의 방향을 '자립 자활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4년과 2006년에 새터민 정착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2007년 1월 26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2007년 6월 28일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가. 초기 정착금 지급

정착금 지급은 새터민이 사회에 나온 뒤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터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새터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07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새터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되어 있다. 정착기본금은 새터민이라면 누구나 수혜자가 되지만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으로 2004년 이전 3,590만원과 비교하여 53%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7년 정착기본금 지급 기준

(단위:만원)

가족수	초기 지급금	분할 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
1인	300	300	1,300	1,900
2인	400	700	1,700	2,800
3인	500	1,000	1,700	3,200
4인	600	1,300	1,700	3,600
5인	700	1,600	2,000	4,300
6인	800	1,9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2,000	5,100

※ 분할 지급금은 매분기별로 1년 동안 지급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정착기본금이 줄어든 대신 취업장려금의 지급액 수 총액을 9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따라서 새터민 한 사람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으로, 이 금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착금 수혜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2007년에는 총 583명에게 10억여 원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2006년에 117명 대상 2억 3천여 만원이 지급된 것에 비해 지급인원과 지급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07년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5개월 이하	-	미지급
	6~12개월	개월 수×20만원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450	
	2년차	500	
	3년차	550	
총액(최고액) 2,140만원			

※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취업장려금 증액

2007년 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만원)

년도	종류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총액
2007	지급액	45,800	43,400	12,150	101,350
	인 원	338명	217명	28명	583명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장기 질병이 있는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령 가산금은 보호결정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새터민에게 지급하며, 장애 가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과 2-3급, 4-5급에 차등 지급한다. 장기치료 가산금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 일부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새터민이 수혜대상이다. 결손가정 아동보호 가산금은 보호 결정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그 수혜자가 된다.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2007년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만원)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수×80
결손가정아동보호 가산금	편부모 아동	360

나. 주택 지원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후 사회로 배출된 새터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새터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주거 지원금은 1인 세대의 경우에는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2~4인 세대의 경우에는 1,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만 5인 이상 세대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 지원금 한도액보다 실제 임대보증금이 적은 금액일 경우, 실제 임대보증금만 지원하고 잔액은 5년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거주자인 새터민이 임대주택을 변경할 때 차액이 발생하면 5년 이내에도 그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도 한다.

다. 취업 지원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새터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우선 직업훈련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새터민이 취업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전문직업 훈련을 받기 이전 단계에서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894명이 직업훈련을 시작하였으며 이중 398명이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노동부 산하 전국의 53개소에 달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전문취업상담 공무원을 새터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들은 새터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과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새터민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상으로는 새터민 취업지원사이버센터(www.sjobcc.or.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으로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새터민 채용한마당」(11.20)을 KBS 88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정부는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새터민이 취업한 뒤 1년이 될 때까지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1년 이후에는 70만원의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3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새터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만원)

	'01	'02	'03	'04	'05	'06	'07
업체수	226	274	240	218	323	378	564
인원	251	296	310	269	446	497	728
총지급액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하나원은 2007년 10월 남북평화재단 및 대우차판매(주)와 「새터민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원을 수료한 남성 새터민 중 자동차 운전면허나 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새터민 10여 명이 대우차판매(주) 정비 사업소에 채용되었다.

라. 교육 지원

새터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해당 대학이 정하는 입학절차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하거나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4년 이전에는 만 35세 미만의 새터민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한 시점과 관계없이 국립대학은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사립대학은 국가와 학교가 각각 2분의 1을 분담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새터민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일반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할 경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 등 대학진학 자격을 획득한 지 5년 이내에 진학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 인정을 받는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할 때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입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만 35세 이후에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도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비지원을 받으면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 진학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가족동반으로 또는 단독으로 입국하는 새터민 청소년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이후 2007년 10월까지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새터민 청소년들은 모두 1,511명이

며, 이들은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학제의 차이, 긴 탈북기간 동안 수업 결손 등으로 남한 학교에 곧바로 편입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하기 이전의 디딤돌학교로서 탈북청소년특성화학교인 한겨레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한겨레학교는 기숙형 중·고교 과정 통합학교로 2006년 3월에 개교하여 시범학급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학교는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2개월~2년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들이 제도권 교육과정으로 편입했을 때 적응력을 높이고, 무연고 청소년을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면서 다양한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학생들을 위해서 새터민들이 밀집 거주하는 6개 지역 8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전·현직 교원 15명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돕고 있으며,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 사회보장 지원

새터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보호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새터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여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새터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한다. 생계급여의 현금 지급액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07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최고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 세대	37만원	4인 세대	103만원
2인 세대	62만원	5인 세대	120만원
3인 세대	83만원	6인 세대	137만원

바. 거주지 지원

새터민이 하나원을 떠나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고 나면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의 도움 등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새터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자원봉사 경력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중에서 선정하는데 이들은 새터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에 걸쳐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한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 1세대 당 2명을 지정하게 되는데 2007년 7월 현재 1,5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에는 앞에서 언급한 취업보호 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 담당관과 신변보호 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 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209명의 거주지보호 담당관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 담당관은 새터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며 새터민의 신변을 보

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 명의 경찰관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새터민들을 위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적응프로그램들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고령자와 여성 새터민을 위한 시범사업, 새터민 친목단체 지원 등에 총 4억 8천여 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터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체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7년 현재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6개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실태 파악 및 여론조성,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통일부 내에서도 정보분석본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실태를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 「북한인권백서」(국·영문)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여러 민간단체가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간행물의 배포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 유엔 등 국제기구 관

계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논의 및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나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 복송이 되지 않도록 주재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정부는 식량, 비료, 의료품, 긴급구호 물품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권리'(right to food and nutrition) 등 북한주민의 경제·사회적 인권개선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제기구(WHO, UNICEF 등)와 협력하여 건강관리·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제60차·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2004년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직전 정부는 설명문(Explanation of Vote)을 통해 한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고려해 기권할 것이라는 점과, 기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대화에 기초한 포용(engagement)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전향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개선과 그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또다시 기권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 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 지속, 인도적 지원,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이행할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식량권을 위시한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7년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 정부는 기권을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6자회담의 진전에 따른 것이었다.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의 입장

년도	UN 인권위원회			UN 총회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표결 결과 (찬·반:기권)	28:10:14	29:8:16	20:9:14	84:22:62	91:21:60	97:23:60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기권	찬성	기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비릿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7년 제6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국전쟁을 포함한 남북한간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06년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나 2007년 핵불능화 합의 등 6자회담 진전으로 인해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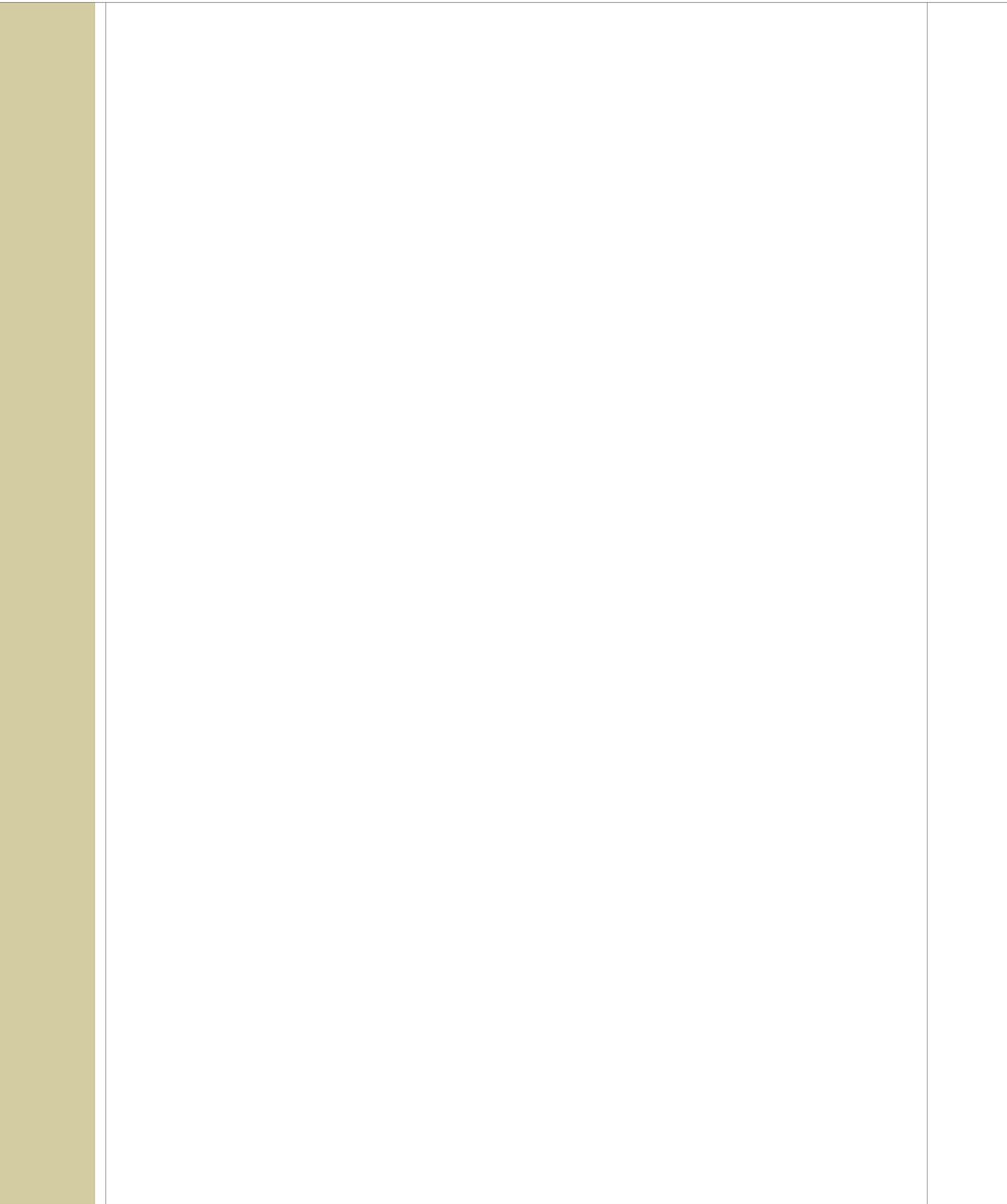
상기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생존권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자유권의 제약을 비판하고 북한에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부 NGO들이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지도자를 제소하려는 움직임

직임을 소개하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들어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개정 등 몇 가지의 중요한 법 개정작업과 대중용 법전 발행 등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07년 제62차 UN총회 제출 문타폰 보고서 요약

- 북한은 식량과 영양에 관한 생존권, 자유권, 개인의 안전과 인도적 처우, 사법정의, 망명권과 난민보호, 취약계층 보호,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 등에서 여전히 심각한 상태
- 2006년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은 이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나 2007년은 핵불능화 합의 등 6자회담 진전으로 인해 고무적 상황
- 북한은 최근 들어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개정 등 몇 가지의 중요한 개정작업과 법령 대중판의 발행 등을 통해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시현
- 북한은 북한이 가입한 각종 인권조약 의무 및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
- 북한은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



경제협력협지사무소





제6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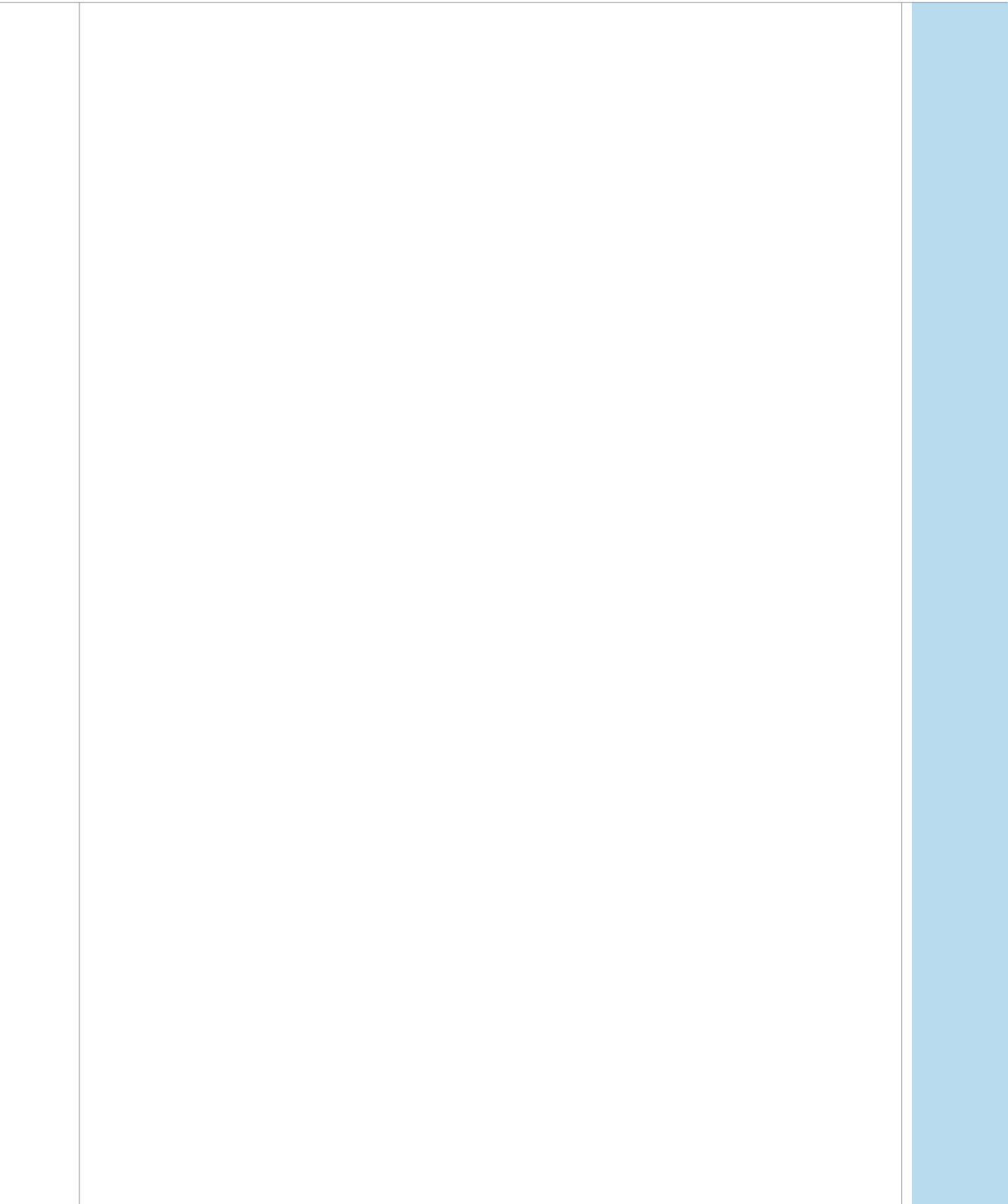
제1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기본계획

제3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영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운영



제6장

남북관계 발전 기반 확충

1980년대 들어 동서화해와 공산권의 개혁·개방화 등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 및 남북관계 법률 현황

구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8.1 제정 및 시행	
남북협력기금법	1990. 8. 1 제정	1990.10.1 시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 1.13 제정	1997.7.14 시행
통일교육지원법	1999. 2. 5 제정	1999.8.6 시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2005.12.29 제정	2006.6.30 시행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7. 4.27 제정	2007.10.28 시행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2007. 4.27 제정 및 시행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2007. 5.25 제정	2007.8.26 시행

국회 동의·비준을 거쳐 발효한 남북합의서

구분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00.12.16 체결	'03.6.30 국회동의	'03.8.20 발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절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02.12.6 체결	'04.9.23 국회동의	'05.8.1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02.12.8 체결	'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04.12.9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04.9.23 국회동의	
남북상사증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03.10.12 체결	'04.9.23 국회동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04.1.29 체결	'04.9.23 국회동의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04.4.13 체결	'04.12.9 국회동의	
남북해운합의서	'04.5.28 체결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절 대북정책 추진 관련 범정부적 협력체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하에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제정뿐만 아니라, 법령이 그 제정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 법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먼저,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통일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정책을 건의하는 통일고문회의를 197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회의의 위원은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007년 말 현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에 대한 지원 등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인 대북정책 협의기구이다. 동 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 설치되었으며,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 14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추천하고 있다. 2007년 7월 26일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고, 11월 8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1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북 중유 5만톤 제공을 위한 긴급지원」 등 모두 6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협의회는 통일부차관(위원장)을 포함, 21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새터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며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체회의 2회, 실무협의회를 9회 개최하여 새터민의 우리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새터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는 정착교육, 취업, 지역사회 정착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통일교육심의회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1991년부터 설립·운영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며 관계부처 차관 10명과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7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

하는 7명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5개 권역에 10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하였다.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에서 합의사항 이행단계 이후까지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였다. 유관부처 총괄협의체인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와 준비기획단(단장:통일부장관) 및 사무처(처장:통일부차관)를 발족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회담 준비상황을 총괄·지휘하면서,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변화·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 하에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와 관리·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및 기본계획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뒷받침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북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06.6.30)과 시행규칙('06.11.17)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의 평화통일조항(제4조)과 남북 평화공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주요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남북관계발전의 기본원칙, 남북관계 성격
- 제2장 남북관계발전과 정부의 책무
 -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구성
 - * 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부위원 14인, 민간위원 9인(국회추천 7인, 위원장추천 2인)
- 제3장 남북회담대표 임명 등
 - 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절차,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및 효력정지
- 부칙
 - 법률 시행전 국회동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에 대한 경과조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추진,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남북관계 이용 금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적으로 내국 관계나 국가간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임을 명시하여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합의된 정신을 국내법으로도 재확인하였다.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의 임명 근거와 절차, 대표 권한 등을 명

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와 대북정책 추진의 합법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등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 발효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가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주요 구성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동의요청, 기본계획 등 고시, 유관부처간 협조, 시행계획 점검 등
- 제2장 위원회 등
 - 발전위원회 운영 및 심의사항, 실무위원회 구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남북회담운영을 위한 협의, 공무원의 북한 파견 등
- 제4장 남북합의서 공포 등
 - 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합의서의 공포 및 관리, 합의서의 효력정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05.12.29)됨에 따라, 2006년 2월 통일부내 자체 T/F를 구성하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2006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일정을 잠정 유예하였다. 2007

년 들어 「2.13 합의」로 6자회담이 진전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등 추진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재추진하였다. 2007년 3월부터 국회·정당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에는 14개 유관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검토·조정하였다.

2007년 7월 26일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11월 8일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고, 11월 28일 관보게재를 통해 공개하였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남북관계발전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 대북정책의 3대 원칙과 6대 추진방향 제시
 - 추진원칙: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 추진방향: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협력의 조화병행, 민간자율성 존중,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여건 조성, 국내의 지지기반 강화
-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제시
 - ①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평화체제 구축 ③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민족동질성 회복 ⑤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⑥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대북정책 추진의 대내외 기반 강화

연도별 시행계획의 소요재원은 그 전년도에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협력기금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게 되나,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

한 변화 등으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제3절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말 남북교역액 10억 달러 시대가 도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각계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포괄하는 영역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통일부는 2007년 초부터 전문가와 경험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에 입법예고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를 2007년 8월 28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12월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개정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간의 교역 대상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법령 미비사항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었다.

남북간 교역에서 소프트웨어 등 무체물의 반출·반입의 증가를 반영하여 남북한간 교역의 대상을 물품 외의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한 것과 방문증명서를 수시방문증명서로 일원화하고 방문기간 동안에는 별도 방문신고 없이 방북을 허용하여 북한방문자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다.

또한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를 개선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의 목적상 당연히 수반되는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하는 경우 등 사

전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중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되던 교역당사자 지정제도 및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방문증명서, 접촉 신고, 수송장비 승인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백히 하였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내용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전략물자 대북반출 통제제도도 정비하였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수출통제 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수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량 증대로 남북경협이 투명성 및 국제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략물자 대북반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전략물자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규정하여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전략물자 대북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제도 강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전략물자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격과 성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해당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사업자 등 반출자의 사전

판정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사안별로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협조 하에 처리하던 전략물자 사전관정을 2007년 2월 15일부터 전문기관인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사전판정 업무를 체계화 하였다. 위탁 이후 2007년 12월 말까지 관련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1,896건에 달하는 사전판정 신청을 받아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관련 상담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규정하고 관련한 다른 내용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8월 24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전략물자 확인의무·사전판정 신청·반출승인 신청·반출승인 기준 및 절차·사후관리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북 전략물자의 특수성에 맞추어 효과적인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4절 남북협력기금 관리·운용

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주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자기금예수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7년 12월 말까지 정부출연금 3조 7,464억원, 민간출연금 24억원, 공자기금예수금 4조 3,372억원, 운용수익금 4,098억원, 기타 수입금 272억원 등 총 8조 5,231억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에는 식량차관, 비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경공업, 광업, 농업 등 분야별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을 본격화하며, 북핵문제 해결시 대북 에너지 지원 등 기금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2008년도 정부출연금 규모를 2007년도 5,000억원에 비해 1,500억원이 증가한 6,500억원으로 하였다.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 등	계
1991	25,000	-	-	237	25,237
1992	40,000	0	-	5,118	45,11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4	40,000	1	-	9,387	49,388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7	50,000	288	-	27,874	78,161
1998	-	-	-	40,280	40,280
1999	-	3	149,831	23,013	172,847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6
2001	500,000	1,080	310,000	29,406	840,486
2002	490,000	78	505,000	42,036	1,037,114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4	171,400	1	310,000	38,371	519,772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6
계	3,746,400	2,369	4,337,274	437,062	8,523,105

* 공자기금예수금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한 금액

2.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쌀 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

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건설 등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사회문화교류가 다원화되면서 기금사용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크게 무상지원(경상사업)과 유상지원(용자사업)으로 대별하여 집행되고 있다. 무상지원은 인적왕래지원, 사회문화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2007년 한 해 동안 168개의 사업에 총 4,353억원이 집행되었다.

인적왕래지원의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6.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 지원 3억원, 북한청소년축구대표팀 방한 지원 3억원, 북한태권도 시범단 초청행사 지원 1억원 등 17건 17억원을 지원하였다. 사회문화협력지원의 경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30억원,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지원 5억원, 고구려 벽화무덤 보존사업 지원 2억원 등 18건 69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산가족교류지원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68억원, 3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지원 및 2차례의 남북 이산가족상봉 지원 등 269억원이 집행되었다. 인도적 지원은 96건 2,27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대북 비료 30만톤 지원 956억원, 대북 수해복구 지원 293억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지원 181억원 등이다. 경제분야 협력기반조성 지원은 총 28건 1,725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333억원, 중유 5만톤 제공 245억원,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출입시설 신축 지원 170억원 등이다.

유상지원은 인도적 지원(용자), 교역·경협자금 대출(교역자금 대출, 경협자금대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로 구분되며, 2007년 한 해 동안 49개 사업에 총 2,805억원이 집행되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도적 지원(용자)으로 대북 식량차관 쌀 40만톤 1,405억원이 제공되었다. 교역·경협 자금대출로 한국전력공사의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216억원 등 43건 566억원(교역자금대출 21건 83억원, 경협자금대출 22건 48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대출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지원 대출 405억원 등 5건 834억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자금종류	91~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경 상 사 업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인적왕래지원		277 (1)	253 (1)	23,686 (9)	1,142 (3)	1,056 (7)	3,786 (13)	5,289 (12)	1,698 (17)	37,185 (60)	
		사회문화협력 지원	980 (3)	637 (1)	102 (1)		654 (2)	3,098 (10)	7,468 (18)	7,375 (20)	6,908 (18)	27,222 (67)	
	인도적 사업	이산가족교류 지원	986 (3)	2,830 (5)	1,299 (5)	2,029 (6)	2,996 (6)	3,158 (5)	13,289 (7)	9,908 (6)	26,918 (9)	63,412 (35)	
		인도적 지원 사업	260,827 (13)	97,737 (9)	97,615 (25)	122,585 (30)	150,134 (36)	122,547 (46)	186,621 (52)	212,536 (60)	227,193 (96)	1,477,793 (278)	
	남북 경제 협력	경제분야협력 기반조성	4,882 (1)	14,578 (1)	89,850 (1)	36,789 (5)	76,318 (6)	76,033 (9)	204,475 (18)	152,091 (23)	172,540 (28)	827,555 (48)	
		교역경험 손실보조	1,268 (1)									1,268 (1)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기반조성		1,416 (2)					62 (1)				1,478 (3)
	경상지원 합계			268,943 (21)	117,474 (20)	189,118 (34)	185,088 (52)	231,243 (55)	205,954 (80)	415,639 (108)	387,199 (121)	435,256 (168)	2,435,913 (478)
	용 자 사 업	인도적사업(용자)		67,523 (1)	86,740 (1)	18,955 (1)	96,743 (1)	156,088 (2)	101,982 (1)	179,262 (2)	3,939 (1)	140,479 (1)	784,187 (6)
		남북 경제 협력 (용자)	교역경험사업 자금대출		500 (1)	46,072 (10)	36,157 (8)	18,710 (31)	37,377 (76)	29,311 (51)	47,910 (50)	56,631 (43)	272,668 (238)
- 교역 자금 대출				500 (1)	1,072 (9)	390 (5)	7,933 (29)	13,677 (64)	8,259 (37)	7,327 (27)	8,288 (21)	47,446 (193)	
- 경험사업 자금대출					45,000 (1)	35,767 (3)	10,777 (2)	23,700 (12)	21,052 (14)	40,583 (23)	48,343 (22)	225,222 (45)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대출						30,582 (1)	35,965 (2)	43,974 (3)	27,520 (5)	23,065 (3)	83,369 (5)	311,998 (8)	
대북 경수로 사업		경수로사업 대출		325,936 (1)	300,284 (1)	300,883 (1)	328,745 (1)	86,984 (1)	22,678 (1)	8,883 (1)		1,374,393 (1)	
용자지원 합계			67,523 (1)	413,176 (3)	365,310 (12)	464,365 (11)	539,508 (36)	270,318 (81)	258,771 (59)	83,797 (55)	280,478 (49)	2,743,246 (253)	
총 계			336,466 (22)	530,650 (23)	554,428 (46)	649,454 (63)	770,751 (91)	476,273 (161)	674,409 (167)	470,995 (176)	715,734 (217)	5,179,160 (745)	

* 괄호 안은 기금사업 건수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남북협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통일부는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남북협력기금 지원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 체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 주요사업에 대한 기금지원 결정
통일부	기금운용 주무부처(관리주체)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 지원사업의 관계부처 협의 및 지원방침 결정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기금지원업무 실무 담당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지원자금의 집행 •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정부는 2001년부터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집행 이전에 기금의 사용내역 등을 국회에 사전보고 하고 있다. 2006년에는 기금 운용 심의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사회문화교류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기금사용 증빙서류 심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통일부 내에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 및 집행관리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지원 결정·집행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지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2월에는 남북경협 상황변화와 기업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경협손실보조 수수료율을 인하(연

0.7%→0.5%)하고, 약정신청 기한을 폐지하였으며, 약정신청 요건을 완화(기업 신용평가 및 업력 1년이상 요건 삭제)하는 등 손실보조 제도를 개선하였다. 7월에는 개성공단 투자자산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조정(44%→54%)하고, 신용 위험조정률을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현실화하는 한편, 부분보증 취급대상거래, 보증취급기관, 취급한도를 완화하여 신용취급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밖에도 기금집행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선하였다.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내 부처간 협의기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다.

동 협의회는 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전문가 위촉은 통일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5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3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말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개 부처 14명의 정부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총 197회 개최하여 모두 41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07년에는 총 19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모두 6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안건의 내용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기금지원」 등 사회문화교류지원 2건,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기금지원」 등 이산가족 교류지원 8건,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북 식량 차관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인도적 지원 23건, 「대북 중유 5만

톤 제공을 위한 기금 지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경제협력지원 24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등 기금운용 및 제도개선 부문 9건이었다.

제5절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운영

남북간 경제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북 투자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이하 경협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상시적 협의를 통해 경협여건을 개선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경협사무소 개소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개성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과의 사업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던 금전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까지 중국 단둥에서 매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되던 「의류 위탁가공상담회」를 2006년부터 경협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사무소가 합의함에 따라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기업간 사업협회가 경협사무소로 전환되었다. 이어 농수산물 교역과 전기전자분야의 사업협어들도 개성으로 전환되면서 대



남북 기업간 사업협회의 모습

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경협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2007년 말까지 남북기업간 총 999회의 사업협약이 진행되었고, 사업협약과정에 남측에서는 3,096명, 북측에서는 2,646명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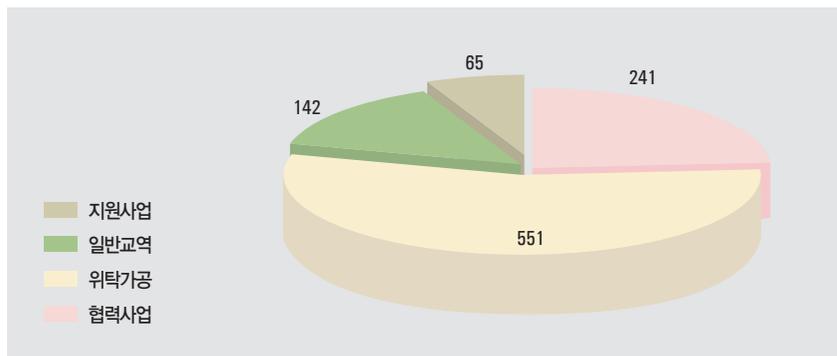
경협사무소는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남북 사무소간 협의를 거쳐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다양한 남북경협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해서는 남측기업의 대북사업 제안, 북측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가공 제품의 작업진도 파악 및 제품선적 확인 등 총 10,886건의 다양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북한 현지 공장방문이 어려운 남측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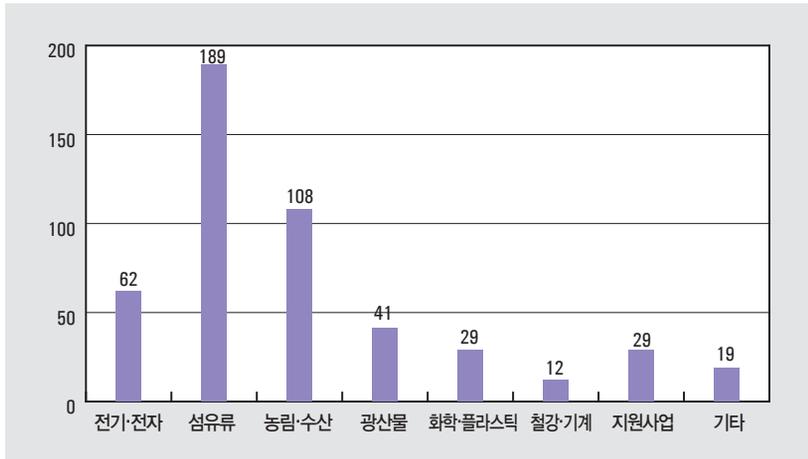
연도별 남북기업간 사업협약 현황

연 도	협약의 건수	참가인원(명)		
		남 측	북 측	합 계
2005년	43	160	111	271
2006년	446	1,396	1,149	2,545
2007년	510	1,540	1,386	2,926
합계	999	3,096	2,646	5,742

사업형태별 사업협약의 건수('05.10~ '07.12)



사업분야별 사업협의 건수



남측기업이 신규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북측 관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북측의 사업추진 의향을 경험사무소를 통해 타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남측기업이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담은 문건을 팩스 등을 통해 남측사무소로 전달하면, 남측사무소는 북측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경험사무소를 통한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



또한 2006년 5월 4일 남북 사무소간 「견본송달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종래 남측기업이 중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던 견본을 개성을 통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간 위탁가공 교역과정에서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는 견본을 육로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신속한 송달은 물론 송달비용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말 현재 167개의 남측기업이 총 676건의 견본을 북측과 교환하였다.

나아가 경협사무소에서 남북기업 실무자간 활발한 기술협의를 유도하여 남북경협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경협분야를 확대, 다변화시켰다.

둘째, 경협사무소는 남북 사무소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의류, 농산물,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대북사업 추진에 관심있는 남측기업을 경협사무소로 초청, 북측 관계자가 남측과의 경협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교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남북경협 관계자가 함께 중국 및 베트남지역 산업현장을 시찰하였으며, 5월과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상품전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농산물 교역설명회



남북경협 관계자 상해시 포동구청 방문, 포동 개발현황 청취

또한 2007년 6월에는 경협사무소에서 남북 경제단체간 교류행사를 통해 그간 개별기업 차원의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을 경제 단체 및 협회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특히 신규로 대북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경협사례발표회에 수시로 초청하여 신규기업들이 대북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도 기여하였다.

셋째, 민간기업의 사업협의를 당국간 회담과정에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협사무소 신축청사(연건평 4,498㎡)가 2007년 12월 21일 완공되었다. 신축청사는 회담장, IT 기술협의실, 봉제 기술협의실, 면담실, 상품전시관, 교육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국간 회담은 물론, 그동안 사무공간 부족에서 오던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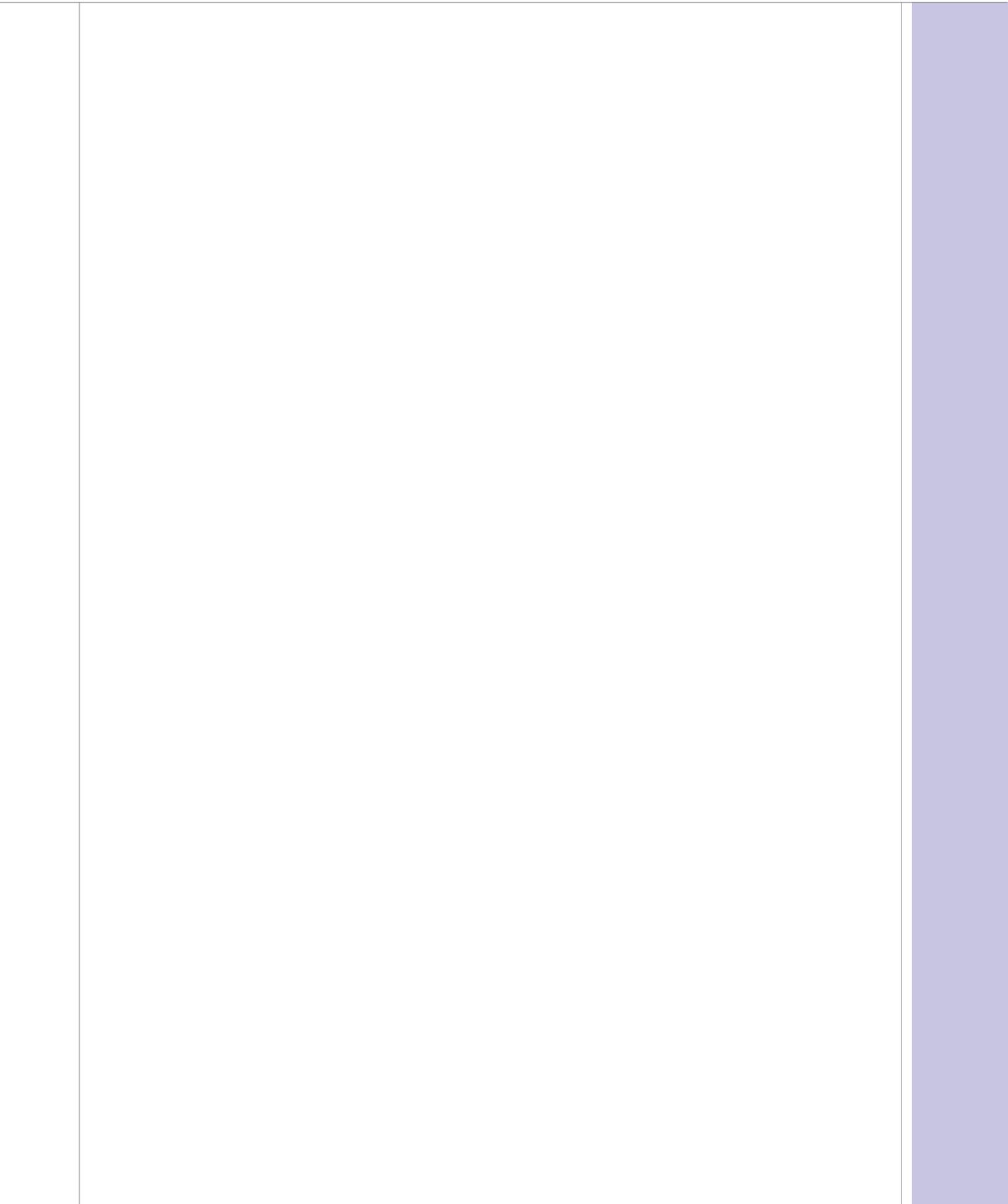
일자	주요 행사 명
4.11	농산물 교역설명회 개최
5.14~18	남북 경협관계자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공동 참관
5.15~6.7	2007년 추동북 위탁가공 상담회 개최
5.22	전기전자분야 교역설명회 개최
6.19~28	남북 경협관계자 중국 및 베트남 공동 해외출장
10.8~11	남북 경협관계자 가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공동 참관
11.15~12.7	2008 춘하북 위탁가공 상담회 개최
12.21	경협사무소 청사 준공식

--	--	--



제7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 제1절 통일교육
- 제2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 제3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 제4절 통일정책 홍보
- 제5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 제6절 통일업무 혁신



제7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남북관계 분야별 자문회의 운영, 정책고객과의 대화, 민간 통일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남북관계·북한 관련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통일 아카이브(사료관) 구축, 각종 홍보자료 발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와 조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인사 초청 간담회,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일본 등 해외 현지 설명회 개최,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절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

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해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내용 및 지도원칙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화하여 발간하고 있다.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환경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는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각급 학교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 등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상호이해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07년에는 통일환경,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 중심인 기존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요소를 접목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추진하였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평화의 개념과 평화정착 방안, 남북 사회 이질화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기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실시기반을 마련하는 차

원에서 평화교육 내용체계 정립, 시범강의 프로그램 편성, 각종 콘텐츠 개발, 실시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1. 통일교육 추진현황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문제 및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 공무원 및 사회단체 간부 등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학교교사, 청소년, 공직자, 사회민간단체 활동가, 방북예정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총 33,823명이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참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644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651명, 공직자 1,691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22,297명, 청소년 및 사회 각계 인사 4,555명이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방문 인원이 급증하면서 1994년 방북교육을 실시한 이래 최다 인원인 22,205명이 방북교육을 이수하였다.

연도별 통일교육 이수자

(단위 : 명)

분야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통일미래지도자과정	-	-	-	29	36
사회통일교육과정	1,018	1,447	1,187	955	1,644
학교통일교육과정	4,610	3,716	1,679	1,555	1,651
공직자통일교육과정	1,056	1,268	1,087	1,447	1,691
남북교류협력과정	9,152	12,996	20,401	17,444	22,297
특별과정 등 기타	1,251	1,046	1,110	2,781	4,555
원격통일교육과정	-	561	956	1,654	1,949
계	17,087	21,034	26,420	25,865	33,823

아울러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내용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치에 대한 이해, 사회통합 및 갈등해결을 강조하는 평화과목을



2007년 제3차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

신설·운영하였고, 통일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3차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3,30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각종 문화행사·공연과 접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 통일교육프로그램인 ‘남북 청소년 대화’에서는 새터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합과정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부터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700여 명으로 2007년 말 현재 방문자수 590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 대상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의 480시간보다 30시간이 늘어난 51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였

다. 이 중 장기과정(60시간, 4학점) 5회, 단기과정(30시간, 2학점) 7회 등 총 12회 1,949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교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원격통일교육을 2007년 9월 21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11월까지 통일부 직원(1, 2회 이수자 97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다. 개설강좌는 『통일 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이며, 1강좌 당 5시간의 상시학습을 인정하였다. 2008년부터 공무원 대상 온라인 통일강좌를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인터넷 웹진을 발간하여 정책고객 38,000여 명에게 PCRM(정책고객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학계인사 등의 「통일칼럼」, 남북관계 현장의 생생한 육성을 전하는 「현장에세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참여마당」, 부내직원의 북한 방문기 「평화열차」, 이 밖에 통일 소식, 자료마당 등 다양한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인터넷 웹진의 활용도 제고와 홍보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와 원내교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테마 선정, 원고 집필자 추천, 이벤트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10월에는 ‘함께가는 평화번영의 길’ (통일칼럼) 및 ‘정상회담 수행기’ (평화열차) 등 「200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배움터의 Q&A,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또한 4회째를 맞이한 「도전통일벨」 퀴즈 이벤트가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어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4,644명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50점 만점자 3명이 배출되었다.

온라인 통일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은 수요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통일과정에 대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초기 화면



하기 위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에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리더십, 변화대처능력, 통합·조정능력과 정책실무능력을 갖춘 범국가 차원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2기 과정은 2007년 2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가기관·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6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6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강의, 남북 교류현장 및 북한지역 방문·해외사례연구 등 현장체험, 협상시뮬레이션·현안문제토론회 등 참여학습, 정책과제연구,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등 소양 및 자기계발로 편성되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현업에 복귀한 후 남북관계 관련업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절차를 배우고, 남북



제2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수료식 장면

교류협력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업경험담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연구하는 등 이론과 체험학습을 병행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본교과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참여학습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훈련, 가치통합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협상 시뮬레이션, 현안문제토론회, 독서토론, 정책세미나
현장체험	현장탐방, 해외사례연구
정책과제연구	자료수집, 개인연구, 정책연구과제 지도·발표
소양 및 자기개발	소양교과, 외국어·정보화교육, 체육활동·사회봉사활동 등

이외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통일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생 통일포럼', '남북관계 현안설명회' 등 교육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일 통일교사'는 통일부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 또는 연고기관을 방문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에는 통일부

직원 108명이 1일교사로 참여하여 15,014명을 교육하였다.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현장교육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영상물 시청, 눈높이 강의, 놀이교육을 묶어서 실시하는 전문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서 총 13개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이 연구·발표·토론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 행사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대학에서 총 1,4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학생들에게 토론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 사회 통일논의 활성화 및 대학생들의 통일 지향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남북관계 현안설명회’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현안 발생시 통일부 간부,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각 지역을 찾아가 설명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총 7회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국민 설명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확대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민간 NGO 단체 및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통일교육원장 및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해당 단체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 11,90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1일 통일교사 장면

2.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판 『통일문제이해』는 「2.13 합의」 등 6자회담 진전 상황과 남북관계 발전현황 등을 수록하였고, 『북한이해』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중심으로 최신의 사진과 도표를 보완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정부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2,854개 기관에 배포·활용되었고, 40여개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교육 참고 문헌자료로는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였고,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북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을 수록한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2003년부터 통일·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북한의 의료실태』,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등 총 8종의 ‘주제강좌’를 발간하였다.

또한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등 통일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3종을 발간하였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내서인 『북한방문길라잡이』는 내금강 관광 개시, 개성공단 사업 진척 등의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한편,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실용적인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소식』을 연 2회(6월, 12월) 발간하여 일선 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사회통일교육 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시사 통일교육 자료』를 3회에 걸쳐 발간하여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최근 남북관계 현안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였다.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멀티미디어형 통일교육 자료를 다수 제작하였다. 이산가족을 소재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그린 『가자미의 눈물』과 꿈에서 접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린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등 통일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교육청과 일선 중등학교에 보급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게임을 통한 남한 소녀와 북한 소년의 만남을 그린 만화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을 제작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장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해설한 영상자료 『준이의 통일여행』을 영어판과 일어판으로 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동포사회에 보급하였다. 학교통일교육용 애니메이션 『가자미의 눈물』의 수화·자막삽입본은 특수학교 등에 배포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07년에 발간한 총 27종의 문헌·영상자료는 일선 통일교육 현장뿐 아니라 웹상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인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DB화한 ‘통일교육자료방’을 연중 운영하여 발간자료 e-book, 관련 문헌, 사진, 동영상 등 201건의 자료를 게재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자료방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청각 장애인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웹사이트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RSS(Rich Site Summary) 등 편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자료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3.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 400명

으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 중학교 10, 고등학교 5 등 총 18개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남북관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고교생과 통일교육 담당교사 16,3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학생통일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총 147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38명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 시상하였다.

한편 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교육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6회에 걸쳐 광주, 천안, 금강산, 대전에서 1,220여명의 초·중·고 교장과 교감, 통일교육교사, 장학사 및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진단하는 계기를 가졌다. 2007년 12월에는 학교통일교육 전문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현장에서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실천방안」을 주제로 「통일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7년 말 현재 민화협,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6개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9	원주시민센터
2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50	자주 평화통일민족회의
3	경실련 통일협회	5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4	교육복지연구원	52	정신개혁시민협의회
5	굿네이버스	53	좋은벗들
6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54	천도교청년회 중앙본부
7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55	초록생명평화센터
8	남북문화교류협회	56	통일건국민족회
9	남북문화통합교육원	57	통일교육문화원
10	남북사랑나눔기협의회	58	통일교육연구원
11	남북사회문화연구소	59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12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60	통일맞이
13	남북청소년교류연맹	61	통일민주협의회
14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62	통일시대 충북연대
15	다물민족연구소	63	통일안보교육협의회
16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64	통일여성안보중앙회
17	대한기독교자유연맹	65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18	대한민국팔각회	66	평화네트워크
19	대한불교청년회	6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	대한YWCA연합회	68	평화문제연구소
21	동신대 동북아연구소	69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22	동학민족통일회	70	평화통일복지협의회
23	민족문제연구소	71	평화통일시민연대
24	민족문화교류재단	72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73	한국가족문화원
2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7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27	부산여성회	75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28	부천시민연합	76	한국대인지퇴대책회의
29	북방문제연구소	77	한국대학원리연구회
30	북한문제연구협의회	78	한국여성단체연합
31	북한연구소	7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2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80	한국자유총연맹
33	새마을운동중앙회	81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4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82	한국통일교육학회
35	세계평화여성연합	83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36	세계평화청년연합	8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37	세계평화통일학회	85	한국통일진흥원
38	수원여성회	86	한국YMCA전국연맹
3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87	한민족복지재단
40	안산통일포럼	88	한민족복지협의회
41	어린이어깨동무	89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42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90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43	여성사회교육원	91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44	열린사회시민연합	92	한민족통일촉진협회
45	영세중립통일협의회	93	한반도평화운동본부
46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94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4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5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48	원불교청년회 평화의친구들	96	KYC한국청년연합회

2007년에는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차원에서 통일교육포럼, 통일교육사례발표,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시민·청소년·정책개발 등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통일대토론회」,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청소년통일영상제」 등의 대상별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통일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대상 「열린시민통일교육포럼」, 「대학생생명평화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단체(5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217회의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	단체명
영남(3)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대구·경북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
충청(2)	대전	대전통일교육협의회
	충남·충북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
호남(2)	광주·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전북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강원(2)	강원 동부지역	통일아카데미 설악수련원
	강원 서부 지역	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제주(1)	제주	제주대(평화연구소)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153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이들 위원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청 연찬교육 실시(2회), 통일대화의 광장 행사(1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자료 제공,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전국 12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통일관련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학생층을 중심으로 총 309만여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방송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하고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방송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통일·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워크숍'을 2007년 12월에 개최하였다.

제2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목할만한 정책변화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실상과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흐름을 예측하는데 주력하였다.

2007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1,427건의 정보·분석보고서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여 대북정책의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워크숍,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분석·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간영역의 확장에 따라 급증하는 민간분야의 북한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317건의 정보자료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였으며, 886건의 정보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북한방송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주간 북한동향』 및 『월간 북한동향』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정기발간하여 북한의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였다. 특히 책자배포 방식을 보완하여 전자메일 발송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정보자료를 적시에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분야별 변화 동향을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구조 및 인물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인물들의 세부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서비스하였다.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및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자료 지원 및 교류 등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북한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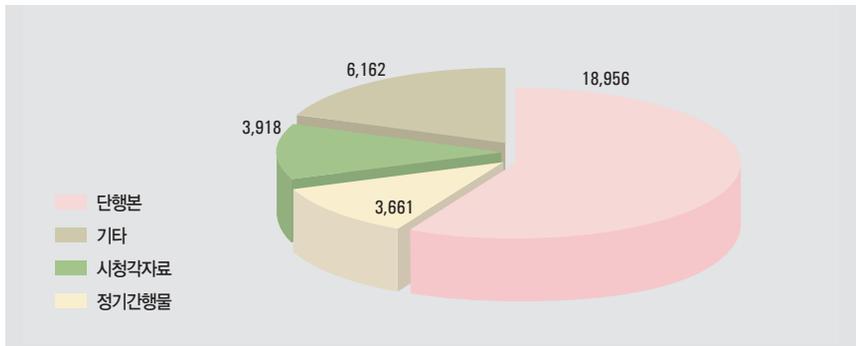
렵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EU 등 관련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북한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정보교류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실상 등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3천여 권, 정기간행물 9천여 권, 세미나자료 3천여 건, 시청각자료 7천 1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6천 4백여 건 등 총 9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단위: 건)



「북한자료센터」는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총 37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4,810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북한실상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 2007년 12월말까지 총 441회를 개최하였으며 36,884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상영하고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인천·창원·제주·부산·광주·청주 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81회 상영하여 145,157명이 관람하였다. 1990년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531회에 걸쳐 총 1,009,374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북한 교과서, 예술영화 등 비이념성 북한자료 1,300여 건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자료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04년), 그리고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2005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2006년)하였다. 2007년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평화문제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07년 12월 말 현재 총 11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3회 「세계책나라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도서관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주민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백두산 배경으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2006년 8월 세계 도서관계 최대행사인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서울대회 기간 중 북한자료센터 주관으로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방문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제1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를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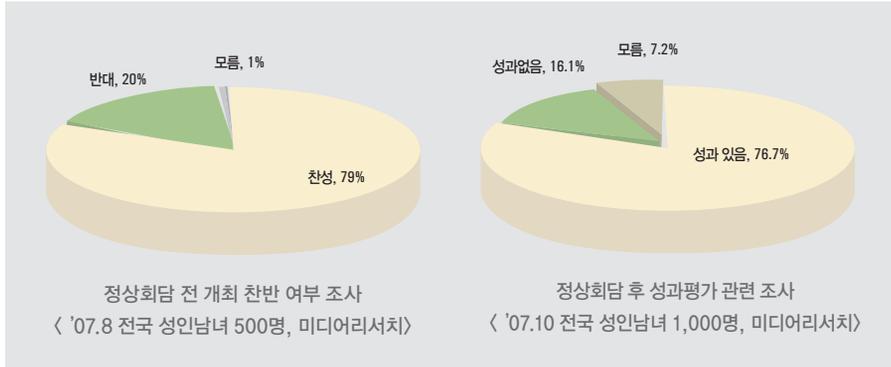
한편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고객 중심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자료 1,000여건을 E-Book으로 제공하였다.

제3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정부는 통일·대북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통로확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져 총 80여 회의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 여론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의견수렴의 범위와 방식도 다양화하여 각계 지도층 및 전문가 회의, 모바일·여론조사·홈페이지를 활용한 의견수렴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국회, 언론, 자문·평가위원 등과의 회의·간담회 30여 회,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 15회, 각국 대사 등 국제사회 관계자와의 면담·간담회 16회, 그 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종 회의가 20회 이상 개최되었다.

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법정 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



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9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8명 중 4명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5명 중 14명이 각각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과 참여확대를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통일정책 모니터링'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 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현장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현재 38,000여 명의 마일리지 회원들이 홈페이지의 '이슈토론방',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등의 코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마일리지 회원과 정책고객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고객이 제공받던 뉴스레터, 정책자료 등을 마일리지 회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일리지 회원을 포함한 정책고객 50여 명에게 금강산 현장 견학, 대북지원 인도인수 현장 방문 등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연구원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문가,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대북정책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 의뢰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당초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100명에서 시작하였으나 2006년부터 전문가 및 대북정책·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 고객 700명과 일반국민고객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하였다. 북핵문제 해결, 경협사업 확대, 회담의 제도화 등 2007년 한 해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반여부, 성과 평가 등 중요한 현안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고객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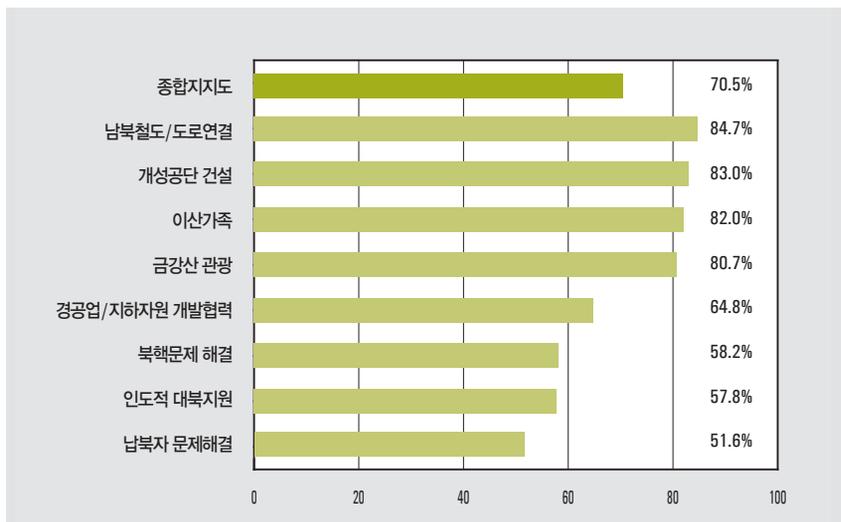
국민 여론수렴 활동은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통일부 장·차관 및 팀장급 이상의 당국자들이 여러 분야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장·차관과 간부들은 언론사와 학계의 남북문제 전문가 그룹은 물론 대북문제 관련 단체나 업체 관계자 등을 수시로 만나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현안 및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고객 관리를 강화하여 통일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자,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과 수시로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 각 분야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74명)와 통일정책평가회의(25명)는 군사안보·국제관계·남북경제·법제관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총 2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반적인 통일의식 조사와 대북정책 지지도 평가 외에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와 관련한 조사 등 총 3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신뢰성 제고, 심층 질문 등을 위해 기존 전화조사에서 면접조사로 조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대북 정책 지지도('07.8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미디어리서치)



한편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에는 20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총 213개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지역순회 통일포럼 등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고 통일문제와 현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제4절 통일정책 홍보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30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차관이 49회의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일 대변인이 「데일리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주요언론 인터뷰와 방송 등에 출연(72회)하여 대북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였다.

2007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각종 남북회담 및 행사시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e-브리핑 활용, 외신프레스킷 제공 등 내외신 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였다. 해외언론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에 대한 취재도 지원하여 남북경협 현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에 「통일부 생생뉴스」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국정브리핑 「통일부뉴스」(unikorea.korea.kr)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전달하였다.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www.unikorea.go.kr)는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중요한 포털사이트로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일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에도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2007년은 남북간에 많은 회담과 행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자료들이 제작되었다. 『평화를 향한 질주 4년』은 수목화 일러스트 등의 비주얼을 통해 참여정부 4년간의 대북정책 성과를 소개하였다. 「2007 남북정

통일부 운영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부 생생뉴스, 정책자료, 북한동향, 국민참여, 전자민원, 통일부 소개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통일정보, 자료실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참여마당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회담소식, 회담 자료실, 남북합의서 참여마당, 판문점, 회담검색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새소식,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개성공단
사이버통일교육 센터	www.uniedu.go.kr	원격통일강좌, 교육과정안내, 참여마당, 사이버통일 교육, 청소년통일배움터

사회담」 홍보책자 『더불어』는 총 60만부를 발간하여 통일부 정책고객은 물론 초·중·고, 지방자치단체, 병원, 은행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2007남북정상회담」의 주요장면들을 편집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 블로그, 판도라 TV 등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고 각종 시청각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홍보를 위한 사진집, 리플렛,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5.17)과 남북화물열차 개통(12.11) 홍보 영상물을 전국 95개 전광판에 표출하였다.

2006년도 블로그 동영상 공모전에 이어 2007년에도 ‘통일부 UCC 홍보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대북정책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만든 홍보영상물을 통일부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인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5,000여 명의 정책고객에게 남북관계 주요현안 및 남북회담 소식과 해설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고객의 수요에 맞춘 특화된 뉴스레터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통일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구분	수상작	수상자
최우수상	우리는 같은 하늘에 사는 가족입니다	한윤국
우수상	북한의 동포들,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평화, 나누지 않기 다섯글자	윤광석 임정섭 신혜원
장려상	만들레의 노래 통일염원 자작곡 통일을 생각합니다 평화를 외치다 둘이 하나 되는 이야기	김정수 이민경 김상수 허용 김철희, 김정은



통일부 뉴스레터



영문 뉴스레터



주간 북한 동향



개성공단 뉴스레터



회담 합의서 등 현안 자료



통일교육 웹진

제5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하여 왔다. 주요국과의 정책협회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협력의 선순환 방안, 북미·북중 관계 등 주변국의 대북 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발전방안,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남북관계 추진방안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공통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이 추진되는 전후에 통일부장관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를 만나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남북관계 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2007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외국 인사로는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 힐(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시오자키 일본 전 관방장관, 야마사키 타쿠 등 일본 의원단, 퍼커(Hubert Pirker) 의원 등 EU 「한반도친선협회」 의원단, 코쾅(Hartmut Koschyk) 의장 등 「한독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니더비저(Erwin Niederwieser) 등 오스트리아 의원단 일행 등이 있다.

2007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총 10회의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 남북관계 진행상황, 북핵문제 추이, 주변국 대북정책 변화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시기와 지역에 걸맞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국 정부관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1~2일간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통일전략대화」추진시 미국의 국무부·NSC, 중국의 외교부, 일본의 공안조사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추진상황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외국인 정책고객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 주요 현안 브리핑, 개성공단·금강산 등 현장방문, 주요국 현지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주요 계기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브리핑을 실시하고 모든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담 경과와 합의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각국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금강산·개성공단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이들에게 남북 관계 진행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에 실시한 주한 공관 외교관의 금강산 방문 및 남북관계 워크숍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6개 국가 주한 외교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한 특별수행원들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파견하여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의회 보좌관단, 한·미 의회 청년교류사업 미국대표단 등 통일부를 방문하는 다양한 외국인 그룹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통일부장관과 남북 겸임대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평양클럽」을 결성하였다. 현재 캐나다·이탈리아·EU 등 15개국 대사가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평양클럽」은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차원에서는 남북경협에 관심있는 주한공관 외교관들로 「금강클럽」을 결성하여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함께 방문하고 수시로 만나 남북경협,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금강클럽」은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16개국 주한 공관 외교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 정책토론, 친선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쌓아 나가고 있다.

또한 방한 외국인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초청하여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인터내셔널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국무부 전직 관계관, 핵전문가,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일본 오사카 시립대 교수,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하여 ‘남북관계와 6자회담 프로세스’, ‘동북아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 ‘북한 핵폐기 및 검

증방안',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 '북·일관계 전망' 등의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현지에서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미국 2회, 일본 3회, 중국 5회 등 총 10회가 개최되었다. 연구모임은 미국의 경우 KEI, CRS, CSIS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대북 정책 변화 전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북경대, 중앙당교, 당 대외연락부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7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론회」('07.12.10~14)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 등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과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평가와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7개 동포사회의 신문과 방송에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2007 무궁화 문예콩쿨」 등 7개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통일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6절 통일업무 혁신

통일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촉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연간 국내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가 2002년 1,000명을 넘었고, 4년 뒤인 200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새터민들의 우리사회의 안정적 정착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에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새터민들의 취업현황, 직장 적응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새터민 정착지원의 첫 출발점인 하나원이 새터민의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취업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직자 재교육을 새터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터민들도 노동부의 취업DB에 등록하여 구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원 교육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하나원 퇴소 후 1년 뒤 종료되는 정착도우미 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주도우미' 제도를 2007년 6월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터민 교육 만족도

구성항목	'06년	'07년	전년대비 향상도
교육필요성	90.5%	94.7%	4.25%
교육내용 만족도	85.1%	87.0%	1.9%
강사 만족도	91.8%	91.8%	0.3%
교육내용 이해도	83.3%	170%	170%
평균 교육만족도	87.6%	89.7%	89.7%

*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박사가 '06년과 '07년 하반기에 각기 조사

한편 새터민 자녀들은 대부분 같은 나이의 남한 학생들에 비해 학력 격차가 심하며, 학교 중도탈락률이 남한 학생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에 새터민 청소년 전문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집중심화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대학 진학률과 취업

를 등에서 점차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각종 남북대화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일아카이브' (통일사료관)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통일 관련 기록물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통일사료관리팀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통일사료관리팀은 남북대화 관련 각종 자료들을 새로 구축된 '통일아카이브' 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한편, 통일사료의 발굴과 수집, 보존과 관리 및 사료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또한 남북 관계가 심화·발전되어 감에 따라 전문 인력의 확보와 유연한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구조를 도입하였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어 신규 업무량이 가중되자 개성공단 개발지원 업무, 전략물자 판정 등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약 80명의 인력추가 소요를 절감하였다.

한편 남북회담이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 대비 연평균 약 350%로 폭증하고, 남북한간에 합의된 사업에 대한 현지공동조사가 증가하면서 예산과 인력 등에서 과부하가 발생하였다. 통일부는 이러한 업무현실을 타개하고자 부처간 중복적인 업무수행, 과도한 상황대기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상황실 통합운영, 대기인력 축소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	--	--

부 록

I. 2007 남북관계 주요 일지

II. 남북관계 주요 통계

1. 남북 인적·물적왕래 현황
2. 남북 교역 현황
3.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4. 대북지원 현황
5. 이산가족 교류 현황
6. 새터민 관련 현황
7. 남북회담 개최 현황

III. 2007 남북관계 주요 합의서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I. 2007 남북관계 주요일지

- 1.16 통일부-대한적십자사간 인도적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 1.31 개성공단 총 생산액 1억불 달성, 방문인원 10만명 돌파
- 2.8~13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베이징)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초기조치) 발표
- 2.13 2008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개성)
- 2.15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접촉(개성)
- 2.15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대북 전략물자(기술포함) 사전판정 업무 위탁 협약체결
- 2.27~3.2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3.9~10 이산가족면회소건설추진을 위한 제6차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금강산)
- 3.14~15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3.19~22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베이징)
- 3.20~4.20 북한 청소년축구팀 방남 전지훈련(제주, 수원, 순천, 광양, 서울)
- 3.21 이산가족면회소 공사 재개(금강산)
- 3.27 비료 30만톤 대북지원 착수
- 3.27~29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3.30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개성)
- 4.6~9 북한 장웅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겸 IOC 위원 및 태권도시범단 방남

- 4.10 제4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개성)
- 4.10~13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4.18~22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평양)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채택
- 4.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 4.27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공포
- 4.27~28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1차 실무접촉(개성)
- 5.2~4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개성)
- 5.8 북한지역 산림병충해 방제지원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개성)
- 5.8~11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통일각)
- 5.9~14 제15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 5.13 제13차 남북 철도·도로연결 2차 실무접촉(개성)
 - 「남북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합의서」 채택
- 5.17 남북 철도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문산-개성, 제진-금강산)
- 5.22~23 제3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개성)
- 5.25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8.26 발효)
- 5.26 개성공단 송전방식(154kV, 10만kW)의 전력공급 시작
- 5.29~6.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6.1 금강산 내금강 관광 개시
- 6.7~8 제1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6.8 제29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 6.12~13 개성공단건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3차 실무접촉(개성)
- 6.14~17 6.15 공동선언 7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개최(평양)
- 6.21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10만kW)공급용 평화변전소 준공식
- 6.29~30 중유 5만톤 대북공급을 위한 실무접촉(개성)
- 6.30 식량(쌀)차관 40만톤 대북지원 착수
- 7.5~7 제2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이행합의서」 채택
- 7.10 제30차 남북군사실무회담(통일각)
- 7.12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대북 중유 5만톤 지원 착수
- 7.16 제3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 7.24~26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 7.25 경공업 원자재 대북지원 착수
- 폴리에스터 단섬유 500톤 인천항에서 첫 출항
- 7.26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 7.28~8.18 제1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 8.5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비공개 합의
- 8.7~8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회의(평화의집)
- 8.7~11 제1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평양소재 4개공장)
- 8.8 국가안전보장회의, 「2007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결·발표

- 8.13~14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8.1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및 분야별 실무접촉(개성)
- 8.16~17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선양)
- 8.18 남북정상회담 개최 연기 발표
- 8.23 대북 수해복구 긴급구호물자 및 자재·장비 지원 착수
- 8.24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 9.1~2 6자회담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회의(제네바)
- 9.18~21 남북정상회담 제1차 선발대 방북
- 9.2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 9.27~30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베이징)
- 9.27~10.1 남북정상회담 제2차 선발대 방북
- 9.30 개성공단 총생산액 2억불 달성
- 10.2~10.4 남북정상회담(평양)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발표
- 10.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10.3합의」(제2단계 조치) 발표
- 10.11~19 美 북핵 불능화팀 방북
- 10.16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준공
- 10.17~22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금강산)
- 10.20~11.7 제2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 10.2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10.23~27 제2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평양 소재 4개 공장)
- 10.26 제1차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1차 예비접촉(개성)
- 10.31 개성공단 월생산액 2천만불, 월수출액 4백만불 돌파
- 11.3~7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1차 현장실사(남포·안변)
- 11.5 「남북피해자 지원단」 사무실 개소
- 11.5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개성)
- 11.8 경공업 원자재 1차 대가상환을 위한 남북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11.9 제1차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예비접촉(개성)
- 11.11 제1차 남북총리회담 준비를 위한 3차 예비접촉(개성)
- 11.12 제3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통일각)
- 11.14~15 제7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 11.14~16 제1차 남북총리회담(서울)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채택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1.20 제3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 11.20~21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1.24 제34차 남북군사실무회담(평화의 집)
- 11.27~29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평양)
- 11.27~12.1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
- 11.27~12.1 남북농업협력(양돈)사업 북한 현장답사(평양)

- 11.28~29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실무접촉(개성)
- 11.28~30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11.29 「제1차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고시
- 11.29~12.1 북한 김양진 통전부장과 6명 방한
 - 남북정상선언 이행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협의 및 남북 협력사업 분야의 현장 시찰 목적
- 12.1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제1차 회의(개성)
- 12.4~6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제1차 회의(서울)
 - 회담기간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예비접촉(12.4)
- 12.4~8 제3차 기술지원단 북한 경공업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평양 소재 4개공장)
- 12.5 개성관광 개시
- 12.5 제35차 남북군사실무회담(통일각)
 -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
- 12.7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사무소 남북 사무소 준공식
- 12.10 경의선(도라산)물류센터 준공식
- 12.11 문산-봉동간 남북 화물열차 정기운행 개시
- 12.11~13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1차 남북 공동 현지조사
- 12.12~14 제7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보장 합의서」 채택(12.13)
- 12.12~18 개성-신의주 구간 철도 개보수 제1차 현지조사
- 12.13 통일부, 새터민 취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취업 연계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노동부 안양지청, 현대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CJ푸드빌)

- 12.13~14 경공업 원자재 2차 대가상환을 위한 이행기구간 실무협의(개성)
- 12.14 경공업원자재 대북차관 1차 상환광물(아연괴 498톤) 인천항 도착 및 하역 완료
- 12.14~15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15~18 남북 조선협력단지 제2차 현장실사(남포·안변)
- 12.16 대북에너지 설비·자재 긴급제공 착수(포항항→남포항)
- 12.17~18 제1차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개성)
- 12.18 제2차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개성)
- 12.20~2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20~21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20~26 제3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남북 공동조사
- 12.21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청사 준공식(개성)
- 12.21~25 남북 농업협력사업 현지조사(평양, 황남 은율군)
- 12.21~27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제2차 남북 공동현지조사
- 12.25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개성)
- 12.25~28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부산)
- 12.28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관련 실무접촉(개성)
- 12.28~2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개성)
- 12.31 경공업 원자재 대북차관 2차 상환광물 인천항 도착 예정(* '08.1.4 도착)
- 12.3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출범

Ⅱ. 남북관계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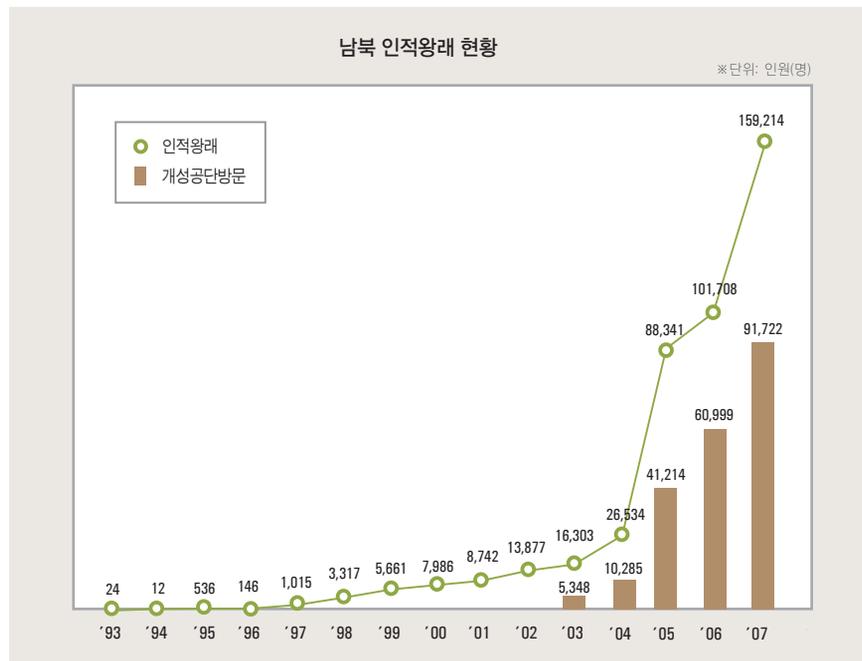
1. 남북 인적·물적 왕래 현황

① 남북 인적왕래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남→북	2,405	3,317	5,599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427,506
북→남	575	0	62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7,157
합계	2,980	3,317	5,661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434,663

※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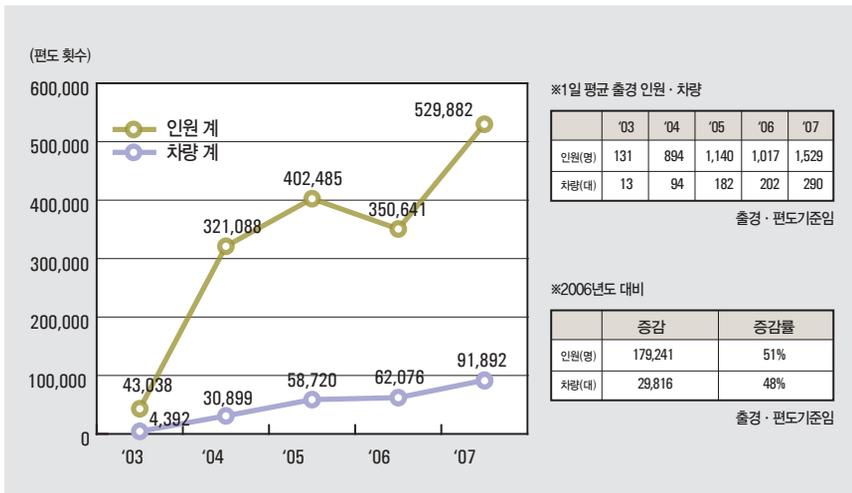


② 금강산 관광객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명

연도	'98.11~'12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734,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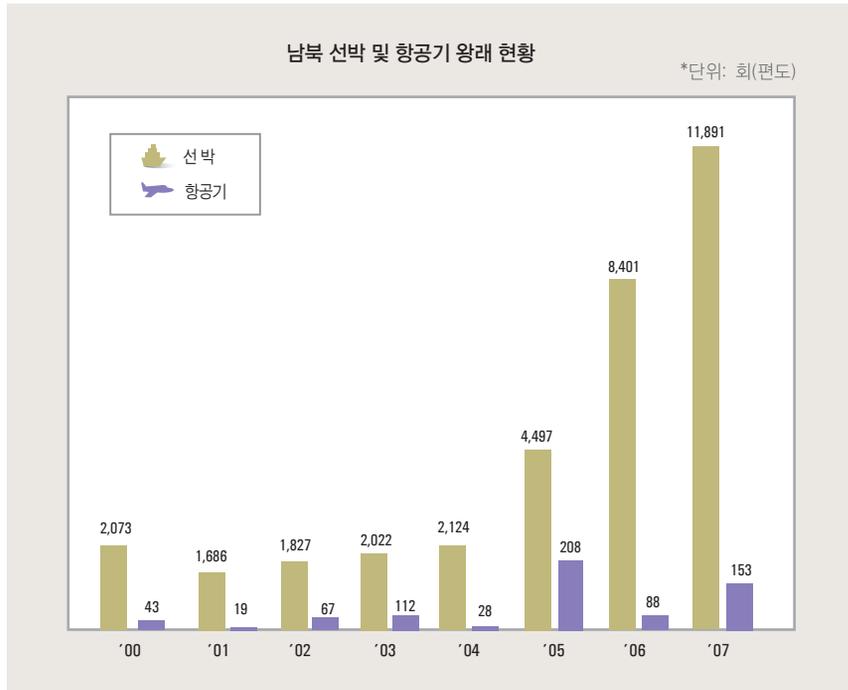
③ 육로출입 현황



④ 남북간 선박 · 항공기 왕래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회(편도)

연 도	'94~'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선 박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37,920
항공기	-	43	19	67	112	28	208	88	153	718



2. 남북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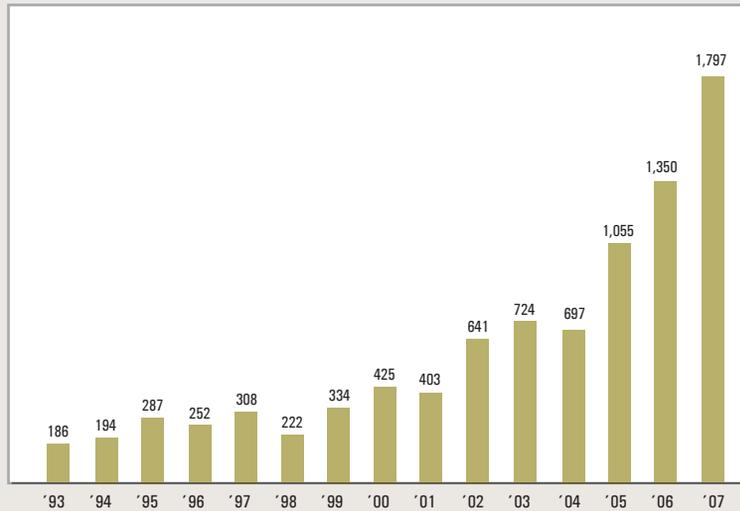
① 남북교역 규모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달러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반출	.	2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4,957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176	272	289	258	340	520	765	4,238
계	19	14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9,195

연도별 남북 교역액 추이

*단위:백만달러



② 교역업체 및 품목 현황

● 교역업체 및 품목

2007.12.31 기준, 단위: 건

연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업체	56	77	121	136	236	319	356	419	516	536	506	432	481	462	523	477	425
품목	57	92	103	158	244	258	365	449	488	578	549	572	588	634	775	757	853

● 위탁가공 업체 및 품목

2007.12.31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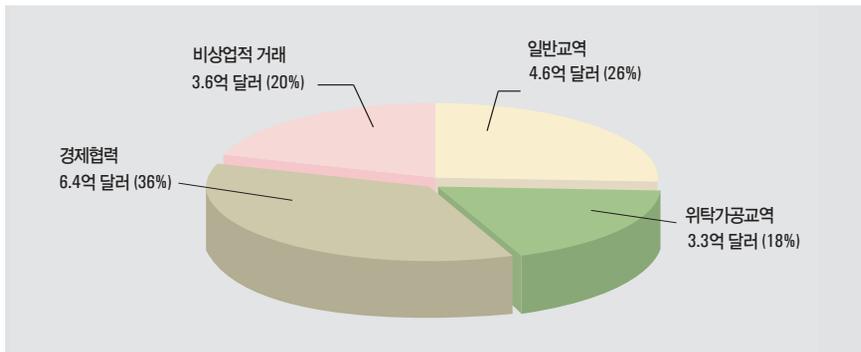
연 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123	89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248	166

③ 유형별 남북교역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백만달러

구 분	남북교역 유형	2004	2005	2006	2007
반 출	일반교역 · 위탁가공	89	100	116	145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기타)	89	250	294	520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	261	366	421	367
	반출 총계	439	715	830	1,032
반 입	일반교역 · 위탁가공	258	320	441	645
	경제협력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 기타)	0	20	77	120
	비상업적 거래 (정부 · 민간 지원/사회문화협력/경수로사업)	0	0	1	0
	반입 총계	258	340	520	765
남북간 실질교역 수지(경제협력, 비상업적 거래 제외)		-168	-221	-326	-500

2007년도 남북교역 거래유형



3.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① 가동기업 수 및 생산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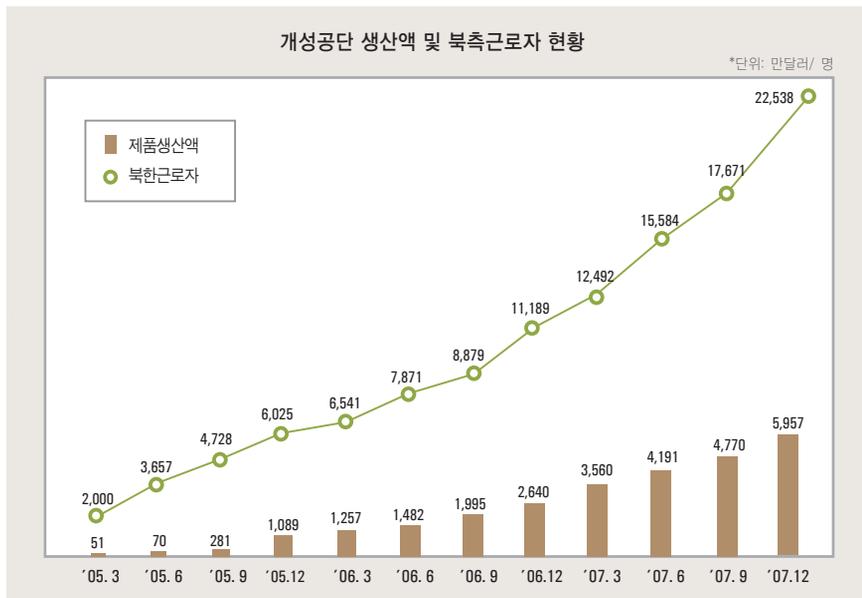
2007.12.31 기준, 단위: 개수/ 만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계
가동기업 수	11	30	65	65
생 산 액	1,491	7,374	18,478	27,342
수 출 액	86	1,983	3,967	6,036

②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05	2006	2007
북측 근로자	6,025	11,189	22,538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합 계	6,515	11,951	23,323



③ 개성공단 출입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명, 대

구 분	2005	2006	2007	합계
인 원	40,874	59,553	91,722	192,149
차 량	19,413	29,807	42,399	91,619

4. 대복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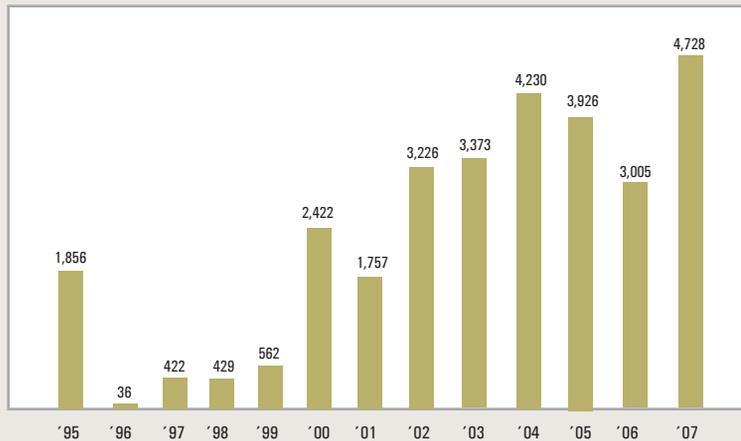
① 대복지원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정부 차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1,313	1,360	2,296	2,159	13,929
	식량차원	-	-	-	-	-	1,057	-	1,510	1,510	1,359	1,787	-	1,649	8,872
	계	1,854	24	240	154	339	2,035	975	2,650	2,607	2,672	3,147	2,296	3,808	22,801
민간차원(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1,558	779	709	920	7,171	
총 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4,230	3,926	3,005	4,728	29,972	

인도적 대복지원(민간차원 포함)

*단위: 억원



②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톤/억원

연도	2000	2002	2003	2004	2005	2007	계
지원실적	외국산쌀 30만톤 중국산옥수수 2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국내산쌀 10만톤 외국산쌀 30만톤	국내산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국내산쌀 15톤 외국산쌀 25만톤	쌀(국내외) 240만톤 옥수수(중국산) 20만톤
남북협력기금	1,057억원	1,510억원	1,510억원	1,359억원	1,787억원	1,649억원 (의결기준)	8,872억원
지원기간	'00.10~'01.3	'02.9~'03.1	'03.7~'12	'04.7~'05.2	'05.7~'06.2	'07.6~'12	

③ 대북 비료지원 현황

2007.12.31 기준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규모(만톤)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금액(억원)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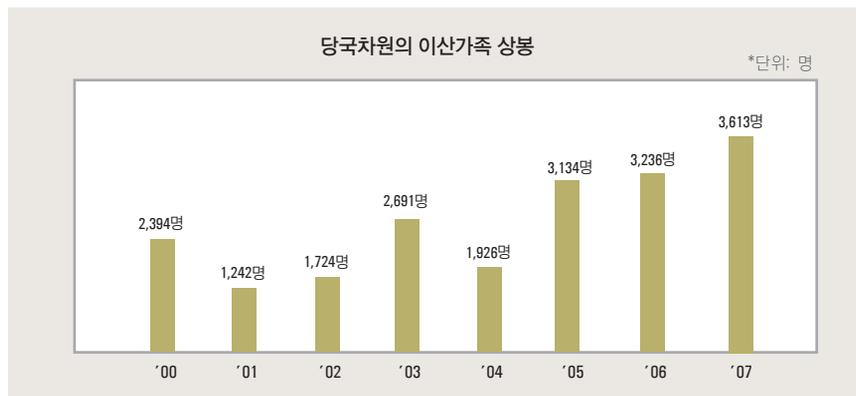
5. 이산가족 교류 현황

① 남북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연도별	'85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민 간 차 원	생사 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89	3,756
	서신 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413	11,093
	제3국 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383)	165 (471)	203 (592)	280 (662)	187 (465)	94 (256)	50 (86)	53 (164)	1638 (3,079)
	방북 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1 (5)	30 (124)
당 국 차 원	생사 확인	65 (157)											792 (7,543)	744 (2,670)	261 (1,635)	963 (7,091)	681 (5,007)	962 (6,957)	1,069 (8,314)	1,196 (9,121)	6,579 (48,338)
	서신 교환												39 (39)	623 (623)	9 (9)	8 (8)	-	-	-	-	679 (679)
	방남 상봉	30 (81)											201 (1,720)	100 (899)	-	-	-	-	-	-	331 (2,700)
	방북 상봉	35 (76)											202 (674)	100 (343)	398 (1,724)	598 (2,691)	400 (1,926)	397 (1,811)	594 (2,683)	388 (1,741)	3,112 (13,669)
	화상 상봉																	199 (1,323)	80 (553)	278 (1,872)	557 (3,748)

※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2007.12.31 현재) : 126,787명 등록 (사망 33,300명 / 생존 93,4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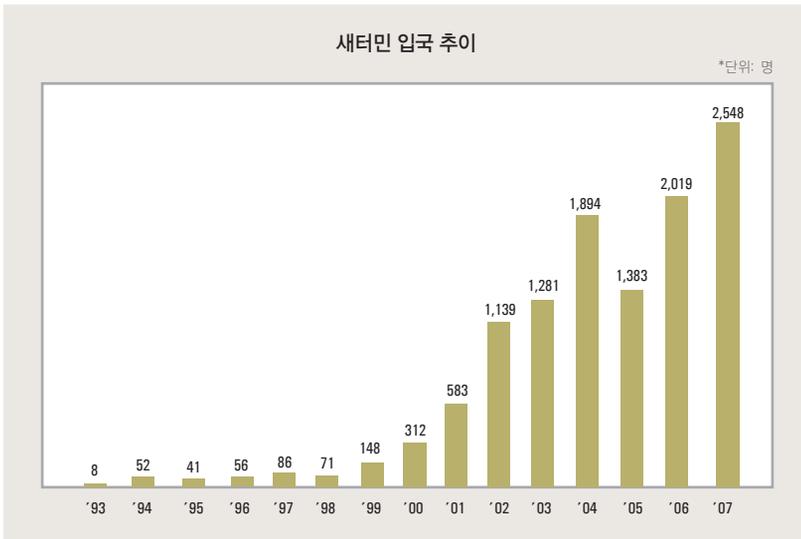
6.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관련 현황

① 새터민 입국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89이전	'90~'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남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510	569	4,503
여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09	1,979	7,751
합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2,548	12,254

※ 새터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②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만원

	'01	'02	'03	'04	'05	'06	'07
업체수	226	274	240	218	323	378	564
인원	251	296	310	269	446	497	728
총지급액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7. 남북회담 개최 현황

① 분야별 남북회담 현황

2007.12.31 기준,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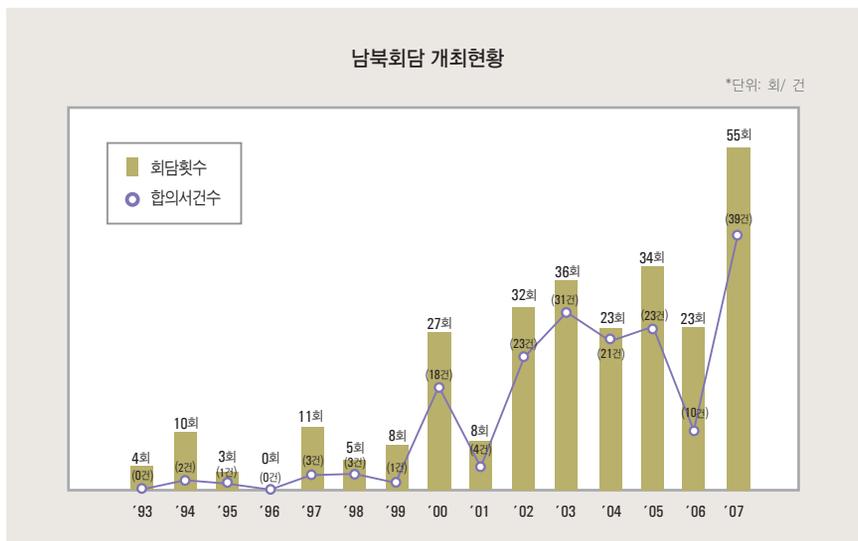
구분	'71-'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계
정치	156	4	10			7	4	8	18	2	4	5	2	10	5	13	248
군사	0								4	2	9	6	5	3	4	11	44
경제	5								3	3	14	17	13	11	8	22	96
인도	111			3		4	1		2	1	3	7	2	4	3	3	144
사회문화	34										2	1	1	6	3	6	53
합계	306	4	10	3	0	11	5	8	27	8	32	36	23	34	23	55	585

※ 정치(장차관급 회담) / 군사(장성급·군사실무회담) / 경제(경제협력추진위) / 인도·사회(적십자·체육회담)

② 남북회담 합의서 채택건수

2007.12.31 기준, 단위: 건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의서 건수	0	2	1	0	3	3	1	18	4	23	31	21	23	10	39



II. 2007 남북관계 주요합의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변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변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	방 위 원 장
노	무	현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변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변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 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 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 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작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 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공
한	덕	수				김		영	일		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보수의 범위와 공동이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의 범위와 추진방향, 공동이용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열차이용을 위한 철도 긴급보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문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의 선박블록공장 건설과 남포지역의 영남배수리공장 현

대화 및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위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11일부터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북측은 현지조사와 관련한 전력시설, 근로인력 보장 등에 관한 자료와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제1차 회의를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제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필요한 북측 근로인력의 충원에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도로건설과 이용, 문산-개성간 통근열차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위한 측량과 지질조사를 12월 17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하도록 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자하차장을 건설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지하자원 등 자원개발협력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남북자원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1월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단천지역의 광산 투자협력과 관련한 제3차 현지 공동조사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분야의 협력사업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과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검역 및 방역, 유전자원 교류 및 공동연구, 농업과학기술 교류 등 협력사업을 2008년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품종개발, 양식협력사업 등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농업 및 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기로 하고, 약솜공장 건설을 우선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

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출입·체류·통신·통관, 청산결제, 상사중재 등 투자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2008년 4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8조 남과 북은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9조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0조 이 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6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권오규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부총리 전승훈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적대감 조성행동을 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군사관계 문제를 상호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2004년 6월 4일 합의를 비롯하여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충돌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수정·보완하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사이에 이미 마련된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고, 협상통로들을 적극 활용·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보장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전쟁시기의 유해발굴문제가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과 관련된 문제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대하여 즉시적인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공동어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별도로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 설정과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금강산지역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도록 2007년 12월 11일부터 개시되는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2007

년 12월초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협의·채택하기로 하였다.

- ④ 쌍방은 백두산 관광이 실현되기 전까지 직항로 개설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로 하였다.

- 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8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②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되는데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7. 본 합의서는 쌍방 국방부장관이 서명하여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① 이 합의서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② 이 합의서는 각기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7년 11월 29일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국	방	부	장	관	국	방	위	원	회	인	민	무	력	부	장
김		장		수	조	선	인	민	군	차	수	김	일	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지역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문제

나.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착공식을 진행하는 문제

라.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업지구와의 보완적인 관계를 실현하는 문제

마.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이를 완비하는 문제 등

②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2008년 1월 31일경에 실시하

기로 하고 북측은 자료제공과 시설 방문 등 제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1월 합의되는 날짜에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조사단의 방문경로와 인원·조사방법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해주항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주경제특구에 대한 현지조사와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내에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가. 현지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문제

나. 해주항 개발을 해주경제특구 개발 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문제

다. 현존 부두 개보수와 항로확보, 단계별 부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착수 시기와 방안을 확정하는 문제 등

제3조 남과 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서해공동어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확정하는 문제
-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문제

③ 공동어로구역을 남북 공동의 이익과 평화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관리운영하는 문제

④ 서해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유통·수산분야 기술교류를 비롯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는 문제 등

제4조 남과 북은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이용해 나가기 위하여 2008년 상반기내에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① 한강하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문제

② 공동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협의·확정하며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는 문제

③ 한강하구 시범골재채취 등 공동이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설적인 공동이행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④ 한강하구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

제5조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제6조 수정 및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9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남측위원장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백종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북측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상
박송남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양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 울

--	--	--

2008 통일백서

UNIFICATION WHITE PAPER

발행일 | 2008년 2월 15일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 | 02) 2100-5921 팩 스 | 02) 2100-5926

인 쇄 | 로마기획인쇄 02) 2266-2017

디자인 | 다해미디어 02) 722-7123

www.unikorea.go.kr



MINISTRY OF UNIFICATION